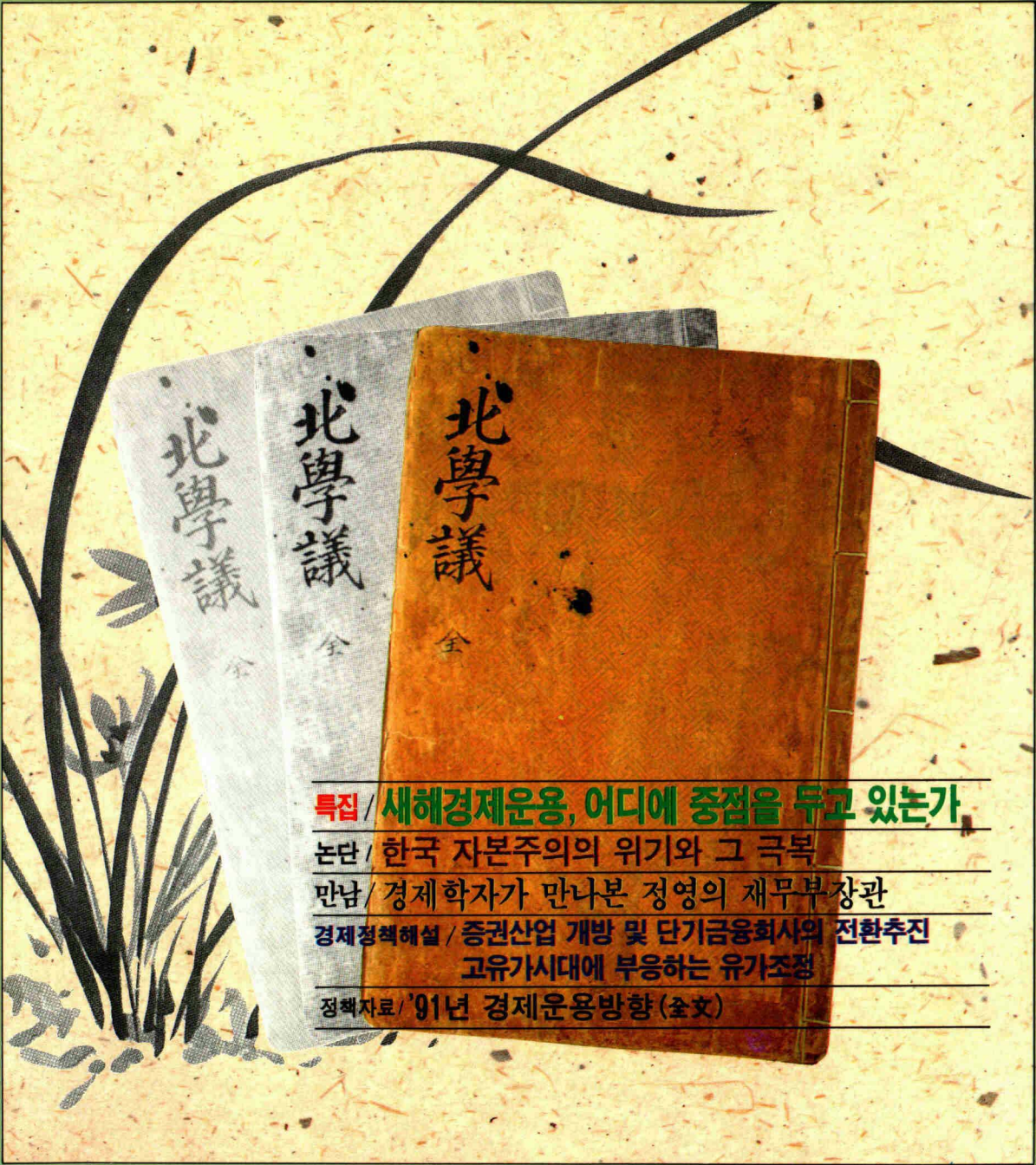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제 2 호
1991
1

나라경제 · 1991년 1월 5일 발행(매월 5회 발행) 제2권 제1호(총권 제2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라 4059호 · 발행처 국민경제제도연구원 ·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 135-619 서울 영등우체국 사서함 1947 · 대표전화(02)561-1400 · FAX (02)561-1410



특집 / 새해경제운용,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논단 /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극복

만남 / 경제학자가 만나본 정영의 재무부 장관

경제정책해설 /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의 전환추진
고유가시대에 부응하는 유가조정

정책자료 / '91년 경제운용방향(全文)

교역을 통한 國家富強을 주창했던 선각자의 명저

有一種奸民入邑迫雷改榜...
 有一種奸民入邑迫雷改榜...
 憲探訪雖易楚革極難可革者革之不可革者因之
 已今日世或浮動他日世或失望其坊里私契如或挾
 私虛張隱其實狀飾其浮言者終亦有罪並須惕念
 新官蒞任例有牛酒松三禁中嚴之令此文具也宜勿
 之
 朱子始至南康榜諭文云當職久以疾病退伏里閭比
 蒙誤恩假守茲土懇辭不獲扶曳而來到任之初伏自
 惟念聖天子所以搜揚幽隱付畀民社之意固將使之
 宣明教化寬恤民力非徒責以簿書期會之取而已願

雖不能其敢不勉今有合行詢訪勸諭事件○一役煩
 稅重有能知得利病根原次第合作如何措置○一前
 代孝子司馬氏熊氏皆以孝行顯又有義門洪氏累世
 義居孀婦陳氏守節不嫁請後世修行不愧古人○一
 請鄉黨父兄各推擇其子弟之有志於學者遣來入學
 ○案朱子此文一曰食二曰教三曰學君子之於小民
 也必先養而後教教而後學焉斯其義也
 沈沁齋大守為星山縣監榜示城門口持身清謹聽政
 公平太守事也太守勉之敦孝友聽約束無廢法令百
 姓事也百姓勉之
 是日有民訴之狀其題批宜簡
 治縣設云民狀所告不宜嚴判宜令而違對辨不可以

국가부강을 위해 상공업을 권장하고 해외교역을 통한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주장

박제가가 29세 되던 해에 저술한 『북학의』는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한 후 자기의 의견을 붙여 쓴 기행문으로서 내편 1권과 외편 1권,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편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에 대한 개량점을 제시하였으며, 외편은 농업기술의 개량과 외국무역의 이점을 설파하였다. 박제가는 “實事求是”의 사상을 토대로 國利民福을 위해서는 선진국인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론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필요한 것부터 배우고 개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을 편리하게 한 후 물자의 거래를 촉진해야 하며, 농구를 개량하고 농업기술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상공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주장하였다. 박제가의 이러한 사상은 궁핍했던 조선사회를 보다 살기좋은 사회로 바꾸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상업을 중시했던 그의 사상은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에게 깊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초정 박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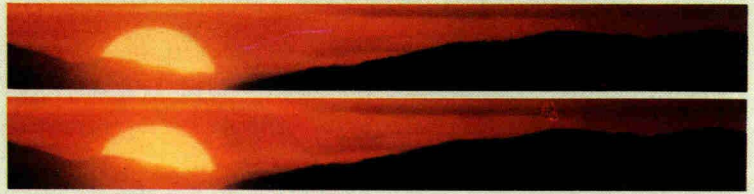
1750년 2월 右副承旨 朴坪의 서자로 서울에서 태어난 박제가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비상한 재질을 보여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박지원, 이덕무, 홍대용, 유득공 등과 깊이 사귀었다. ‘北學派’라고 불리는 이들은 청나라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선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1778년 謝恩使 蔡濟恭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 반정군 등에게 새학문을 배우고 귀국하여 『北學議』를 저술한 박제가는 이듬해 正祖의 특명으로 규장각 검서관이 되어 많은 서적을 편찬했다.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청나라에 다녀오는 등 널리 견문을 익힌 그는 만년에 辛酉邪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북학의』, 『명농초고』, 『정유서고』, 『유정집』 등이 있다.

나라 경제

1991.1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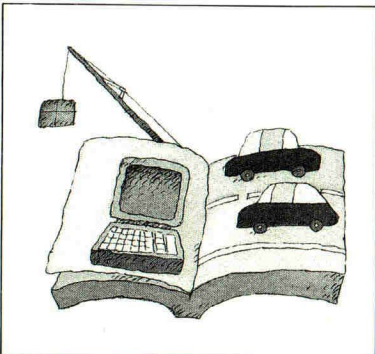
특집 새해경제운용,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91년 경제전망과 경제운용의 골격 / 최종찬 · 경제기획원	14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오강현 · 상공부	20
임금안정은 금년도 경제운용의 관건 / 권오봉 · 경제기획원	25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 장수만 · 경제기획원	31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 / 한정택 · 경제기획원	36



경제정책해설

자동화·정보화로 경쟁력을 지키자 / 전승훈 · 경제기획원	68
근로복지 증진시책 / 박정규 · 노동부	73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의 전환추진 / 정은보 · 재무부	76
원자력 핵심기술의 자립정책 / 김영식 · 과학기술처	81
양곡정책의 방향전환 - 쌀 수급문제를 중심으로 / 박창정 · 농림수산부	84
고유가시대에 부응하는 유가조정 / 신성철 · 동력자원부	86
무역위원회와 산업피해구제 / 김한진 · 상공부	89
그린벨트 규제완화 / 이석수 · 건설부	9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 계획 / 박정구 · 보건사회부	96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첫 통신위성 - '무궁화' 위성 사업 / 조병하 · 체신부	98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연료사용정책 / 김원민 · 환경처	101
우리나라 항만의 장기개발방향 / 김영남 · 해운항만청	104





만남 / 정영의 재무부장관



명산순례 / 지리산

권두칼럼

‘人生一代’ 觀 / 고승제 · 학술원 회원 / 전 서울대 교수 6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상공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 고도화의 주역
/ 김남인 · 내외경제신문 기자 8

경제동향

나라안 성장구조가 개선되는 모습 / 김병일 · 경제기획원 41

나라밖 유가폭등과 국제경제 변화추이 / 배광선 · 산업연구원 44

경 / 제 / 수 / 상

예측 가능성 / 김정용 · 농림수산부 48

신중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 김건호 · 건설부 49

근검절약과 질서외식의 생활화 / 박옥중 · 해운항만청 50

전산망 유감 / 정홍식 · 체신부 51

고도정보화사회의 창조적 정책형성 / 경종철 · 과학기술처 52

출입기자코너

북방항로 진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해운항만정책
/ 정기환 · 중앙경제신문 기자 53

균형감각있는 정책으로 통신선진국 이룩해야
/ 김형근 · 한국경제신문 기자 54

실태조사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 김경근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55

만평

단결·화합으로 경제난관 돌파 / 이원복 · 덕성여대 교수 59

만남 경제학자가 본 정영의 재무부장관

나라경제의 알찬 살림꾼 60

컬러화보

명산순례 · 지리산 64

해외통신

미래에의 투자 / 진해술 · 과학기술처 / 주미 한국대사관 108

최고기 수입자유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
/ 노경상 · 농림수산부 /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파견 109

국가정책의 상대성 / 이용근 · 재무부 / 주미 한국대사관 110

대만인의 對中國 경제교류 / 김두현 · 경제기획원 / 중화경제연구원 파견 111

보수주의의 경제정책 / 임석규 · 경제기획원 / 미국 후버연구소 파견 112

나라경제논단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극복 / 권요규 · 경제기획원 114

귀금속·보석산업 육성, 무엇이 문제인가?
/ 김현중 · 상공부 120

정보사회 종합대책의 추진 / 김원식 · 체신부 126

과천글마당

독후감 『자유주의의 운명』을 읽고 / 이경호 130

수 필 소리 / 김재정 132

시 錦繡江山 / 신일영 132

시 서울 通路에서 / 김봉화 133

경제부처 동정 정책일지 · 인사이드 / 편집실 134

경제부처 발간자료안내 / 편집실 137

정책자료 '91년 경제운용 방향 140

‘人生一代’觀

고승재
 학술원 회원 / 전 서울대 교수

“
 오늘과 같이
 변화가 무상하고
 화폐가치의 변동이 격심한
 시대에 자손을 위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인간능력과 역량,
 건강과 활동이지
 다른 모든 것은
 쓸데없다고 믿는다.
 ”

약 한달전에 시부자와 에이치(澁澤榮一)의 손녀가 나를 찾아왔다. 1920년생이라 하니 70세의 고령의 여인이다. 나를 찾은 이유는 韓國金融史에서 이 사람의 조부가 경영하던 제일은행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야기의 순서로 한성은행을 만들던 이야기부터 해야 했다. 한성은행의 초대 行長은 李太王의 사촌동생으로 그의 殊遇를 한 손에 독점하고 있었던 李載完이다. 이재완은 野津鎮武라는 일본 특무대장을 일본 제일은행의 대리인으로 하여 제일은행 창설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때는 1902년 5월경이었다. 이재완은 도대체 은행이란 무엇하는 곳이며 그리고 은행을 개설할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 이 두 가지 질문에 野津은 은행이란 이리이러한 곳이고 은행을 설립할 장소는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鍾路가 좋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재완은 사람의 출입이 많은 상인의 고장에 어찌 내부대신의 지위에 있는 내가 가겠는가, 그러니 안국동네거리가 좋다고 하여 그리로 결정하였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澁澤榮一은 500여개의 회사를 창설하였으며 그 모습이 일본 주식회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澁澤財閥을 가리켜 재산이 없는 재벌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그 손녀에게 물었더니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형제는 모두 사망하였으니 澁澤財閥은 2代도 계속하지 못하였다.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인 토마스 만(Thomas Mann)은 富商의 차남으로 태어나서 『브덴브로크家の 사람들(Die Buddenbrooks)』이란 작품을 출세작으로 하여 문필업에 전업하게 되었다. 이 소설은 자기집 내력을 쓴 것인데 3대까지만은 기력도 있고 교양인이라도 3대 이후에는 가운이 기울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50년대, '60년대를 겪는 동안에 많은 재벌이 몰락하고 말았다. 또한 지금도 그러한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나 글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국기업을 생각한다면 역시 성쇠흥망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주제는 聖고드리크(St. Godric)의 이야기를 쓰고자 함에 있다. 중세봉건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본가로 배출되었는가. 이것은 학자들이 있어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론을 즐기는 독일의 학자들은 토지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본가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이 틀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벨기에의 史家 앙리 피렌느(Henri Pirenne)는 대담하게도 12세기 전반에 활약하였던 띠돌이행상의 이야기를 들어 경제사회의 발전이란 그렇게 자로 재듯이 이론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聖고드리크의 사례를 들었다. 너무 딱딱하게 이론적 系譜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일푼에서 출발한 聖고드리크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앙리 피렌느는 벨기에의 유명한 역사가로서 '20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의 한 사람'이라는 국제적 명성을 얻은 석학이다. 1862년에 벨기에와 독일의 국경지대인 직물공업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1935년에 세상을 떠났다. 생애의 대부분을 교직에 몸담고 있었는데 『벨기에史』 등 수많은 저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소개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앙리 피렌느의 저서 『중세 유럽의 경제사회사(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Medieval Europe)』라는 책을 읽어보면 聖고드리크의 일화가 아니면 저술이 어려울 정도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聖고드리크는 11세기말에 랭커셔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에는 바닷가에 표류하는 해초 등을 주워모아서 그것을 가게의 도움으로 삼았다. 그후 불굴하고 불요한 모험심과 진취의 기상으로 富를 모으는 왕성한 생활력을 키워나갔다. 16세 때 얼마 안되는 밑천으로 행상길에 나섰다. 이때의 행상이란 피곤한 다리를 끌면서 걸어다녀야 했다.

4년간의 행상으로 모은 돈으로 해외시장을 드나드는 旅商이 되었으며 다른 상인들과 더불어 商事組合이나 선박공유조합 같은 것을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싸게 구입하여 저곳에서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원격지 상인이 되었다.

聖고드리크의 활동무대는 이탈리아, 화란, 프렌더스, 스코틀랜드 등등이었다. 더구나 그는 인간심리의 본능을 잘 파악하여 16세기에 가서야 싹트기 시작한 머천트 어드벤처러스(모험상인단)를 이미 12세기에

실천하였다. 일종의 천재적 재능의 소유자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一箇의 상인을 성인으로 취급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는 만년에 그의 전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교회에 나누어주고 자기 자신은 시골의 僧院에서 조용한 隱者의 생활을 보냈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본가가 성립했는가를 말하여 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이론을 좋아하는 학자들이 무어라 말하든간에 피렌느의 資本家說은 뚜렷한 史實에 입각한 주장이고 오늘날에는 세계의 모든 학자가 승복하는 유력한 학설이 되었다. 聖고드리크는 또한 우연히도 聖界에 관계하였기 때문에 그 전기를 남겨두게 되었다.

토지를 사들이고 기사나 귀족의 생활을 흉내내는 大商人이 그 당시에 적지 않았으나 다만 史料에 남아 있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귀족이 되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토지를 매개로 하여 부와 재산을 보유한 봉건사회에 있어 사실이 이러한진대 오늘과 같이 변화가 무상하고 화폐가치의 변동이 격심한 시대에 자손을 위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인간능력과 역량, 건강과 활동이지 다른 모든 것은 쓸데없다고 믿는다. 매우 아이러니컬한 말이지만 그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나의 심정이다.

고정적이고 공식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구체적인 사회의 실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18세기나 19세기처럼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기업가가 형성된 때일수록 구체적인 사회관이 필요해 진다. 그때에 자본가가 되었던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경로를 거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명심하여야 한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역사과정에서도 크나큰 사회변동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1961년에 창설되었는데 3년 뒤에 회원수가 68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회원 중 일제시대부터 경영해 온 사람은 한 사람 뿐이었다. 그 많던 지주의 자손들이 기업가로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기이한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內省하고 자기의 주변을 살펴본다면 '人生一代'라는 말의 의미가 자자하게 가슴에 스며들 것이다. [인문논거]

상공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 고도화의 주역



산업정책국의 하루는
오전 9시, 국·과장 회의로 시작된다.

한 덕수 산업정책국장은 오전 8시 30분쯤 과천 종합청사 3동 7층의 사무실에 출근했다. 의자에 앉자마자 어제 저녁 퇴근때 싸들고 들어갔던 서류뭉치를 가방에서 꺼내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해 나갔다.

이 사이에 5명의 과장들이 하나 둘씩 노크도 없이 방안에 들어와 테이

블 주위에 둘러앉는다.

정각 9시. 한 국장이 서류정리를 멈추고 의자를 끌어당겨 함석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오늘 회의는 성과가 있을 것 같아. 경제기획원에서 기술개발지원자금 확대 의사를 밝혔고, 재무부도 세금감면 등에 원칙적인 찬성을 했어요. 문제

**산업정책은 언제나
산업지원에 중점을 두게 마련이다.**
쉽게 말해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풀어 실물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물꼬를 터주는 데 있다. 상공부의
이런 문제의식이 관계부처와 정책협의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로 늘 나타난다. 정책입안보다 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게 더 어렵다.

는 건설분야.

그런데 구 과장, 공업입지수요 실태
조사는 잘 돼가고 있나요?”

“어제 중간점검을 했는데 60% 정도
는 끝났습니다. 오는 20일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각 시·도에 다시 협조요청
을 했습니다. 또 며칠밤 새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회의치곤 좀 딱딱하지만 박진
감이 넘친다. 그저 차 한잔을 마시며
환담에 그치는 여느 회의와는 사뭇
다르다.

‘상공부 산업정책국.’

이른바 ‘산정국’으로 산업정책을
꾸며내는 ‘상공부의 싱크탱크’이다.
산업정책국은 산업정책·산업진흥·지
방공업·유통산업과와 산업기술대책반
등 모두 4과 1반에 직원은 46명.

외견상 살림이 단출한 것 같지만
여간 복잡하고 큰 게 아니다. 재무·건
설·노동부 등 다른 정부부처들이
정책집행권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상공
부는 정책수요만을 맡는 게 대부분이
다. 경제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산업
정책을 세우긴 해도 그 실행을 위한
집행권은 늘상 다른 부처가 갖고 있게
마련이다. 이때문에 정책협의 때마다
세부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이해관계
가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복잡하게
얽혀 있다. 좀처럼 매듭이 풀리지 않
는 게 다반사이다.

상공부의 산정국은 정책입안과 더불어
그 실행을 위한 각 부처와의 협의를

함께 해야 한다. 정책입안도 어렵겠지
만 그 실행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
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각 과의 역할
분담이 뚜렷하고 이의 조화로운 운영
을 통해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간다.

우선 각 과의 업무분담 내용을 살펴
보자.

산업정책과 : 산정국의 업무를 총괄
한다. 산업금융·세제·관세지원과
기술인력·투자동향을 챙긴다. 경제시
책과 산업구조 그리고 첨단산업육성대
책을 책임지고 있다. 업무성격상 경제
기획원·재무부·노동부 등과 접촉이
빈번하고 경제 단체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산업진흥과 : 기술개발·기술협력·
기술지원·기술수요조사 등을 맡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조짐을
보이면서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산학협동·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분규도 함께 다룬다. 과학기술처·
노동부·문교부 등과 업무협의를 빈번
하다.

지방공업과 : 공장을 효율성 있게
집단지화하고 공업 낙후지역에 공단을
조성, 공업을 재배치하며 심각한 공장
용지난을 해소키 위한 공단 조성과
관리가 주업무이다.

지방공업 육성을 위한 지방공단
32개·직할공단 9개·수출자유지역
2개 등 모두 43개 공단을 관리하면서
최근에는 농공지구와 아파트형 공장조

성에 열중이다. 공해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추가업무가 되었고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주택건설
에도 관여하고 있다. 건설부 등과 업무
협의를 자주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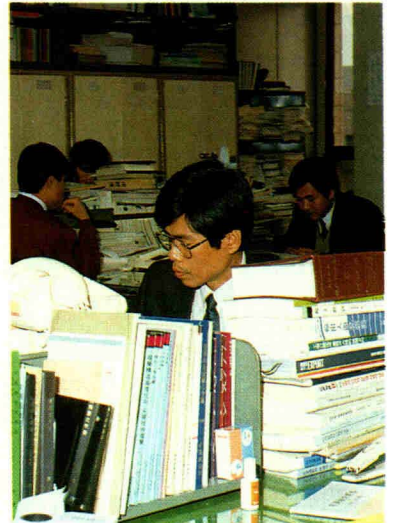
유통산업과 : 생산된 제품이 최종소
비자에게 도달되기까지의 유통과정이
업무영역으로 앞으로 상공정책의 역점
분야이기도 하다.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유통
근대화와 집배송 현대화, 상거래질서
확립, 도·소매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공산품의 수급과 가격안정, 소비
자보호대책도 맡고 있다.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 등 경제부
처를 포함해 민간소비자보호단체와
교류가 활발하다.

산업기술대책반 : 지난 7월 신설된

상공부 산업정책국은 산업정책을 꾸며내는
‘상공부의 싱크탱크’이다.



산정국의 막내이다.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장자동화·정보화 등이 주요 과제이다. 한·일, 한·소 기술협력과 실용기술개발도 함께 취급중이다. 과학기술처 등과 업무협력이 빈번하다.

산정국의 각 과는 이런 별개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업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지난 8월 펴낸 「우리 산업의 경쟁력 실태와 '90년대의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이다. 상·하 두권으로 된 이 보고서는 9백57쪽짜리 메가톤급으로 작업계획 확정 이후 최종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꼬박 4개월이 걸렸다. 분석대상이 된 24개 주요 업종의 선정에서 각 업종별 보고서 작성에만 3개월, 최종보고서는 다시 20일 동안 작업했다.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2주일이나 계속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상공부내의 공업관련 18개 과가 각 업종별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고, 산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25개의 업종별 협회와 조합이 관련자료를

**산정국에선
항상 세 가지의
업무자세를 강조한다.**
**첫째는 정책의 논리성과 합리성이며,
두번째는 경제현실의 분석력이며,
세번째는 강한 추진력이다.**
**집값·땅값·전세값이 뛰고
과소비가 겹쳐
유난히 어려웠던 '90년.
수출과 경기회복대책 마련에
산정국은 특히 바빴다.**

제공했다. 학계·재계 등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보고서는 그 작성에 진통이 컸던 만큼 그 성과도 대단했다.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력 실태를 계량분석함으로써 수출부진이 고원가·저기술·저생산성 등에 있음을 밝혀냈다.

물론 이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의 성장활력이 떨어지고 수출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생산적인 서비스업이 비대해지는 등 우리 경제의 이상현상

을 진단,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산정국의 산업정책 아이디어는 이와 같은 경제현실 속에서 찾아진다. 상공부는 다른 정부부처보다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많이 알고 정보수집이 빠른 장점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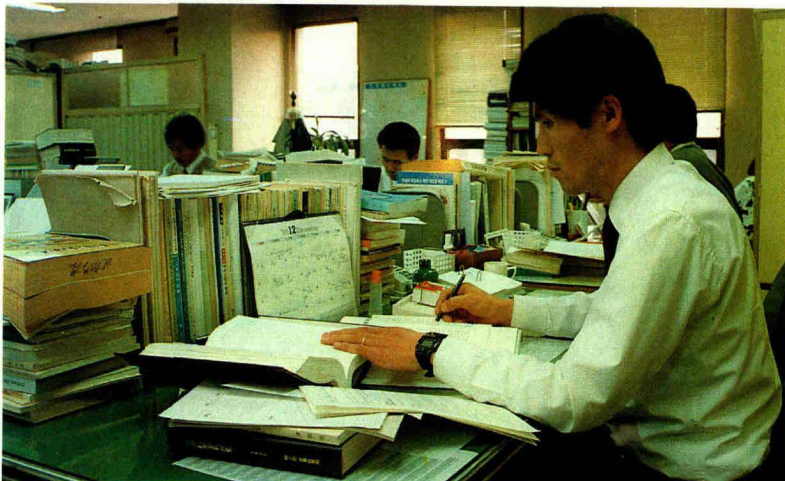
실물경제의 리더인 기업은 특히 산업정책의 아이디어원이다.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는 산정국내의 국·과장 회의에서 문제현황과 정책방향이 토의된다. 어느 분야,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곧바로 정책입안에 나설 주무과가 결정된다.

주무과는 상공부의 20개 공업과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정책입안작업을 하게 된다. 정책 초안은 국·과장회의의 내부검토를 거쳐 작성되고, 이 안은 해당 산업별 민간협의회에 넘겨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현재 산정국에는 학계·재계 등 15~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22개 산업별 민간협의회가 구성돼 산업정책을 자문해 주고 있다.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정된 정책안은 다시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자문과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거쳐 관련부처와 협의를 위한 정책안으로 비로소 확정된다. 정책협의 과정에선 항상 기업편을 들게 마련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때도 많다.

정책목표의 당위성을 설명하다 보니 자연히 경제현실의 어려움, 즉 기업입장에서 설득하게 된다는 것. 상공부의 산업정책이 연역적이기보다는 귀납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한덕수 산정국장장은 이런 입장에 대해 “산업정책은 언제나 산업지원에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은 정책입안과 더불어 그 실행을 위한 각 부처와의 협의를 함께 해야 한다.



중점을 두게 마련이다. 쉽게 말해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풀어 실물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물꼬를 터 주는데 있다. 상공부의 이런 문제의식이 관계부처와 정책협의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로 늘 나타난다. 정책입안보다 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게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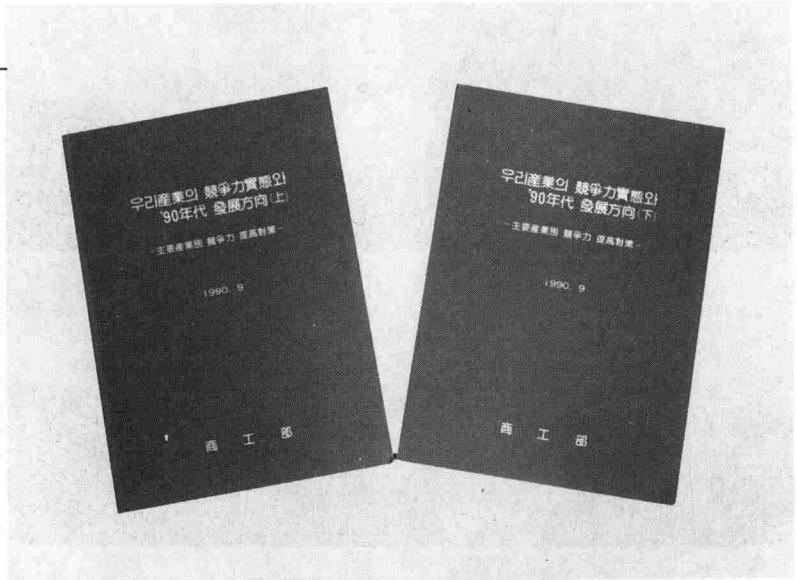
실제로 산정국이 마련한 산업정책은 그 일부만이 추진되거나 아예 사장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산정국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실태와 '90년대의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면서, 그 하부계획으로 '제조업 주도의 성장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 등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은 '91~'95년중에 모두 2백25개의 생산기술을 3조여원을 들여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 엄청난 자금지원을 경제기획원·재무부가 계획대로 협조해 줄지가 의문이다. 그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경제기획원은 예산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무부는 통화증발로 인한 통화관리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은 아직 세부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우선 순위를 기초기술과 실용기술의 어느 쪽에 두느냐를 놓고 과학기술처와 맞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식의 논리싸움이 었던 셈이다.

산정국에선 항상 세 가지의 업무자세를 강조한다.

첫째는 정책의 논리성과 합리성이다.



산정국에서 펴낸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실태와 '90년대의 정책방향」

정책집행부처가 정책개선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에 관한 자기이론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두번째는 경제현실의 분석력이다. 상공부는 업무성격상 실물경제의 주체인 기업과 자주 접촉하게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산업정보를 많이 얻게 된다. 산업정책의 아이디어는 바로 산업정보의 분석에서 나온다.

세번째는 강한 추진력이다. 산업정책은 다양한 정보와 자료분석을 통해 얻어진다. 정책입안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또 입안된 정책은 관련부처가 수용해야만 빛을 보게 된다.

한덕수 국장은 산정국의 근무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기이론이 없으면 문제점 발견으로 끝난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산정국에선 언제나 산업전문성과 현장감각이 있어야 하고, 분석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산업현장을

방문토록 권유한다고. “실체는 잡히지 않지만 성취감으로 보람을 느낀다. 앉아만 있을 수 없는 곳이다. 저절로 뛰면서 일하게 된다.” 이것이 산정국의 근무분위기라는 것이다.

요즘 산정국은 '91년도 산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업종별 민간협의회를 개최, 이미 1차적인 의견수렴을 마치고 종합추진계획안도 작성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마련중에 있다.

집값·땅값·전세값이 뛰고 과소비가 겹쳐 유난히 어려웠던 '90년. 수출과 경기회복대책 마련에 산정국은 특히 바빠다. 산업정책은 경기의 호·불황과 전혀 관계없이 계속 입안 추진된다. 산정국은 '91년의 단기적인 숙제를 몇가지 안고 있다. 공업입지 수요조사와 공급계획, 생산기술, 도·소매업 5개년 계획의 추진, 그리고 한·일, 한·소 기술협력 등이 그것이다. 나라경제

김남인 내외경제신문 기자

'91년 경제전망과 경제운용의 골격

'90년도는 경제민주화와 형평추구과정에서
저하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소생시키고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90년 초반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경제운용실적 평가

'90년도는 경제민주화와 형평추구과정에서 저하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소생시키고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90년 초반은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제성장은 6.5% 수준으로 낮게 전망되었고, 수출은 1/4분기중 1.2%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부동산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었고, 전·월세 가격도 급등하였으며, 물가도 매월 1.2%씩 올라가는 높은 상승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4·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업의욕을 제고하여 수출과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4·13 및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통하여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소유를 억제하고 전계층에 확산되었던 투기현상을 진정시켜 왔으며, '4·20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물가안정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수급대책'과 '제조업 자동화·정보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체제도 재정비토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들면서 폐만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흐름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먼저 경제성장면에서 보면 9% 수준의 높은 성장률과 함께 내용면에서도 상반기에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위주의 성장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와 수출회복을 바탕으로 성장구조가 건실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국제수지면에서는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20억불로 예상되나 유가상승으



최종찬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금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그동안 약화되어 온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로 인한 예상외의 추가부담이 20억불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유가상승요인을 제외하면 흑자기조로의 재전환도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가와 부동산면에서도 하반기 들어 안정세가 두드러졌다. 물가의 경우 일부 유가조정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수 물가(소비자 9.4%, 도매 7.4%)를 유지하였고, 최근 토지 및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전·월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경제는 총량면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틀이 점차 마련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인력난·공장용지난과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요

인이 상존해 있고, 최근에는 노사분규와 부동산투기 현상이 진정되고는 있으나 국민들은 아직도 경제안정기만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평과 분배에 관한 국민적 갈등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갈 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91년도 대내외 여건전망

금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을 보면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먼저 폐만사태로 인해 국제원유가격이 적어도 배럴당 20불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유가 현상은 세계경기를 둔화시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의 타결시한을 넘긴 UR협상이 금년에 타결될 경우에는 각국의 수입규제가 완화되어 우리 수출의 확대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농업과 서비스분야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있고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통상마찰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소련방문과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방교류와 협력증진은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며 기존 시장에서는 엔화강세 현상 등이 우리의 수출 환경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유가인상 및 공공요금 현실화 요인이 누적되어 있어 기본적인 물가관리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가계의 소득보상적 욕구가 표출되고, 특히 지방자치제 선거의 실시로 경제·사회적 안정분위기가 이완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사관계 및 임금교섭 여건도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으로 보아

<표 1> '91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

	'90년	'91년
선진국 경제성장률	2.5	2.1
(미 국)	(1.1)	(1.0)
(일 본)	(5.1)	(4.0)
세계교역량 증가율	7.1	5.9

*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90년 10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성장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위주의 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수출회복을 통해 국제수지개선에도 도움이 되므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一石三鳥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시급한 과제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인력난 해소이나 그동안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재정기능이 위축되어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소홀한 게 사실이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 예산에 작년 대비 35% 증가한 2조 5천억원을 책정하였으나 현재 수송애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대졸자의 구직난 속에 기능직 또는 생산직은 구인난을 겪는 등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무조건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벌위주의 사고방식과 인문계 위주로 되어 있는 교육제도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 소득수준 향상과 근로의욕 감퇴로 굶은 일과 잔업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산직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단기적으로는 자동화를 통하여 인력수요를 감축시키는 한편 공급면에서 서비스업을 규제하여 인력을 제조업으로 유도하고 노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기능인력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제도를 기능 및 기술계 위주로 전환토록 하여 공교나 이공계 대학의 정원과 학교 설립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단개발을 확대하고 공장용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나갈 것이

지난해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91년 경제운용의 중점

6공화국 들어 권위주의적 경제운용 방식을 탈피하고 고도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와 형평증진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노력을 등한시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욕구를 표출함으로써 경제의 발전잠재력이 약화되고 대외경쟁력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 것이 사실이다.

금년도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근원적인 치유를 함으로써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90년대 중반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물가안정기반의 바탕 위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은 첫째 그동안 약화되어 온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둘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은 '86~'88년 호황기에 구조조정 노력을 등한시하고 이후 민주화 추세에 편승한 임금의 급상승과 근로의욕의 감퇴, 그리고 공업입지·사회간접시설의 부족 등이 복합되어 '89년 이후 경쟁력이 급격히 감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성장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위주의 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수출회복을 통해 국제수지개선에도 도움이 되므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一石三鳥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다. 현재 공단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실수요기업의 단독 또는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시·도의 권한을 확대하고 객관적 허용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전용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 간척지도 가능한 것은 이를 공장용지로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한편 제조업 경쟁력 제고는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혹은 설비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제도를 신속적으로 운용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억원 수준의 자금을 신규로 조성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둘째로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통해 경제안정을 유도하고 국내저축률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올해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으로 미루어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재현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유가상승 등의 원가상승요인을 흡수토록 하면서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통화관리는 통화당국이 연간 전망과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토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연간 관리목표를 제시하여 통화관리를 하는 경우 연중 경제여건이 변화하여도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통화 당국이 신속하게 여건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이 최근 진정추세

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임금안정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동안 급속한 임금상승이 수출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87년부터 '90년 상반기까지 제조업 임금상승률이 대만은 52%,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인력난 해소이다.

에 있으나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 등 이미 수립한 투기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주택보유 전산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여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줄여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한편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바탕위

14%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78%였다. 많은 사람은 '90년도 임금이 안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금상승률이 16~17%로서 '88년보다도 높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제조업 임금상승은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전반적인 인플레이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금상승을 자제하여 민간부문의 임금 안정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임금안정에 대응하여 근로자주택 공급 확대, 교육기회 증진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투자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높은 저축률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소비절약 등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면서 중장기 저축유인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정기예금금리보다 2~3% 높고 월 30만원까지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제도를 신설토록 하였다.

셋째로 중점을 둘 분야는 농어촌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다. 이제 UR협상이 어떠한 형식으로 타결되든간에 농업분야에 있어서 국제화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농어촌지원은 부채탕감·추곡수매가 인상 등 경상적인 보조가 주류를 차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농어촌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남아 도는 통일벼 생산을 축소하며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확충과 영농기술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외소득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일본·대만의 농촌이 도시 못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비결은 농업소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외소득에 있는 것이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촌공업화가 핵심적인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농어촌을 살기 좋은 정주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도시교통난 완화, 환경오염방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정비사업도 재검토하여 실효성있는 시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영세민 등 도시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로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UR협상 타결에 대응하여 농업·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시책과 함께 EC통합에 대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의식을 개선하고 국제문제 전문가를 적극 양성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UR협상이 지연될 경우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불필요한 통상마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방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한소경협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또한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고조되는 통일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민간교역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91년 경제전망

경제성장 및 고용

올해 우리 경제는 '90년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제성장면에서 보면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인 내수가 둔화됨으로써 성장은 7%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가상승 등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건설투자나 설비투자 모두 내수둔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 경제성장이 7% 수준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실업률은 2.5% 수준으로 고용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직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및 국제수지

금년은 고유가로 인해 수출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북방 교역이 증가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시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수출도 지난해

보다는 다소 개선된 695억불(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면에서는 엔화강세가 예상되어 우리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지난 '86~'88년과 같은 수출호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일본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엔강세 흡수능력이 커진 데다가 일본의 동남아 현지공장 제품의 경우 엔강세 효과가 미치지 않고 있어 우리 상품수출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경우 원유 도입단가가 상승하고 수입단가도 고유가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므로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765억불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8억불 적자로 추정된다(무역수지상의 수·출입은

통관기준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의 경우 통관기준과는 달리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수·출입 금액의 차와 무역수지는 차이가 있음.). 한편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경우 해외이자 부담 증대 등으로 2억불의 적자가 예상된다.

물가

금년도에는 석유류 제품가격과 공공요금 현실화 요인이 누적되어 있고, 원화도 약세가 예상되는 등 기본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가 지자제 실시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분위기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내수가 진정추세에 있고 임금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

되고 있으며 지난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커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임금이 안정되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물가는 8~9%, 도매물가는 7~8% 수준에서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

금년 경제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를 보면 유가상승과 UR협상 등 대외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연이은 선거 및 노사관계의 불안으로 안정기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많은 나라들이 양자를 조화시키지 못한 성급한 욕구표출로 결국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된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본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욕을 갖고 기술혁신과 신시장개척에 노력하고, 농어민과 근로자들도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근로의욕을 되찾을 때, 그리고 국민들도 과소비나 투기에 이끌리지 않고 건전한 소비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표 2〉 '91년 경제전망

	단 위	'89	'90	'91
경제성장	불변, %	6.7	9내외	7수준
민간소비	%	9.8	10.0	7.0
총고정투자	"	16.2	21.7	8.3
건설	"	19.8	26.0	7.0
설비	"	12.3	16.8	10.0
상품수출	"	△5.2	4.8	5.1
경상수지	억불	50.5	△20	△30
무역수지	"	46.0	△20	△28
무역외 및 이전	"	4.5	-	△2
수출	통관, 억불	624	645	695
(증가율)	(%)	(2.8)	(3.4)	(7.8)
수입	통관, 억불	615	700	765
(증가율)	(%)	(18.6)	(13.9)	(9.3)
도매물가	比前年末, %	1.1	7.3내외	7~8
소비자물가	"	5.1	9.5내외	8~9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조업 및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건전한 성장기반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년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4·4경제활성화 종합대책', '90년 7월의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 및 '산업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1년도 경제운용방안'에서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최근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 오던 제조업과 수출부문의 활력이 떨어지고 서비스산업이 이상비대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 제조업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논의와 아울러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89년 제조업 성장 3.7%(경제성장 6.7%), 수출의 물량기준 5.2% 감소('88년 12.5% 증가) 등 심각한 조정국면을 거친 우리 경제는 '90년에 와서 9%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일단 침체국면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조업 성장과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수출도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조업과 수출보다는 건설 및 서비스부문에 의하여 성장이 주도되고 있으며, 제조업 경영의욕과 근로윤리의 저하, 임금의 지속적 상승 및 생산성의 정체, 산업기술력의 저위 및 산업인력의 전반적 부족 등 제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이 단기적으로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산업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가정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환율과 시장보호 등 효율적인 정부지원정책, 비교적 자유로웠던 국제무역 및 기술환경 등 국가특유의 비교우위요소에 의존하여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독점적인 기술력이나 국제적인 마케팅 및 경영능력 등 개별기업의 비교우위요소는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이다.

'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경제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국내외적 환경의 급변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향유했던 경쟁력 우위요소는 대부분 상실되어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의 퇴색, 임금상승과 원화절상, 국제적인 무역 및 기술보호주의 강화 추세 등으로



오강현
상공부 산업정책과장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위주로 고도화하고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조업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저 호황기간 동안 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산업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흡했었다. 따라서 현재의 제조업과 수출부진현상은 일시적이거나 경기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력 요소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

국내노동비용의 증가와 후발개도국의 추격 및 일본의 동남아 현지공장의 저가공세 등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계속 약화되어 가전 등 기술집약적 제품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며 섬유 등 노동집약적 제품은 후발개도국에 비해 15% 이상 비싸지고 있다.

최근 3년간('87~'89년)의 임금상승률을 보면 한국이 연평균 18.8% 증가세를 보여 일본의 3.4%, 대만의 10.6%에 비해 크게 높고, 노동생산성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율도 한국이 5.2% 상승한 데 비하여 대만은 1.7%에 그쳤고 일본은 오히려 4.3% 감소하였다.

기술 및 품질경쟁력면에서의 취약성은 더욱 두드러져 우리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5%~79%에 불과한 실정이며, 자체 기술개발력의 미흡과 선진국의 고도기술 이전기피로 기술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우려가 있다.

노사분규와 근로자세의 이완에 따라 생산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수준도 저하되어 수출검사 불합격률은 지난 '88년의 3%에서 '90년 상반기는 5.8%까지 증가하였다.

세계시장의 단일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독점적 기술보유 다국적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고기술제품에서 우리와 같은 후발자의 이익과 시장참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단순저기능제품에서는 후발개도국에 잠식당하여 상품구조면에서 취약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편 제조업 경영여건도 크게 불리하여 금리차에 따라 금융비용이 일본의 3배 수준으로 높고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일본(5.5%), 대만(13.5%)에

비해 훨씬 낮은 2.5% 수준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기능인력이 연 10만명 이상, 기술인력이 연 3만명 이상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산업과 특근기피는 물론 제조업 부문의 인력('90년 상반기 1.2% 감소)이 서비스부문으로 역류하고 있으며, 공장입지와 도로·용수·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한계로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의 유가급등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에 만들어진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매도분위기는 제조업 경영의욕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혁신은 산업경쟁력과 기업경영의 사활적 요소이므로 모든 수단을 통해 이에 대한 애로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향

제조업 및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건전한 성장기반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년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4·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90년 7월의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 및 '산업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1년도 경제운용방안"에서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제조업 설비투자의 촉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조업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하며 특히 기업의 자동화·정보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계상의 誘因을 강화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세제면에서는 당초 '90년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91년말로 연장하고 첨단 및 자동화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확대 및 감가상각 耐用年數를 단축시킬 것이다.

금융면에서는 자동화·정보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6,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조성하고 주식·회사채 발행을 우선적으로 주선할 것이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통화공급도 확대

하며, 여신관리제도를 주력업종 및 첨단분야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계열기업의 제조업 투자를 우대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중소제조업체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조성·지원하였다. 금년에도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절약을 위한 자동화·정보화 투자 등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5천억원 수준의 자금을 조성·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담보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행 전자금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담보취득제한을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한편 제조업의 기술개발·설비자동화 투자촉진과 관련한 시책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되 기업은 14개 업종별로 '92년까지 추진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시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할 것이다.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의 우선지원

기술혁신은 산업경쟁력과 기업경영의 사활적 요소이므로 모든 수단을 통해 이에 대한 애로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위주로 고도화하고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먼저 기업의 자체 기술개발을 한층 더 강화하여 자동화·정보화 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등 핵심원천기술개발 과제를 국책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하여 학계·연구소·관련기업이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추진하고, 정밀가공·전자부품 등 27개 분야 225개 생산기술개발 과제의 연차별 개발을 추진하며, 한전·통신공사 등의 공공연구개발 재원을 전자·기계 등 전략산업의 애로기술타개에 중점 활용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편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회사의 기술능력을 제고하고 기술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과 기술용역업 등 제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다.

한편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하에서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을 제휴하여 상호이익이 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바탕에서 일본·독일 등 선진공업국은 물론 한·소간 기술교류를 적극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일간의 산업·과학기술 협력사업의 적극 추진과 '한·소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등 한·소간의 과학기술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대적 확충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조성기간이 오래 걸리고 소요재원이 방대하며 투자시기를 놓치는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에서 적기투자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 및 공단주변의 도로 및 철도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심화, 공장 신·증설에 따른 공업용수

투자소요를 앞당겨 투입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급증하고 있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사회간접시설의 중장기투자 우선 순위는 7차 5개년 계획 중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제시할 것이다.

도로·항만·용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91년 예산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투자확충을 위하여 '90년 대비 34.9% 증가한 2조 5천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극심한 수송애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건설공기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족, 물동량 증가로 인한 항만시설 부족 등 도로·항만·용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91년 예산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투자확충을 위하여 '90년 대비 34.9% 증가한 2조 5천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극심한 수송애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건설공기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관건이 되는 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향후 재정

산업인력의 수급 원활화

산업기술 및 기능인력 부족이 제조업 전분야에 확산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이공계 대학 정원확대와 공업계 고등학교의 확충 및 일반계 고교의 기술훈련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매년 76만명에 달하는 고졸출신자 중에서 진학자 및 실업계 고교졸업자를 제외한 20~30만명에 달하는 비진학인력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학생의 비율을 확대하고, 취업이 용이한 이공계 및 경상계 대학의 야간과정을 대폭 확충

섬유·기계·자동차·가전·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기술개발 촉진·설비투자 확대·기업경영 여건개선·마케팅 강화 등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상공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민간업계와 연구기관 및
학계와 공동으로 24개 업종의 경쟁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부족한 고급기술인력의 확대를 위한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전문대학과 전자대학 등 특수학교 설립을 장려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내직업훈련 비율확대 및 업종별 단체의 공동직업훈련원 시설확대 등 산업계 자체의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공업계 고교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특히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주부 및 노장년층의 유휴 인력활용을 위한 파트타임근로의 제도 정비, 직종 개발, 노동 법규의 탄력적 적용 등과 함께 여성의 공업계 고교진학·직업훈련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약 3,700만평의 공장입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내년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공영개발 방식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경지와 산림보전지역은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대한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용도변경기준을 제정·운용하며 이미 기존의 땅값이 높은 만큼 해안의 매립·간척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실수요자인 기업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공단을 개발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개발촉진지역 등 공업용지로 이용가능한 지역은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실수요기업이 원하는 위치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장용지의 추가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소영세공장·공해공장 등에 대한 별도의 공장입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의 추진

섬유·기계·자동차·가전·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기술개발 촉진·설비투자 확대·기업경영 여건개선·마케팅 강화 등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대

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상공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민간업계와 연구기관 및 학계와 공동으로 24개 업종의 경쟁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9월 4일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근로자·기업·정부가 합심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0년대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나의 문제는 우리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헤이해진 경제주체의 자세와 높아져만 가는 기술장벽, 현실로 다가온 고부가 시대 등에 비추어 우리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장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기업인·정부가 합심하여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산업체질 강화에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남원**

임금안정은 금년도 경제운용의 관건

기업인은 악화된 기업경영환경을 극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과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종업원의 장래를 책임지는 기업가정신을 가다듬고 기업의 실정을 근로자에게 솔직하게 알려 설득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 및 합리적인 임금교섭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노사관계 및 임금동향

'87년 이후 극심한 노사분규를 거치면서 고율의 임금상승이 지속되었다. 노사분규는 '86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100건 내외이거나 많은 경우에도 400건에 불과했으나 '87년에는 무려 3,749건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그후 '89년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에도 연간 1,600~1,800건에 이르는 노사분규를 겪었다.

이러한 노사분규를 거치면서 임금상승도 '87년말경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하

여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82~'86년에는 전산업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0.6%를 나타내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87년 10월 이후 임금상승률은 일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89년과 '90년 상반기중에는 20% 수준에까지 육박하고 있다.

금년도 경제운용과 임금

금년도 우리 경제여건을 볼 때 그동안 악화되어 온 제조업의 경쟁력은 특별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없는 한 개선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물가는 국내외의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권오봉

경제기획원 인력개발계획과 사무관

<표 1> 물가와 임금상승 추이

(단위 : %)

	'82~'86년	'87년	'88년	89년	'90년1~7월
명목임금상승률(A)	10.6	10.1*	15.5	21.1	19.7
소비자물가상승률(B)	3.9	3.0	7.1	5.7	8.0
실질임금상승률(A/B)	6.4	6.9	7.8	14.6	10.9

* 87년 4/4분기 18.5%('87년 10월 23.1%, 11월 13.5%, 12월 19.0%).

크다.

정부가 금년도 경제운용의 중점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에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임금안정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제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그동안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유통상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이 다른 나라보다 크고 공장입지 난도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수준에서 보면 일본 등 선진

국과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반면 아시아 개도국과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어 우리의 경쟁력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특히 경쟁상대국들에 비하여 임금이 단기간내에 급상승하여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단위노동비용(명목임금증가율-생산성증가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임금이 급상승한 '87년 이후 '90년 2/4분기까지 단위노동비용 상승을 보면 일본은 11.7% 감소하고, 대만은 20.0%인 데 비해 우리의 경우 30.8%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와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할 것이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금안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임금이 수출·성장·고용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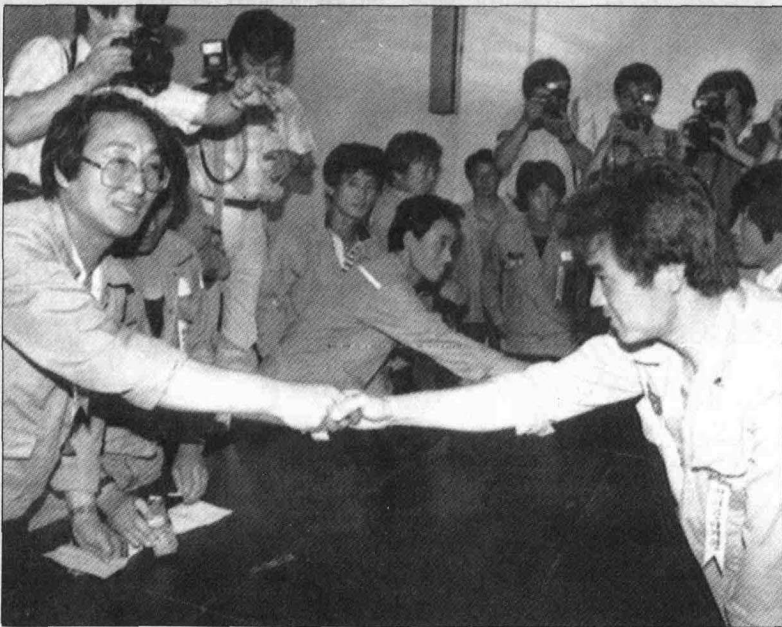
수출상품의 가격은 임금·환율·수입단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환율의 경우는 '90년 3월부터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로 전환하였고, 수입단가 또한 국제시세에 의해 좌우되는 외생 변수이다.

결국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품질과 같은 가격외 요인을 제외한다면 수출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임금이 안정되어야 한다.

계량분석모델에 의하면 대체로 임금 상승분의 20% 정도가 수출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임금 10% 인상이 3년에 걸쳐 수출물량은 2.3%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시적 분석방법에 의하면 임금 10% 상승으로 수출물량이 2.3% 감소되면 수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연도별로 20~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0.5%~1.6%가 둔화되고 성장이 1% 둔화되면 고용은 0.42%('87~'89년 평균)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어 1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정은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임금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도한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을 초래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이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적정임금 인상을 책정은 각종 디플레이터(생계비 인상률 · 소비자물가 · 도매물가)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임금상승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임금과 물가는 고임금→고물가→고임금의 악순환 관계가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시켜서 보면 연구기관이나 연구대상기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85년 산업연관분석 모델에 의하면 임금 10% 인상은 도매물가 1.9%, 소비자물가 2.9% 인상을 요인으로 분석된다.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면
소득분배 개선미흡**

'87년 이후 급속한 임금상승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분배의 몫이 적었던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보상이라는 주장이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자본과 기술의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이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적정임금 인상을 책정은 각종 디플레이터(생계비인상률 · 소비자물가 · 도매물가)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임금상승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축적이 없었고 국내시장도 협소한 제약하에서 노동 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위주로 하는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의 확보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실업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만성적인 노동의 초과공급 상황하에 있었던 노동시장 여건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또한 실업률이 높은 상황하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당시의 산업현실이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지난 경제개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적은 몫이 분배되어 근로자를 희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임금상승을 가속화하여 제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옳을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소득의 분배는 일차적인 분배의 크기 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특히 물가가 상승하면 소득분배면에서 임금 소득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임금과 물가, 소득분배에 관한 통계를 보더라도 명목임금 상승이 연평균 26% 수준이던 '70년대에는

〈표 2〉 임금상승률과 소득분배

(단위 : %)

	'62~'70년	'71~'80년	'81~'86년	'87~'88년
명목임금상승률	20.9	26.5	12.2	15.5
소비자물가상승률	14.6	16.5	6.6	5.3
십분위분배율*	0.472	0.354	0.443	0.466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 /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

십분위분배율은 각각 '70년은 KDI 추정치이며, '80년, '85년, '88년은 경제기획원 통계임.

물가상승률이 높고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명목임금 및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80년대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정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임금을 보장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선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화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을 공급하고 부동산투기 및 소비성 금융 등을 억제하여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여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다.

한편, 보다 직접적으로는 가계지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제이다. 금년의 경우도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 및 집세가 안정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택 보유와 이용실태를 전산화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세를 중과세하고 토지과표 현실화도 계획대로 '94년까지 60% 수준까지 올리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년중 주택 45~50만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건설도 22만호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정은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임금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금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노사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루어 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정은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임금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금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노사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20~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매월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을 별도로 점검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작년의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농·축·수산물은 수급불안에 따른 물가상승이 없도록 비축과 방출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근로자의 생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문제의 해결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부문의 임금안정 유도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보수 및 서비스 가격은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이 클 뿐 아니라 2차적으로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5%로 책정하고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낮은 생산직과 하위직에 대해서는 7% 수준으로 보수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다만, 보수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경영성과에 따른 업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인센티브 상여금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출연기관은 정부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대로 5% 수준에서 인상토록 하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제

도입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여 연구능력에 따른 차등을 두면서 매년 획일적으로 인상하는 관행을 탈피하는 방안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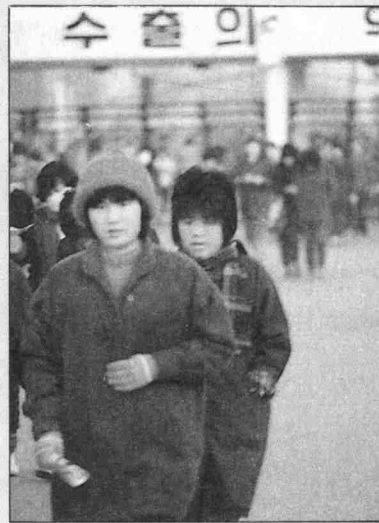
한편 민간부문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87년 이후 종전과는 달리 대기업에서 노조결성과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띠면서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높게 됨에 따라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85년 100 : 112→'90년 상반기 100 : 133).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을 고임금 지불조건으로 '스카웃'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야기하고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대기업 등 주요 '그룹' 기업이 내년도 임금안정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급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 기능인력의 무분별한 '스카웃'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준칙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요망된다.

서비스분야와 제조업의 임금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높은 임금수준은 타분야의 임금상승을 유발하고 특히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서 인력이 제조업을 이탈하여 서비스분야로 유입을 가속화하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금안정과 노사협회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서비스분야의 임금안정을 위하여 우선 임금수준이 높아진 금융기관은 관련협회가 중심이 되어 합리적인 노사협의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임금체제 및 임금관련제도의 개선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적정임금수준에 대해 노사간의 주장이 대립되어 노사분쟁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노총은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여 개별기업 노동조합에 임금투쟁의 명분이 되고 있고, 경총의 임금인상률은 낮게 책정되어 기업의 지불능력과 괴리된 채 협조적인 노사교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각기 채택하고 있는 임금인상의 준거기준이 상이한 데에 기인하고 있으나 일단 임금협약에 의해 임금수준이 약정되면 경영성과와는 무관하게 협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임금협약시에 1년간 지급될 임금수준이 확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전임금인상은 낮게 하더라도 사후에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업적급제도'의 확산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 생산성본부 등에서 업적급제도에 관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적정한 경영성과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개별사업체·사업장별로 특성에 따라 보완하여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금협약시 중요한 고려요소인 노동생산성이 최근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로자의 진정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노동생산성{산출량(또는 부가가치)/노동투입량}은 상용종업원 10인 이상 업체의 상용종업원수를 노동투입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추이를 보면 상용종업원은 감소되는 반면 임시고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노동투입량보다 노동생산성 산출시 적용되는 노동투입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계상되어 1인당 노동생산성이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90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상반기까지 상용근로자수는 5.7% 감소하여 한국 생산성본부가 발표하는 불변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14.7%로 집계되고 있으나 취업자(총고용) 기준으로 할 경우 상반기중 고용감소가 $\Delta 1.9\%$ 에 불과하여 노동생산성은 10.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자 기준 노동생산성은 가구조사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임금결정의 참고자료로 채택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총량면에서 노동투입의 증감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의 보조지표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겠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대책의 착실한 추진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임금수준을 점차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단기간의 임금 상승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임금근로자의 생계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근 우리 경제의 여건과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은 안정된 수준에서 타결되도록 하되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는 중장기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 주택건설을 '90년 6만호에서 '91년에는 8만호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및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서비스분야가 일시적으로 힘이 덜 들고 보수수준도 높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실업의 위험이 큰 반면 제조업분야에서 기술수준을 높이면 떳떳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 근로자에게 야간대학의 입학비율을 현행 20%에서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직장인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등에 전문대나 대학강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그밖에 근로자의 장기저축우대, 사내복지기금의 확대, 공단밀집지역내에 공동구판장, 탁아소 설치를 포함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회 및 생활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산업재해 관련 업무 위주의 현행 근로복지공사의 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토록 할 것이다.

산업평화를 위해 국민 각계가 다 함께 노력해야

정부가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임금인상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희생시켜 기업을 살리려는 정책논리라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업이란 근로자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자기 발전의 기반이며 기업이 잘돼야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개선되고 매년 신규로 배출되는 60~70만의 근로자에게 취업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기업가들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자신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혜택이나 '재-테크'로 부를 축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각계가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우리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 나간다는 자세로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근로기강을 재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업인은 악화된 기업경영환경을 극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과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종업원의 장래를 책임지는 기업가정신을 가다듬고 기업의 실정을 근로자에게 솔직하게 알려 설득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 및 합리적인 임금교섭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약속한 시책은 반드시 실천하고 공정한 조정자로서 적정임금결정에 관한 준거기준을 제시하여 노사간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노력하되 노사관계에 대한 관계법규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노동행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닐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균형·형평·복지 등의 가치는 결코 1~2년 사이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의 해결 노력을 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중에 성안될 제7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균형과 생활의 질에 대한 기본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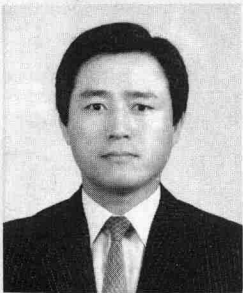
올해의 경제운용방향에서 중점시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다. 균형발전이라 함은 그간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농어촌과 낙후개발지역, 근로자 및 저소득층 등도 이제는 같이 발전하면서 더불어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자 하는 시책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란 그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누증되어 왔던 교통난·환경공해·주택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균형발전과 생활의 질 향상은 7차계획의 기본목표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올해는 7차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해이므로 이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사실 균형발전과 생활의 질에 관한 논의는 과거 경제개발계획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변경된 10여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87년까지만 해도 관련시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3저 효과에 따른 엄청난 국제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하여 '87~'88년부터 급격하게 취해진 일련의 균형과 생활의 질 관련시책들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국민연금제도·최저임금제도 등 기본적 복지제도의 도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발표된 농어촌종합대책, 저소득층지원시책과 노사관계의 자율조정원칙 및 이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개정, 서해안 개발사업, 주택 200만호 건립, 맑은 물 공급대책 등이 최근 수년간에 취해졌던 조치들이다.

이와 같은 시책들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국민적 욕구를 수용하면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균형발전과 생활의 질이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에는 경제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사태로까지 진전될 수



장수만

경제기획원 사회개발계획과장

있다. 따라서 그간의 획기적 시책들은 균형과 생활의 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내재하던 갈등을 어느 정도 순화시킬 수 있었고 향후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균형발전과 형평·복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단기간 내에 너무 급격하게 취해진 시책들은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을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생산성이 취약한

부문으로 투입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제되지 못한 욕구에의 선부른 순응은 오히려 욕구수준 자체의 증폭을 초래하였다. 즉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이기는 하였으나 그 대응방법상 문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과거 30여년간에 걸쳐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성장동인들을 뿌리채 흔들리게 하였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균형·형평·복지·생활의 질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고 하여도 완벽한 상태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경제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할 염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3~4년간의 급격한 균형·형평·복지·생활의 질 관련시책의 확대로 말미암아 향후 이를 추진해 나갈 기본적인 자원의 확보는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가치에 대하여 상황에 맞게끔 달성하고자 하는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절한 속도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실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운용계획상의 균형발전과 생활의 질 향상

올해의 경제운용방향상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시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기반 약화 등 최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당면한 어려움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잠재력의 보육과 함께 균형·형평·복지·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균형·형평·복지·생활의 질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적

농어촌의 발전문제는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 중의 하나이다.



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농어촌 발전,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도시교통난 완화, 환경오염 방지,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등이다.

즉 새로운 시책의 획기적인 제시보다는 기존의 시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정책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하겠다.

농어촌 발전

농어촌의 발전문제는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 중의 하나다. 우리 농촌은 영농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도 충분치 못하며, 도로·상하수도·교육·의료 등 생활기본시설이 도시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어촌에 대하여 각종 지원책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은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UR협상이 급진전됨에 따라 농업부분의 대외개방이 조만간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운용계획은 대외개방이라는 새로운 여건하에서 농어촌 발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시책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올해의 경제운용방향에서 중점시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다.

균형발전이라 함은 그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농어촌과 낙후개발지역, 근로자 및 저소득층 등도 이제는 같이 발전하면서 더불어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자 하는 시책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란 그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누증되어 왔던 교통난·환경공해·주택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농업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점이다. 농지구입자금과 임차료 선급금 지원규모를 '90년 2,200억원에서 '91년 2,842억원으로 확대하여 영농규모확대를 도모하고, 우량농경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영농조합·위탁영농회사 등 공동영농조직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경지정리·기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동시에 통일버는 생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양질미 위주의 생산에 주력토록 하며, 쌀 작물과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품질개량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망품목은 수출산업으로 육성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급격한 가격등락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안정시책을 강화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가공산업에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규모를 '90년 5,150억원에서 '91년 6,860억원으로 대폭 확대토록 하였다.

셋째, 농업소득만으로는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토록 하였다. 농공지구의 지정을 확대('90년 215개소→'91년 260개소)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의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다. 동시에 농어촌 특산단지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토록 하며, 희망농가의 전업을 촉진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농어촌을 단순한 식량공급기지가 아니라 낙후성을 탈피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농어민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확대('90년 16개면→'91년 121개면)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다.

저소득층과 불우계층 지원

그동안의 경제성장 결과 우리 사회에서 절대빈곤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정부나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과 불우 노인·모자세대·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과 함께 전담요원의 확대배치·고용기회의 확충 등 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더욱 많이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수준을 확대하였다. 즉 생계비 지원수준을 '90년의 월 3만 9천원에서 '91년에는 4만 3천원으로 상향 조정하

생업자금 융자규모를 '90년의 240억원에서 '91년 280억원으로 확대하고 빈곤의 세습화를 단절시키기 위해 자녀들에게는 실업계 고등학교 전학년까지의 학비를 지원토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에 소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이 소기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요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90년 324명이었던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91년에는 2,000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저소득층 지원행정

318개소에서 '91년에는 726개소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및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의 질 향상대책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대도시 교통난·환경오염·주택난·수도권 인구집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애로요인들이 심각하게 누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단순히 생활상의 불편의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의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애로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특별회계를 신설, 지하철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토록 하였다. 지하철 특별회계의 재원은 자동차관련 관세 및 휘발유 특소세액의 10%로 조성되며 2,000년대초까지 6대 도시의 지하철도 건설사업에 투입될 14조원 중 4~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맑은 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등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를 '90년 2,135억원에서 '91년 2,830억원 규모로 확대할

그동안의 경제성장 결과 우리 사회에서 절대빈곤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정부나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과 불우노인·모자세대·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과 함께 전담요원의 확대배치·고용기회의 확충 등 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더욱 많이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수준을 확대하였다.

었고, 의료보호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을 인상하였으며 결식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직업훈련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취업망을 활용한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소규모 자영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불우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시책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기존의 노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대해서는 노인활동비 등을 신규로 지급하며 저소득층의 취업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탁아소를 '90년의

계획이며, 대기보전·환경유해물질 규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이다.

기본생활 욕구 중의 하나인 주택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다. 주택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주택 200만호 건설의 중기계획 아래 '91년중에도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즉 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소형 위주로 45~50만호를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75% 수준으로 제고토록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7만호 등 22만호의 소형 주택을 공급해 나가는 한편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및 가수요 억제에 위한 전산화의 추진과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였다.

한편 수도권지역에의 과도한 인구 및 경제력 집중으로 교통·주택·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와 효율적인 국토이용도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 억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생활 욕구 중의 하나인 주택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다.

동 재원을 지방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수도권정비 정책을 전면 재평가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은 7차 5개년 계획에 반영·추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의 경제운용계획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 각 경제주체들의 보상욕구 상존, 그리고 대외개방 압력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형평과 복지의 증진은 우리 경제사회를 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인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접근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성장잠재력의 보육이라

는 방향과 함께 조화될 때에 참다운 결실이 맺어진다고 보았으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정책을 최대한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하였다.

올해의 운용계획에서도 물론 많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균형·형평·복지 등의 가치는 결코 1~2년 사이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의 해결 노력을 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중에 성안될 제7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우리 모두가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남원**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

세계경제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위한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와 조화되는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세계경제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지금 세계경제는 동서독 통일, 소련·동구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지역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의 다극화 등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위한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90년대 이후에 적용될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최종타결을 짓지 못하고 금년 초로 협상시한이 연장되는 등 마지막 산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권으로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30여년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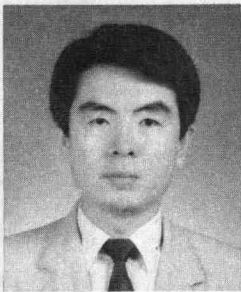
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을 통해 선진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와 조화되는 경제구조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있어 앞으로의 2~3년간은 선진경제로의 기반구축과 국제국가로의 도약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선, 현재 계속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해서는 현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전개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첫번째로는 미국정부의 의회에 대한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시한인 금년 2월말까지 각국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두번째는 금년 2월말까지 협상을 추진하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를 전망해 볼 수 있



현정택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총괄과장

고, 세번째로는 각국이 자국의 기존 입장만을 계속 고수하여 협상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협상의 타결 또는 결렬이 모호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앞으로의 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또는 장기 연장될 경우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실질적인 실패로 간주되어 세계경제는 물론 국제무역 환경에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즉,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지역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이며, 시장개방압력과 자의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성행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해결은 주로 쌍무적인 방식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는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협상참가국들은 협상 냉각기간 동안 자국의 입장을 재검토 한 후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EC 등 협상 주도국들간에 협상타결을 위한 집요한 협상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선진개도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협상기여 압력이 예상되고, 이같은 현상은 다자간 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쌍무협상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의 열쇠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페만사태의 항배

및 미국과 EC간 타협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다음으로 소련의 '新思考'와 '페레스트로이카'에 기초를 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개방움직임은 '89년 하반기 이후 동구제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89년 12월에 개최된 미·소 몰타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후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동서간의 대결과 냉전구조는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소련·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동안 이룩한 개방과 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시장기능과 사유재산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적 불안 등 과도기적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련의 경우 경제개혁의 앞날에 불투명한 요소를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소련 최고회의는 시장경제개혁에 관한 리슈코프의 소련정부안과 샤타린案(이른바 '500일 계획')을 절충한 고르바초프의 최종안을 채택하였으나, 이는 샤타린안과는 달리 계획의 구체적 일정이나 추진계획이 결여

되어 있다.

또 각 공화국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소련경제개혁의 장래를 극히 흐리게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소련에 대한 GATT 옵저버 자격부여('90년 5월), 소련의 주종 수출품목인 원유가상승으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EC 및 G7국가들의 대소지원 움직임 등은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앞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의 북방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앞으로는 단순한 교역확대의 차원을 넘어 합작투자·자원개발·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심화·발전될 것이다. 특히 최근 소련 및 동구권국가와의 수교, 중국과의 무역대표부 개설 등의 관계개선 성과는 향후 경제 교류, 협력 증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권에 대한 진출은 기존 서방국가로의 시장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 새로운 시장이라는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적 영원인 남북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인가

한편 세계경제는 EC를 축으로 한 유럽경제권과 미국·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북미경제권,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 경제권으로 3극화되는

지금 세계경제는 동서독 통일, 소련·동구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지역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의 다극화 등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위한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추세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EC 통합 움직임은 '70년대 유럽경제의 상대적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85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바, '90년 10월 현재 EC통합백서에서 제시된 총 282개 법령 중 약 170개 정도의 법령이 이미 제정되는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단일화를 위한 법령제정 추진과는 별도로 EC통합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정치 및 통화동맹에 관한 논의까지 구체화되면서, 경제통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EC통합 움직임은 EC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요새화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려이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EC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결과 동 협상이 실패할 경우 EC의 요새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통일독일을 포함한 통합EC에 EFTA, 소·동구지역이 가세한 '범유럽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은 '80년대 후반 들어 대규모 무역적자에 직면함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추진과 병행하여 상호합의가 가능한 국가와의 자유무역지대(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캐나다간의 FTA는 '89년 1월

에 이미 발효되었고, 멕시코와는 현재 구체적인 협정체결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나아가 여타 중남미 국가와도 동 협정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하여 최근 EC통합에 자극을 받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한국·일본·대만 등 아·태지역 국가와의 FTA체결 가능성까지 연구를 추진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그 타결에 실패할 경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촉진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아·태지역 협력관계는 종래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및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 등 주로 민간차

원에서 진행되어 오다 '89년 제1차 아·태각료회의(APEC) 개최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작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아·태각료회의에서 '인력자원개발' 등 7개의 협력사업을 공동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아·태각료회의에서 동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EC·FTA와 같이 가시적 기간내에 큰 성과를 이루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EC통합·FTA 등 지역주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큰 관련이 있다. 만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조기에 타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교통·통신의 발달과 동서화해 분위기 속에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국경이 갖는 의미가 없어지고(borderless), 세계화(globalization)되는 추세에 있는바, 이에 우리 경제의 각종 제도와 국민의식도 국제화·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국제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첫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주로 대외경제쪽에서 찾아야 한다고 볼 때 동 협상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국제화·선진화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전반에 걸친 대내 경쟁촉진 시책과 함께 개방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건설업 등 일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경우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농산물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없더라

도 어차피 농업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고, '97년까지 농산물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GATT에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이 협상을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수립,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89년 4월)을 보완·발전하고 아울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협력을 본격화해야

둘째, 소련 및 동구권 국가와의 수교, 중국과의 무역대표부 개설 등 지금까지 이룩한 북방국가와의 관계개선 성과를 토대로 북방국가와의 경제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소련과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2차 정부고위급 회담을 통해 소비재 공급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교역·투자·자원개발·과학기술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조정하기 위한 '한·소 경제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련·동구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산업생산기술의 접합을 통한 과학·기술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産·學·研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기술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다.

이외에도 북방국가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위한 전문가 파견과 초청훈련사업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교통·통신의 발달과 동서화해 분위기 속에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국경이 갖는 의미가 없어지고, 세계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우리 경제의 각종 제도와 국민의식도 국제화·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확대해 나갈 것이다.

통합EC시장과 아·태지역 협력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셋째, EC통합 등 지역주의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진출을 본격화해 나가고,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EC통합 이전에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통합 후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출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특히 동서독 통일에 따른 舊東獨의 개발수요에 대비한 경험 확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 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역내 선·개도국의 중간적 입장에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장 및 자원 확보, 기술이전 등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역내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아·태각료회의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동 회의시까

지 협력사업 추진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역내 무역자유화 등의 논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남북 경제교류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넷째,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다져놓은 상호이해의 기반을 토대로 남북 경제교류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자교역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설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경제교류의 제도적 추진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공동기구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량을 증대시켜야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지위향상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

의 개발경험 전수, 기술이전 확대 등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개발에 기여해 나가고, 선진국들과는 우리의 능력범위내에서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정책협조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대외진출 기반을 넓히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국제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경제질서와 조화되는 국내 대응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마지막으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제반시책 이외에도 국제경제질서와 조화되는 국내체제의 정비에도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화에 상충되는 제반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에 대한 국제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국제전문가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해외근무 기회를 늘려나가는 한편, 통상협상 및 국제회의 참석을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국제협상에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다. 또한 주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화 측면에서는 고려를 위한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때에 비로소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이라는 커다란 목표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성장구조가 개선되는 모습

김병일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장

한 국은행이 추계·발표한 3/4분기(7~9월)의 경제성장률은 9.6%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90년 9월말까지의 GNP 성장률은 9.8%로 추계되고 있다.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3/4분기에는 제조업 성장이 9.3%로서 '89년 3/4분기의 2.4%에 비하여 크게 신장되었고, 실질상품수출(물량기준)도 10%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마이너스 6.9%에 비하여 상당히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어 구조면에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월에는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산업활동이 다소 위축

10월중 산업생산은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단축과 9월중 추석연휴에 대비하여 생산을 앞당긴 데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9월에 비해 5.5% 감소하였고, '89년 10월에 비해서는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10월중 제조업 가동률도 9월(82.0%)에 비해 4.8% 포인트 낮아진 77.2%를 기록하였다. 추석연휴가 끼어있는 달의 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과거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10월의 산업생산 저조나 가동률 저하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투자관련 선행지표는 계속 높은 증가세 지속

향후의 기업 설비투자 수준을 예고해 주는 국내기계수주액(선박 제외)과 기계류수입허가액은 10월중 '89년 10월에 비해 각각 62.0%와 48.8%씩

증가하여 향후 설비투자가 계속 활발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건설경기를 나타내 주는 건축허가면적은 10월에도 주거용과 공업용 건축허가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89년 10월에 비해 37.8% 늘어났고, 건설업체의 국내수주액도 '89년 10월대비 30.7% 증가하였으나 9월(68.7%)보다는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11월부터 수출은 소폭 회복,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잠정 집계된 11월 수출은 추석연휴의 여파에서 벗어나 '89년 11월에 비해 5.7% 증가한 약 60억불을 나타내었고, 수입은 39.2%나 늘어난 76억 3천만불을 기록하여, '90년 11월말까지의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3.1% 늘어난 579억불, 수입은 13.6% 증가한 635억불을 나타냈다. 11월중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상승과 함께 원유도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90년의 연간 수출액은 '89년보다 3.4% 늘어나 645억불, 수입액은 13.8% 증가한 700억불 수준으로 잠정 집계된다. 10월말까지의 품목별 수출동

〈표 1〉 추석연휴 전후의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88년			'89년			'90년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30.3	9.0	17.6	5.5	2.7	1.1	5.6	16.1	3.2
제조업가동률	82.0	80.2	80.5	80.7	78.3	77.9	80.0	82.0	77.2
추석일자	9월 25일			9월 14일			10월 3일		

**'90년 11월까지 발생한
316건의 노사분규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224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하여
'89년 57.2%보다
제조업의 노사분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향을 보면 선박(전년동기대비 57.8%), 신발(27.6%) 등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자동차(△13.3%)·섬유(△3.2%)·철강(△2.2%) 등은 오히려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의 주요한 수출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90년 10월말까지 전년동기대비 각각 5.2%, 9.7% 감소함으로써 대미무역흑자(통관기준)는 20억불로서 전년동기의 38억불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대일무역적자는 49억불로서 전년동기의 33억불보다 크게 늘어났다. 반면 유럽과 동남아에 대한 수출은 각각 17.4%, 15.8% 증가하였고, 특히 소련·중국·동구 등 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금액은 작으나 '90년 9월까지 33.8%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출시장의 다변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월중 경상수지는 5억 7,900만불의 적자를 나타내 7월부터 9월까지의 3개월 흑자에서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이로써 '90년 10월말까지의 경상수지는 13억 2,300만불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전년동기의 37억 7천만불 흑자에 비하여 51억불이나 줄어든 숫자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수입 증가에 따라 '90년의 연간 경상수지적자는 20억불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안정 추세 지속

10월중 경제활동인구는 '89년 10월에 비해 약 41만명 늘어난 데 비해

취업자는 약 38만명 늘어남으로써 실업자가 2만 4천명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2.1%에서 2.2%로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안정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고용구조를 보면 제조업 고용이 6만 4천명 늘어나 지난 6월 이래 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부문은 건설업(20만 7천명), 도·소매업(12만 8천명) 등을 중심으로 높은 고용증가세(57만 5천명)를 지속하였다.

'90년 11월까지 노사간 타결된 통상 임금기준 인상률은 평균 9%로서 전년(1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기준으로는 '90년 8월까지 19% 상승하여 기업들이 표면상 한 자리수의 임금인상 방침에 순응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90년 11월까지 발생한 316건의 노사분규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224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하여 '89년(57.2%)보다 제조업의 노사분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생산차질액의 절대규모는 전년동기의 35.8% 수준으로 감소되었지만 분규 1건당 생산차질액은 '90년 1~11월중 45억 5천만원으로 전년동기의

〈표 2〉 수출입 동향

	'90년 1/4	2/4	3/4	10월	11월
수출증가율(통관,%)	△ 1.6	4.4	6.0	△0.3	5.7
수입증가율(통관,%)	12.7	10.0	8.3	14.8	39.2
경 상 수 지 (억불)	△10.0	△5.7	9.2	△5.8	-

〈표 3〉 노사분규 건수 및 생산차질액

	산업별 분규건수				생산차질액(B)	분규 1건당 생산차질액 (B/A)
	계(A)	제조업	운수업	기타		
'89년 1~11월	1,585	907	424	254	4조 199억원	25억 4천만원
'90년 1~11월	316	224	41	51	1조 4,387억원	45억 5천만원

**11월중 토지가격은
일부 도시지역의 대지와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용 대지가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은
거래가 한산하고
지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억 4천만원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물가는 소폭 하락,
부동산가격 안정**

11월중 물가는 10월에 비해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가 각각 0.1%포인트씩 하락하여, 전년말에 비해서는 도매 6.7%, 소비자 9.1% 각각 상승하였다. 따라서 '90년말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한 자리 수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전년말대비 상승률 9.1% 중 농축수산물에 3.55%p, 공산품은 1.32%p, 공공요금은 1.32%p, 집세는 1.55%p, 개인서비스요금이 1.26%p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11월중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에 비해 1.2% 상승하여 10월의 전월대비 1.4%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 5개 직할

시가 1.8%, 중·소도시가 0.3% 각각 상승하였다. 11월중 토지가격은 일부 도시지역의 대지와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용 대지가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은 거래가 한산하고 지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총통화 증가율 19%로 둔화

11월중 평잔기준 총통화는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하여 10월(20.6%)보다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한편 은행대출금은 금년 1~11월중 12조 2,398억원이 공급되어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자금의 종류별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정책금융의 비중(68.1%)이 크게 높았으나 7월 이후 일반금융비율이 높아진 후 이런 현상이 11월에도 지속되었다.

산업별로 자금공급동향을 보면 1

~9월중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은 전년말대비 17.8% 증가에 그쳐 전년동기(20.1%)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농림수산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각각 33.9%, 18.8%, 9.9% 증가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시중자금사정은 기업의 단기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회사채발행물량 확대와 통화채권 순증발행 등으로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월말 17.93%에서 11월말에는 18.43%로 상승하는 등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10월중 경기상태 나쁘지 않아

10월중 산업활동의 위축으로 경기동행지수가 전월과 보합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6% 감소하였으며,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1.0% 증가하였다. 10월중 산업활동이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으나 이는 추석연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되며, 투자관련 지표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1월 수출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0월중 경기가 하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표 4〉 자금종류별 은행대출 동향

(未殘基準, 단위 : 억원)

	1989		1990		
	11	누 계	10	11	누 계
정 책 금 융	1,268	35,467	2,400	1,905	53,381
일 반 금 융	10,025	77,918	3,100	8,224	69,017
계	11,293	113,385	5,500	10,129	122,398

※ 외화대출 제외



유가폭등과 국제경제 변화 추이

배광선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최 근의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 경제는 유가폭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는 나라별로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물가급등과 더불어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나타나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으나 일본경제는 유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구조, 선진주요국 중 가장 많은 원유비축 확보, 낮아진 석유의존도 등의 요인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상수지 적자폭의 감소로 해외부문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내수부문이 주도하는 경기확대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경제는 최근 2~3년간 유럽주요국 중 최대의 호황국면이 지속되었으며 최근 물가불안을 우려한 고금리 정책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기확대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성장·무역

미국경제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최근 미국경제는 경기침체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GN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 설비투

자 등 내수부문이 크게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최근 몇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주택착공 건수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으로써 1982년 불황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분기별 실질 GNP 성장률 추이를 보면 1/4분기에 1.7%(前期比, 年率), 2/4분기에 0.4%로 성장이 크게 악화되었다가 3/4분기에 1.8% 성장으로 일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4/4분기에 가장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3/4분기에 8.0%(전기비 연율)를 기록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10월중 생산자 물가는 1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유가폭등 영향이 물가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해외부문은 개선되었는데 수출(f.a.s, 季節非調整値)은 '90년 1월~10월 중 3,271억 5,30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3,028억 1,500만달러에 비해 8.0% 증가했으며, 수입(customs, 季節非調整値)은 4,130억 5,20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3,944억 2,100만달러에 비해 4.7% 증가하는 데 머물러 무역수

지적자는 885억 3,0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3.4% 감소하였다.

품목별 수출입 추이를 보면 동 기간 중 자본재 수출은 전년동기비 10.2%, 소비재는 2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원자재의 수출은 전년동기비 불변, 식료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수입에 있어서는 식료품 수입은 6.3%, 원자재는 2.8% 증가했으나 자동차 수입 등이 감소하여 총수입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에너지·농산물을 제외한 부문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불변으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올해는 유가가 작년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재고수준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적절한 재고관리에 힘입어 과거 불황기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달러貨의 약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와, 일본·서독 등 유가상승의 영향을 적게 받는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외부문의 급격한 침체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되

최근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GN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
설비투자 등 내수부분이 크게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최근 몇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주택착공 건수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으로써
1982년 불황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기 때문이다.

일본경제 : 내수주도의 성장지속

일본경제는 그동안 민간설비투자 등 내수부분 중심의 호황국면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의 유가급등·금리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둔화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47개월째 경기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분기별 실질 GNP 성장률을 보면 1/4분기에 전기비 연율 10.8%의 성장을 기록한 이후 2/4분기에 3.6%로 성장이 다소 둔화됐으나 3/4분기에는 4.1%로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3/4분기의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내수부분의 성장기여도는 0.9%, 해외부문은 0.1%로 '88·'89년에 이어 내수가 주도하는 경기확대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내수부분 중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은 민간설비투자는 최근 3년간 저금리와 내수확대를 배경으로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작년 상반기에는 엔화하락, 채권가하락, 추가하락 등 트리플 약세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였다.

3/4분기에는 금융긴축의 영향으로 투자마인드가 위축된 것으로 보았으나 높은 기업이익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크게 둔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3/4분기중 전년 동기비 5.9%, 출하지수는 6.7% 증가하여 재고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어 소비세 도입전의 일시적인 수요증대가 있었던 '8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었다.

실업률은 2.1%로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렀고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수÷유효구직수)은 1.4%로 수요초과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부문을 보면 작년 1~10월 중 수출(f.o.b., 季節非調整値)은 2,329억 3,2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2.0% 증가했으나 수입(c.i.f., 季節非調整値)이 2,116억 5,7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21.7% 늘어남에 따라 무역수지흑자는 447억 6,7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18% 줄어들었다. 이는 수출은 대EC·아시아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늘었으나 철강·반도체·전자부품의 수출이 줄어드는 데 따라 총수출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수입은 원유수입 추가부담, 내수호조의 지속에 따른 자동차·사무용기기·고급미술품 등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총수입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경제 : 견실한 성장지속

호황을 지속하던 독일경제는 통일경기에 힘입은 성장호조 요인보다 금융긴축에 따른 성장둔화 요인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분기별 실질 GNP 성장률을 보면 1/4분기에 전기비 연율 12.0%, 2/4분기에 -2.0%, 3/4분기에 8.2%를 기록하였다. 2/4분기의 성장률 둔화는 1/4분기의 이상난동의 지속, 이주민 급등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크게 호조를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과 마르크화 강제로 인해 해외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진 데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향후에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민간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아 성장호조 국면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금리는 그동안 통독비용 증대, 동·서독 통화교환에 따른 통화량 팽창, 소비재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89년보다 낮아졌으나 최근에는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89년에 3.0%의 상승률에서 2/4분기에 2.3%로 낮아졌으나 3/4분기에

**일본경제는 그동안 민간설비 투자 등
내수부문 중심의 호황국면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의 유가급등·금리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둔화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47개월째 경기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8%로 높아졌다.

그동안 독일경제 예측자들은 비관론과 낙관론을 각각 주장해 왔는데 낙관론자들은 소득세 감면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증대,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확보에 힘입은 경쟁력 제고, 단일시장 추진에 따른 EC회원국들의 설비투자 붐에 힘입어 서독 자본재의 수출증대 지속, 상반기까지 제조업 생산증가, 소매판매의 호황 등을 주장해 왔다.

비관론자들은 금융긴축에 따른 투자마인드 위축, 통독비용 증가로 대기업 금융지원이 제약되는 데 따른 민간설비투자 부진, 설비가동률이 과거 호황기를 상회하는 90% 수준으로 한계에 달한 점, 최근 2~3년간 이상난동에 힘입은 주택건설 경기호조의 지속여부 불투명, 해외부문이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 유가급등의 영향 등을 들었는데 향후에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상존하는 가운데 비관론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경제의 무역수지 추이를 구서독 기준으로 보면 '89년까지 무역수지흑자는 1,347억마르크로 사상 최고의 수준이었으나 작년 1~7월까지의 무역수지 흑자는 728억 9,600만마르크로 전년동기비 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흑자가 줄어든

것은 마르크화의 주요 교역대상국 통화에 대한 강제 지속, 주요 교역상대국의 내수 부진으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감소, 서독의 주종 수출품이었던 각종 자본재 및 소비재가 동독경제의 재건을 위한 공급재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점 때문이었다.

금리·환율

작년의 국제금리 추이를 보면 미국

금리만 경기침체를 반영·하락하거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반면 일본·독일금리는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미국의 재할인율은 '89년 3월초에 6.5%에서 7.0%로 인상된 후 12월 들어 6.5% 인하되었으며 정책금리인 연방자금금리는 상반기에 8.1%~8.3%에서 유지되다가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가

〈표 1〉 미·일·독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

		1988년	1989년	1990년		
				1/4	2/4	3/4
실질GNP성장률*	미	3.9	3.0	1.7	0.4	1.8
	일	5.7	4.9	10.8	3.6	-
	독	3.4	4.0	12.0	-2.0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미	4.1	4.8	5.3	4.5	5.5
	일	0.7	2.4	3.4	2.5	2.7
	독	1.2	3.0	2.7	2.3	2.8
실업률	미	5.5	5.3	5.3	5.3	5.6
	일	2.5	2.5	2.2	2.1	2.1
	독	8.7	7.9	8.1	7.1	6.4
무역수지 (억달러)	미	-1,185	-1,090	-160.2	-123.1	-306.8
	일	776	643	124.2	133.5	157.7
	독	729	716	217.9	166.3	-
환율 (기말기준)	¥/\$	126.0	143.4	157.2	152.9	147.3
	DM/\$	1.780	1.698	1.694	1.672	1.590
유가(\$/배럴)	Dubai유	13.2	15.6	16.5	14.0	22.9

자료 : AP-DJ IMF, IFS, September 1990. OECD, Foreign Trade, October 1990.

* '90년 분기별 실적은 전기비 연율.

호황을 지속하던 독일 경제는
 통일경기에 힘입은 성장호조요인보다
 금융긴축에 따른 성장둔화 요인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어져 '90년 11월 7.5% 수준에 머물렀다. 이밖에 기업어음(CP) 금리,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상반기에 8.3% 안팎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반기부터는 소폭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일본금리는 '90년중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재할인율은 4월말 5.25%에서 8월말에 6.0%로 추가 인상됨으로써 9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콜금리 등 단기금리도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장기 정부채권 수익률은 유가상승에 따른 여파로 8.0%선에 근접하고 있다.

독일금리는 90년초부터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책금리인 롬바르트금리는 '90년에 8.0%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11월초에는 8.5%로 조정되었으며, 재할인율은 6.0%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 단기시장금리와 장기채권 수익률은 통독에 따른 채권공급 확대, 금리상승 지속추세를 반영해 8월 이후 9.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90년 상반기에 일본 엔화에 대해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독일 마르크화, 영국 파운드화 등에는 '89년말 대비 1~3% 절하된 수준에서 머물렀

고, 실효환율은 1~1.5% 절하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달러화가 하반기에는 미국경제의 침체, 미·일간 및 미·독간에 금리차가 역전됨에 따라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대폭 절하되고 있다. 특히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서는 지난 4월말에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60엔을 넘어섬으로써 '89년말 대비 9% 이상 절상되기도 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폭락세로 반전됨에 따라 '90년 11월에는 '89년말 대비 10~11% 절하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原油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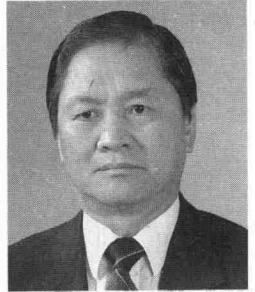
'90년의 국제원유시장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라는 중동사태를 분기점으로 급변하였다.

'9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국제원유시장은 쿠웨이트, UAE 등 일부 산유국의 계속된 증산으로 공급이 과잉되어 중동산 원유가는 배럴당 13달러선까지 폭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말 OPEC 총회가 기준가격을 배럴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인상하는 등 유가 회복 방안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는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은 국제원유시장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UN의 금수 등 일련의 제재조치에 따라 이라크와 쿠웨이트산 원유수출(하루 약 400만배럴)이 중단되자 유가는 일제히 폭등, 북해산 브렌트유가의 경우 한때 지난 '79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42달러선을 기록하는 등 이라크의 침공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8월말 급격한 시장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OPEC 회원국이 원유생산을 늘리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따라서 사우디가 하루 530만배럴에서 800만배럴로 증산하는 등 OPEC 회원국의 추가생산은 하루 약 400만배럴에 달하여 이라크와 쿠웨이트로부터 금수된 400만배럴을 대부분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수급상 큰 애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30달러선을 지속하는 것은 겨울철 성수기를 맞고 있는 데다가 심리적 불안에 따른 사재기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PEC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산유국이 고유가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생산을 하고 있어 이라크군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과의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국제원유시장은 수급사정이 점차 완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남원**

예측 가능성



김정용
농림수산부 농업협력총상관

우리가 내일 일이나 장래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일정한 가정하에 계획을 세워 행동을 하면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성의 폭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사회전체가 보다 안정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만 하더라도 6·25와 같은 전란에 시달리면서 도무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술한 정치적 변혁의 불안한 나날을 살아왔고, 또한 경제면에서도 반세기동안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경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국민소득 역시 크게 늘어나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으나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는 임기응변과 반사적 대응의 자세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사회전체의 예측 가능성은 아직도 낮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전체의 시간적·금전적 낭비 역시 엄청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에서 경험한 바이지만 여름휴가를 갈 때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적을 때는 20%, 많을 때는 50%까지 할인혜택을 주는데 이러한 큰 폭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호텔업자나 항공업자들이 예약을 받음으로 해서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어 경영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사전에 아무런 예고없이 즉석으로 구입할 때는 가장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대접도 못받게 되는 것을 여러번 경험하였다. 그것은 예약없이 즉석에서 요구하는 호텔이나 항공편 등은 항상 불확실성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여행객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차이는 일인당

GNP가 얼마나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나, 그 나라가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세운 휴가계획이 그대로 지켜지고, 큰 세미나나 공청회 등이 3~4개월 전에 통보되며, 자료 즉석배포의 긴급회의가 아니라 회의자료는 적어도 2~3일 또는 일주일 전에 제공되어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안정된 사회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좀더 성숙되고 발전된 사회가 되려면 모든 면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겠다. 국민 개개인은 매사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서로 아껴주며, 사회는 미리 예약하는 사람을 우대하며 절감된 경비를 되돌려줄 수 있어야겠다.

국가도 장래 일을 예측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대비할 시간과 대처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금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막중한 일을 사전에 대비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정부가 협상에 대해 사전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민들에게 그때 그때 협상의 진행과정과 예측되는 결과를 알려주고 국민과 같이 걱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결국 국가의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어서 사회 구성원이나 그 정책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부분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방법이 주어지는 정책, 즉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어야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원**

신중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김건호
건설부 신도시건설기획관

일 마전 정부의 추곡수매가 결정을 놓고 일부 농촌에서 수매를 거부하며 추곡을 불태우고 안면도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시설 장소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 사건이었다. 무릇 정부의 모든 정책결정은 국민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60~'70년대와 같이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아무리 국민을 위한 선의의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 못하면 정부의 정책으로 성립될 수가 없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활동을 주도하고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다. 사회가 계층별로 전문화되고 집단별로 이해득실 또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찬반의 목소리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증폭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론에 보다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하며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현명하게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골격이 마련되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자. 이러한 골격을 미리 언론에 제공하여 반응을 볼 수도 있으며 전문가들의 토론회·공청회를 열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에서 우리 경제관료들은 상대측과의 협상이나 토론문화에 익숙해지는 기술이 보다 절실하며 또한 백가쟁명의 의견을 전략적으로 집약하는 슬기로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보면 반대의 목소리가 조직화되어 있는 반면 찬성의 목소리는 조직화되지 못하고 덤덤한 반응일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이는 물론 지금까지의 정부시책 중에는 올바르게 알려지지 못한 것도 있고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한 시행착오도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된 불신감으로 인한 업보라고도 생각한다.

어찌하였건 우리 공직자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변화된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렴하다 보면 정책시행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특히 찬반의 여론속에서 이해집단간의 대립된 의견을 조정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화살도 맞을 수 있으리라.

이럴 때 우리들은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정책기조는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바람이 좀 잦게 불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한번 약속한 사항은 근본적인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신중하게 수립하고, 결정된 정책기조는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자. 이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일이며 특히 우리 후배들에게는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다. **남림**

근검절약과 질서의식의 생활화



박옥종
해운항만청 공보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들을 살펴 보면, 전에 없이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포악해져 가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다.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들이 좀더 생각을 깊이 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정했다더라면, 지금처럼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 가져보기도 한다.

왜, 무엇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국민생활을 좀먹는 과소비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는지, 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한창 '새마을운동'이 불꽃처럼 도시와 농촌에 번지던 60년대에는 우리네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한 마을에 흑백 TV를 가진 집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인생초년생도 그리 많지 않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네 생활상은 그때와 비교하면 풍요롭다 못해 너무 복에 겨워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이다. 분에 넘친 과소비가 부끄럽없이 자행되고 우리 모두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돼버렸다.

지난날 어려웠던 그 시절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나만을 위한 부의 축적에 발버둥치고 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성서에 '우리가 살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고 했는데 모든 재물을 관속에 넣어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재물에 너무 욕심부리는 것은 금물이 아닌가?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기 마련이다. 이제는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평수만 큰 아파트를 골라서 구입하는 방법 등은 지양하자. 또한 외제물품이면 사족을 못쓰는 외제병에 걸린 자들도 반성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치와 낭비가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물가오름세에 악영향을 끼치게 한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과소비 못지 않게 또다른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곳곳으로 번져 나간 자연환경의 오염은 우리가 안심하고 마셔야 할 식수에까지 침투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교통사고는 부끄럽게도 세계 제1위를 기록하고 옛부터 미풍양속으로 자랑하던 경로효친사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열심히 일하여 저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성실한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고, 제 할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갈등과 마찰의 소리만 높아가는 현실을 보면 걱정스럽기 이를 데 없다. 특히 50억 세계인을 열광시켰던 '서울올림픽'의 영광과 그 귀한 성공마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불안요소들을 그냥 이대로만 방치해 두고 말 것인가? 이대로 전략할 수만은 없다. 이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로마제국의 멸망이 국민정신의 타락으로 인해 빚어진 사실을 '강건너 불보듯'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 국민생활을 좀먹는 과소비풍조 즉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땅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도 회복시키며, 근검절약을 생활화할 뿐 아니라, 토지매입과 아파트분양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말아야 하겠다.

영업용차 기사나 자가승용차 운전자도 질서의식으로 운전하며 교통사고율 '세계 제1위'라는 불명예를 씻어버리고, 자연환경도 질서있게 정화하여 선진국민으로서의 '세계속의 한국인'임을 자랑 삼자.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밝고 환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남원**

전산망 유감



정흥식

전산망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업 마전에 전자공학회 주최로 여의도에서 국가기간전산망 발표회가 있었다. 전산망 사업과 정보화·자동화에 관심이 있는 산업계·학계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국가전산망 구축과 향후 사업계획을 두고 진지한 토의를 벌였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을 계속하여 이 사업에 관여하면서 저간의 물이해 속에서도 우리 국가 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필자로서는 별다른 감회가 있었다.

국가전산망 사업을 처음 구상하던 '80년대 초반은 국내 정보산업이 불모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기간전산망의 구축에 앞서 국내 수요의 창출과 정보산업의 육성 등 사전 환경조성이 시급하였었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당시 이 사업을 주도하였던故 김재익 경제수석, 오명 전 체신부장관과 홍성원 박사 등 청와대 경제비서실 관계자들은 정보산업 및 정보이용기술이 자립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국가발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외국 우수업체의 우리나라 전산네트워크의 일괄설치 제의에도 불구하고 전산망 사업과 정보산업 육성시책을 상호 연계시킨다는 기본구상에 따라 '83년 3월에 정보산업육성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7월에는 국가기간전산망 구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산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태동한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날로 발전하여 '83년 5,000대의 8비트(bit) PC시험생산을 시발로 이제는 연간 200만대 이상의 PC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종전 외국에 전량 의존하던 중형급 컴퓨터도 행정망용 주전산기의 개발을 계기로, 기술도입기종을 자체 생산하여 160여대나 보급하고 일부는 수출도 하게 되었다. 또, 그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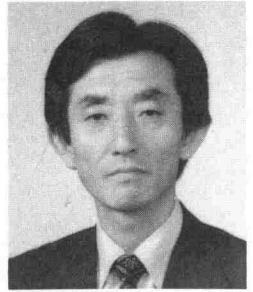
국내기업의 중형급 컴퓨터 생산기술수준이 한단계 상승되어 내년에는 국산중형컴퓨터가 5~6개 기종 출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여권발급에 필요한 신원증명서, 병적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해당 관청에 일일이 찾아가 서류를 갖춘 후에 다시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전산망 구성이 완료되면 국가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신청인은 외무부 여권과, 시·도청 또는 우체국 중 어느 한곳에 신청만 하면 되고 신청을 접수받은 해당행정관청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한 후 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업무는 보다 신속·공정하게 처리되어 그야말로 '국민편의의 행정'이 구현될 것이나,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예산제도, 행정적 절차 등 기존의 틀을 구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체제에 익숙한 보수적인 공무원들로부터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국산컴퓨터를 개발·사용하려는 우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국제무역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소수 엘리트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많은 의견조정과 절차를 거치는 민주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저런 면에서 볼 때 지나온 길보다는 가야할 길이 더 먼 여정의 중간에서 이제는 電算網이 全産望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옷소매를 걷어올린다. **필적**

고도 정보화 사회의 창조적 정책형성



경종철
과학기술처 기초종합연구소장

정책형성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상에 따라 경제정책·교육정책·국방정책 등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정책형성 형태가 개발된다.

그러나 보다 흥미롭고 유용한 기준은 정책결정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데, 반복적이며 또한 논쟁문제 영역(issue areas) 내에서 유사한 제안들을 재형성하는 정형적 정책형성(routine formulation),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정책을 형성하였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는 유사정책형성(analogous formulation),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과거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는 창조적 정책형성(creation formulation)이 있다. 이 중에서 창조적 정책형성은 과거의 관습을 깨뜨리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에 산업화 이전의 농업사회에서 고도의 지식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간내의 급격한 변혁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내적으로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국내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그 정책의 기초를 과거의 현상에 두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거대한 산업국가로 변모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엄청난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고 창조적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90년대와 21세기의 미래사회는 '고도기술사회' '정보화 사회' '다양화된 사회' '국제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집권과 타율의 풍토는 지난 30년 동안의 발전단계에서는 불가피했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 빈곤을 해결한 지금 점점 복잡해지고 변화가 심해져 가는 내일의 사회를 지탱하기에는 '集權의 體制'와 '他律의 文化'는 오히려 역기능적일 수밖에 없다.

다량·다기·다변화된 국내의 상황을 정부주도, 어떤 1개 부처, 또는 주요직책에 있는 개인이 혼자 떠맡는 것은 이젠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부적절하거나 때늦은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하여 후회하고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시행착오적인 결정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는 우리도 그 층이 두터워진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기업·연구소·대학 등 전문기관으로의 분권·자치·자율의 길을 트는 일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의 자율과 참여의 신장은 개인과 사회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바라고 존중해야 할 가치인 '창의성·주체성·자발성·책임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타율적이고 지시적인 행정풍토는 그대로 놓아두면서 '무사안일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소신껏 일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다. 타율적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덕목과 가치가 생길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덕목들이 생산활동에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분권·자율·자영·개방의 길을 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사회에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남원**



북방향로 진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해운항만정책

해 운항만청이 신설됐던 '76년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한 해다.

그로부터 14년, 우리 해운과 항만은 이른바 좋았던 시절로부터 비랑의 끝까지를 고루 겪었던 긴 항해 끝에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새로운 출발이라 함은 다시 기회가 주어졌음을 뜻한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좋았던 시절의 그 노래를 리바이벌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줘요 부산항을' 또는 '떠나가요 부산항'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선복량 9백만톤을 넘어서 세계 13위의 해운 선진국이다.

덜새없이 원자재를 들여오고 이를 가공한 상품을 다시 바다 저편의 시장으로 내다 팔아야 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에서 해운과 항만은 그 '흐름'을 가능케 해 주는 생명선이다.

'物流'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시대에 흐름이 멈춰진 재화란 이미 본래의 가치를 상실한 단순한 '덩어리'일 뿐이다.

불행한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부두에는 화물이 산처럼 쌓이고 항구마다 배달 곳을 못찾는 선박들이 우왕좌왕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대범하다. 2천년대까지는 해상물동량의 90%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를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부산이든 광양이든 다 좋다.

발동에 불결인 항만적체에 대해서는 사태의 시급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좀더 큰 잣대에 의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0년대 말 인천항 개발 당시 당초 1만톤급 선박을 기준으로 설계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5만톤급으로 변경됐던 일화는 미래를 재는 잣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 깨우쳐 준다.

일상화되어 가는 체선·체화가 항만정책의 현실이라면 자율화는 '90년대 해운정책의 출발점이다.

일일이 항로를 지정해 주고 배를 사고 파는 일까지 챙기는 등 이제까지의 과보호에 길들여진 해운업계의 정부의존성향이 새삼 자율화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바다가 늘 열려 있듯이 해운업은 이윤을 동기로 한 선주의 자기책임 경영하에서만 활로가 개척된다.

그러나 자율화는 내버려 두는

것만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더없이 기대되는 때다.

이제까지의 우물안 개구리들을 효과적으로 대양에 내보내야 하고 국적선사간 출혈경쟁의 재현쯤은 미리 손을 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의 대상인 해운업계 스스로의 탈바꿈도 시급하다.

배 한 척 값이 어지간한 공장 하나를 능가하는 고도의 자본집약형 산업이 여전히 지입제차추 정도의 경영마인드들에 지배되고 있다면 진취적 기상을 생명으로 하는 근대적 해운과는 갈수록 거리를 둘 것이다.

이제 우리 해운은 북방백길이라는 신개척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남방항로에만 의존해야 했던 지난 시대에 비해 場은 더 확대되지만 파도는 그만큼 거칠어질 것이다.

2천년대 국민경제의 '흐름'을 지키고 나아가 세계시장진출에 의한 또 다른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도 다시 가다듬는 진지한 준비의 시점이다. 남리

정기환 중앙경제신문 기자 / 해운항만청



균형감각 있는 정책으로 통신선진국 이룩해야

최 근 들어 체신부의 입지가 상당히 강화됐다고들 한다.

종래 우편업무 중심이던 체신부가 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조류를 맞아 그 역할과 기능이 한층 증대된 탓이라고 하겠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이 대중화되고 있고 선진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화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등이 이같은 지위향상(?)과 연계되고 있는 것 같다.

체신부의 정책은 그동안 세계 10대 통신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성과에 걸맞지 않게 별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이 커진 만큼 기업이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질타하는 목소리도 차츰 거세어지고 있다.

통신정책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정책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주마가편의 뜻으로 몇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업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의 여론수렴과정이 더 확충되어야 하겠다. 정책당국자들끼리 토론과 협의만으로 정책을 결정, 정책의 탄력성이 결여되었

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한·미통신회담이나 UR협상에서 나타났듯이 회담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고 체신부의 협상자세가 국익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통신이 갖는 전문성으로 인해 그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에서 뒤늦게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여론수렴 과정의 확충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한 예로 체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기업들로 전파산업진흥협회를 설립, 국내전파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상공부가 그같은 협회는 자기들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반발, 설립 직전까지 서로 얼굴을 붉히는 꼴불견을 보여줬다.

또 데이터베이스산업협회 설립 때는 막판에 상공부 산하로 허가권이 나감으로써 체신부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같은 정부끼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실없는 영역싸움에 매달릴 경우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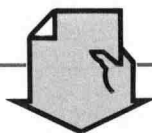
이웃 일본도 재래산업을 관장하는 통신성과 첨단산업을 다루는 우정성간에 심한 파워게임을 벌였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부처간 공조체제와 협조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체신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은 통신사업자, 그것도 지배사업자에 대한 기득권 인정문제이다.

이는 지난해 6월의 통신사업구조조정과 10월의 사업자간 업무영역조정에서 나타났듯 민간기업의 왕성한 신규참여보다는 기존사업자의 영역보호에 치중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시외전화 경쟁도입을 2년 뒤로 미룬 정책결정 등이 그것이다.

세계는 지금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다. 체신부도 앞으로는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리라 본다. 또한 국민들도 체신부의 정책에 더 많은 성원과 질책을 보낼 것이다. 체신부가 통신선진국 달성을 위해 지금보다 더 균형감각이 있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 정책입안과 집행에 힘써줄 것을 기대해 본다. 

김형근 한국경제신문 기자 / 체신부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제교육 관련 정책수립, 교과서개편, 보충학습자료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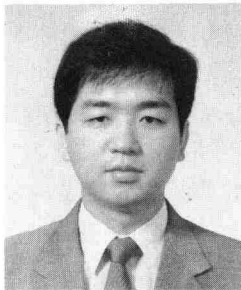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중요한 소양 가운데 하나이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는 안으로는 민주적 경제운용체제를 정비하고, 밖으로는 동구에서의 경제개혁,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등 급변하는 대내적 경제환경에 대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경제전반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미래사회의 경제주체인 학생들이 경제의 기본원리와 개념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생산자 또는 소비자

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학교경제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민경제제도연구원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경제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에 대한 실태, 특히 사회과 교과 지도방식, 교수·학습자료의 내용 또는 활용실태,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직전교육 또는 현직연수제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학교 경제교육을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경근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전문위원

1) 조사표본은 중·고등학교 일반사회 담당 교사(제주도 제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효표본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Sampling)에 의거 선정된 800명(중학교, 고등학교 각 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수준 95%에서 본 조사의 최대 허용오차는 $\pm 3.47\%$ 이다.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

우선 사회과 교과지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과 교과지도에 있어서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일반사회·지리·세계사 등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90.0%였고,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정치·경제·사회문화편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경우는 91.3%로 나타났다. 반면,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 지도방식으로는 중학교 교사의 81.3%, 고등학교 교사의 72.3%가 교과별로 세분하여 담당하는 방법을 선호하여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방식과는 괴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바람직한 지도방식과 실제 지도방식간의 괴리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또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한 예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고등학교 구분없이 응답자들은 학교 경제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내용에 비해 배정된 시간이 부족한 점(중학교 교사 40.0%, 고등학교 교사 43.3%)과 적당한 학습자료가 없는 점(중학교 교사 29.9%, 고등학교 교사 21.7%)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입시에서의 경제분야 문제의 비중과 성격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한다. 다른 사회과분야와 비교해 볼 때, 고입연합고사 또는 대입학력고사에서의 경제분야 출제비중은 대체로 적당하거나(중학교 교사 48.5%, 고등학교 교사 51.0%) 다소 작다(중학교 교사 49.0%, 고등학교 교사 38.8%)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문제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중학교의 경우 응답자의 51.5%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응답자의 65.5%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출제문제가 이해력이나 분석력 측정에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사의 59.5%, 고등학교 교사의 68.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시에서의 경제부문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데에는 중학교 교사의 76.5%, 고등학교 교사의 87.3%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이 경제교육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경제분야를 가르치는 교사 중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가 전무한 비율이 중학교 67.3%, 고등학교 64.5%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과밀학급에서 변변한 교육자료도 없이 입시위주로 운용되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다. 따라서 경제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교과서의 경제분야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응답자 가운데 중학교 교사들은 경제분야가 사회과의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가르치기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나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경제분야가 상대적으로 가르치기에 힘이 든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현행 교과서의 경제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학교의 경우는 이론·개념위주로 서술되어 있는 점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배당된 시간에 비해 포함된 주제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학교 교사의 74.6%, 고등학교 교사의 73.5%가 현행 교과서에 구체적인 예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경제단위에 관심이 적은 이유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 모두 응답자들이 교과서 개편을 단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활경제에 관한 내용을 지적한 것은 전술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대체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부분은 교사로서도 강의하기에 까다롭게 여기는 부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한 연후에, 교과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학습자료의 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보충학습자료를 사용하는 빈도는 중학교의 경우 44.3%, 고등학교의 경우 59.5%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학습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수업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중학교 교사 47.1%, 고등학교 교사 54.3%). 활용하고 있는 보조자료로는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교사용 지도서나 참고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시청각교재의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낮은 시청각 기재 이용률은 마땅한 자료의 부족과 아울러 활용가능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때문임을 고려할 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건전한 경제교육 비디오를 개발·보급하여 점심시간 등에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입시로부터 받는 중압감도 덜고 경제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습보충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다고 간주되는 실생활과 관련된 보기의 제시가 가장 많았다(중학교 교사 57.5%, 고등학교 교사 59.5%).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경제분야를 가르치는 교사 중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가 전무한 비율이 중학교 67.3%, 고등학교 64.5%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교육이 얼마나 내실있게 이루어지는가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자질 여하에 달려 있음을 생각할 때, 현재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상당수가 직전교육 단계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채 교사로 나서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대학에서 배운 경제과목이 경제분야의 학습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교사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중학교 교사 58.5%, 고등학교 교사 77.4%), 대학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경제관련 과목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중·고등학교 모두 2/3 이상의 응답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에 제시한 문제점의 심각성은 자명하다 하겠다.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석사과정'의 설치 필요성 및 그 과정에의 입학의사에 대해 중학교 교사의 약 70% 가량, 고등학교 교사의 약 78% 가량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 응답자 가운데 중학교 교사 53.0%, 고등학교 교사 57.5%가 경제분야 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수에 참가한 적이 없는 교사의 가장 큰 불참사유는 '기회가 안주어졌음'(중학교 교사 83.0%, 고등학교 교사 87.2)으로 나타나 연수기회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연수의 내용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모두 응답자들은 실생활의 사례를 통한 경제이론의 설명을 가장 원한 반면, 실제 연수의 내용은 경제현실에 대한 설명이 2/3 이상을 차지하여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에 관하여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학교 경제교육의 주요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대부분의 사회과 교사들이 경제분야를 독립시켜서 가르쳐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학력고사에서 배점이 낮은 상황 아래서는 경제분야 지도에 많은 수업시간과 자원을 배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크다 하겠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한 문교부의 교과목 통합조정방침 등에 따라 경제분야 분리지도는 더욱 그 실현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청소년기에 장래의 직업관 및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며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올바른 직업관 및 가치관을 지닌 경제주체의 육성에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더군

중·고등학교에서의 현행 경제교육은 여러가지 면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서 그 전반에 걸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은 교과담당자인 사회과 교사들이 두루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상당수의 청소년에게는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으로서의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면 고교 및 대학입시에서 출제되는 문항수의 증대를 전제로 하여 현재 1%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수업중에 경제분야에 배당된 시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현행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의 단편적인 경제지식 습득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합리적 의사능력의 배양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경제개념·원리의 나열을 지양하는 한편, 실생활과 관련된 보기 등을 폭넓게 소개하여 경제분야에 대한 흥미의 진작 및 실생활에의 적응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자·교육학자·경제교육학자 및 현직교사 등 전문가들에 의해 교과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거친 다음, 교과서 개편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정 교과서(1종)인 사회 또는 정치·경제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전환하는 것이 교과서 내용이 수요자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 개편과 아울러 각급 학교별로 학생수준에 걸맞는 보충학습자료 또는 경제관련 읽기자료를 폭넓게 개발·보급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학교수업과는 별도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예: 각급 학교 저학년 대상의 경제이야기 읽기 대회).

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직전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하여 이수해야 할 경제 관련 과목수를 늘려 사회과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라면 누구나 경제분야를 가르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개설될 경제 관련 과목은 경제이론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방법론도 균형있게 포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현직연수는 지금과 같은 단기의 경제정책 교육위주의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실제



교과서 개편과 아울러
 각급 학교별로
 학생수준에 걸맞는
 보충학습자료 또는
 경제관련 읽기자료를
 폭넓게 개발·보급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학교수업과는 별도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로 교사가 경제분야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2주에 걸쳐 경제이론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방법론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업결손 등의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교사를 위해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작·배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은 강의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교사들 스스로 교육의 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연수 대상은 지금과 같은 원칙없는 선정을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연수의 필요성이 더 큰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맺는말

중·고등학교에서의 현행 경제교육은 여러가지 면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서 그 전반에 걸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은 교과담당자인 사회과 교사들이 두루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 경제교육의 제반 문제점은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교육의 제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입시중심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크고 그 효과가 보다 가시적인 방안부터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기술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제교육 관련 정책수립, 교과서 개편, 보충학습자료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도 학교경제교육이 강화될 경우 그 직접적인 수혜대상임을 인식, 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문**

만 남



경제학자가 본
정영의 재무부장관

나라경제의 알찬 살림꾼

노성태(盧成泰)/세일경제연구소 소장

짧은 시간이나마
정 장관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줄곧 느낀 것은
정책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충되는 목표와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늘 고심하리라는
점이었다.



때 : 1990년 12월 10일
곳 : 재무부장관 집무실

정 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바쁜 시기에 관악산을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정부 제2청사의 재무장관실로 정영의 장관을 찾았다.

정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30년 가까이 정통 재무관료로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산업은행 총재와 증권감독원장으로 현장을 경험한 뒤 드디어는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른 분이다.

정 장관은 남달리 지식욕이 강하여 바쁜 공직생활중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매우 치밀하고 부하의 신상명세를 당사자들도 놀랄 정도로 상세히 기억하고 계신분, 현실을 바탕으로 한 순리를 존중하는 분으로 평을 한다고 한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먼저 정치학을 전공하고 경제관료가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그러자 정 장관은 '특별한' 동기 대신 학창시절의 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신입생 시절인데 당시 정치학과 주임교수이시던 민병태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왔지만 결혼이나 직업의 선택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처럼 마음대로는 안될 것'이라고요.

요즘에는 직업이 다양하게 존재해서 자신의 인생설계에 따라 직업을 선택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구조적인 전환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국민이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회가 아직도 미분화된 상태여서 취직의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대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이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을 걸어 왔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서 정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생철학의 일단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들어 정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정책부재라든가 의지의 약화라는 비판을 하곤 하는데 먼저

이러한 일반적인 정책환경과 관련한 정 장관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경제발전으로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복잡해졌는가 하면 민간이 요구하기도 하고 정부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부문에서 자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대개가 민간부문의 형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치중하는 간접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협조가 없이는 정책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들어 민주화가 급진전되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89년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페르시아만 사태로 고유가 부담이 가세되면서 '91년도에는 경제여건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성태 박사는
1946년 부산에서 출생하였다.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제일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90년중의 물가불안의 주요인이 과잉유동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화를 보다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물가의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의 경제여건이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데에 정책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통화운용이 요구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 형평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초 이래 다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온 총통화 증가율을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낮추어 최근에는 19%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 장관이 보는 시각에서 '91년도의 통화운용여건을 보면 실물부문의 여건이 기본적으로 '90년보다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데다가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의 진전으로 금융부문의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91년도의 통화운용은 한층 어려울 것이라는



구조적인 전환기를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국민이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부분에서 정 장관은 경제학자 아더 루이스(Arthur Lewis)가 이야기했던 '경제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이어서 정 장관은 정부로서도 그러한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위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제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인 재정·금융정책을 주관하는 책임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관정책에 대한 견해를 몇가지 물어보기로 했다.

먼저 최근의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통화가 과잉공급되어 물가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논의가 많은데 이에 대해



**'91년에는
통화정책면에서도
금융의 자율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면에서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정 장관은 '91년도의 통화정책운용과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통화정책의 여건도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선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물가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통화를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 속에서 금융부문의 개방화·국제화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만큼 '91년에는 통화정책면에서도 금융의 자율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면에서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월별 통화관리방식을 지양하여 분기별로 통화를 관리하고 간접관리방식을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 등입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우리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대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세제개편작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세제개편작업은 정부정책과 관련된 국민들간의 이해상충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하되 불로소득과

자산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조세저항이라든지 국민들의 납세관이라든지 하는 세제개편과 관련된 우리의 현실적 여건하에서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제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없는 것이고 형평성의 제고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해결해야 하는 것인만큼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반적인 국민의 조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국민의 조세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납세액을 GNP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90년도에는 19% 정도, '91년도에는 그보다 다소 낮은 18.8%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주요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치안상태라든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개선하고 도로·항만 등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 복지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간에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임승차하려는 의식이 깔려 있어 정책운용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정 장관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줄곧 느낀 것은 정책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충되는 목표와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늘 고심하리라는 점이었다.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변에서 정 장관이 만능 스포츠맨이라고들 하는데 격무 속에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특별히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를 묻자 정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에는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며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몸무게가 늘어 걱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대 약대를 졸업하고 젊은 사무관 시절에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뒷바라지를 하기도 했던 부인과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남관**

자동화 · 정보화로 경쟁력을 지키자

경제가 계속 커나가자면 우리 상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잘 팔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경쟁력에 금이 생기고 있다. 근 30년간 늘어만 오던 수출이 연 이태 뚝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물건들의 값이 상대적으로 점점 비싸져 덜 팔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중급 이하 내지는 소형의 컬러 텔레비전이나 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제와 비교해서 싼 임금에 힘입어 그나마 경쟁력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값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상품에 대한 인식이 일제보다 낮은 터에 값도 비슷하니 잘 팔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못 만드는 첨단기술의 고급제품까지 내놓아 아주 비싸게 팔고 있다. 왜 우리 물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가. 먼저 우리측의 사정을 임금 · 기술 등 생산의 요소별로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 이유

첫째가 임금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비이므로 높을수록 생활을 낮게 할 수 있어 오히려 생산의 비용이 커지므로 물건 값을 비싸게 만드니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 임금이 꾸준히 올라서 같은 소득수준에서의 임금이 경쟁국에 비해 높아졌다. 1인당 국민소득 5천달러 때의 월 평균 임금이 우리는(1989년) 723달러인데 비해 대만(1987년)은 483달러였다. 이제 낮은 임금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나고 말았다. 임금이 비싸졌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정성도 떨어지고 있다. 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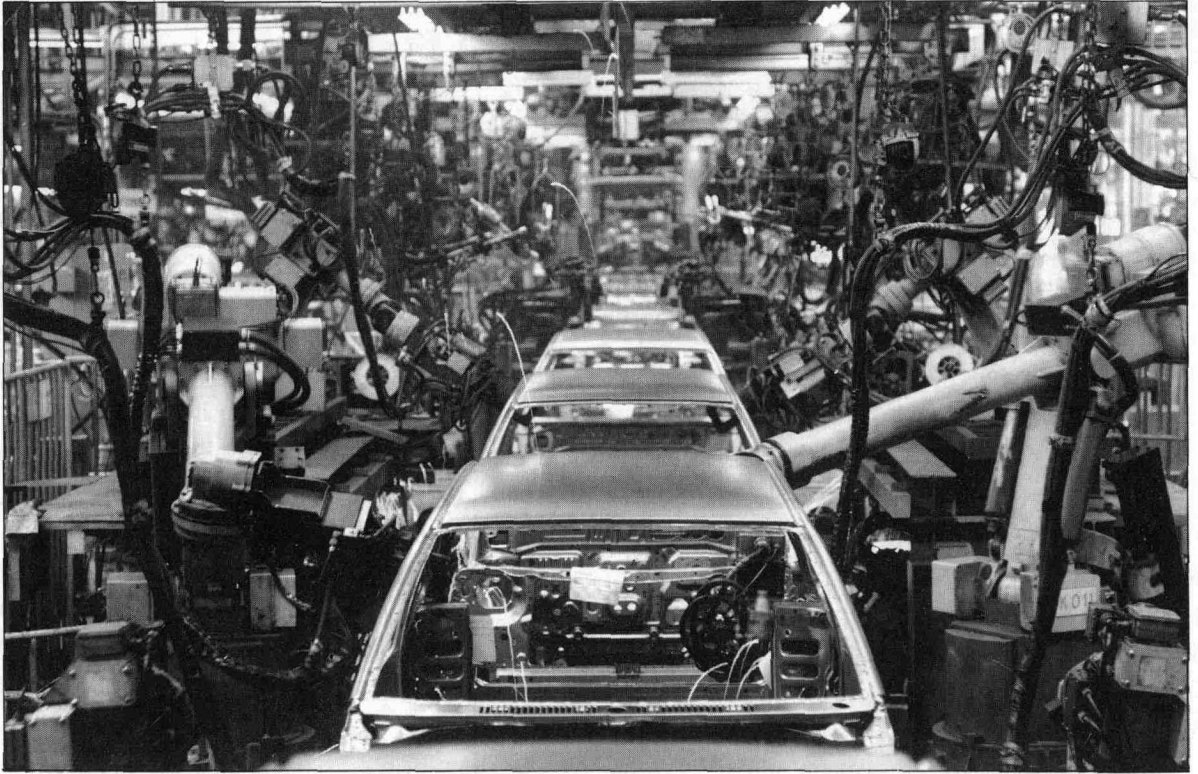
전승훈
경제기획원 산업2과장

미를 졸라매던 때와는 달리 별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젊은이들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크게 달라나 한 쪽에서는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놓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것이 목적일진대 임금이 높다는 것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해내는 일의 가치(생산성)이다. 우리 근로자의 생산성을 일본과 견주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출 주종품인 컬러 텔레비전, 세탁기 등을 보면 일본 근로자가 3대를 만드는 사이에 우리는 겨우 1대를 만들고 있다. 그나마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일본 근로자들이 만드는 것에 비하면 질이나 값이 훨씬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 기술은 어떤가? 그동안 우리가 해 온 것은 주로 선진국들로부터 자본재와 기술을 들여다가 그곳의 성숙된 상품을 대량 조립 · 생산하여 수출을 해 온 것이다. 우리가 비디오나 컴퓨터를 팔고 있지만 그것을 설계하고 핵심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기술수준의 단적인 예로 미국시장에서의 특허등록건수를 보면,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라도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대만과 견주어서도 그의 4분의 1밖에 안된다. 통틀어서 우리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8년 정도 뒤져 있다는 분석자료가 있지만, 일본의 학자는 일본이 미국에 2년 내지 8년 뒤진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데 100년이 걸렸다고 분석하고 있음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으로부터 낮은 기술을 사서



싼 임금으로 버텨올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높은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사자면 엄청난 대가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서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밖의 생산요소로 토지, 에너지 및 금융 등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같이 경쟁국들의 사정에 비해 나쁘고 또 당장 나아지리라는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는 '89년 3월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보고서에서, 2000년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지금의 23년에서 27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제 와서 임금을 동남아시아의 개도국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생산요소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가져야만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선반으로 쇠붙이를 잘 깎는 숙련보다는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다루거나 컴퓨터를 써서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생산의 새로운 물결과 경쟁국들의 대응

바깥의 사정을 보면, 지금 선진국들은 기술 혁신의 과정에 있고 그 결과로 경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맨손으로부터 도구를 써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인간은 마침내 동력기계를 만들어 생산력의 혁신을 가져온다. 동력기계로 노동의 힘의 한계를 벗어난 데 이어 드디어는 노동 고유의 지각이나 판단의 기능마저 뛰어넘기에 이르렀다. 컴퓨터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양의 정보를 판단해 주며 센서가 아주 섬세한 지각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엄청난 일을 순식간에 해낼 수 있게 된다.

- 1) 일본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8년만에 백열 전구를 국산화하였고, 벨이 전화를 발명한 지 2년만에 전화를 국산화하였다. 그러나 그 후 100년이 지나서야 기술수준이 갈아질 수 있었다 (竹内 宏, 일본장기신용은행).

이른바 산업혁명에 이어 제2의 산업혁명 또는 정보혁명이다.

이러한 생산의 자동화·정보화는 생산성과 제품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노동을 비롯한 토지·에너지 등 생산요소를 크게 줄여 생산성을 아주 높인다. 둘째, 노동의 생산에서의 역할이 크게 줄었고, 셋째, 아주 정교하고 다양한 제품을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손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교한 작업이 아주 균일한 질로 기계가 해내 주고 간단한 컴퓨터의 명령에 의해서 다양한 규격이나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생산의 기술혁신은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제분업관계를 뒤집어 버린다.

선진국은 높은 임금으로 고부가가치의 생산에 치중하고, 개발도상국들은 낮은 임금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특화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바뀌어 싼 임금에 힘입은 개도국의 경쟁력의 발판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²⁾

이와 같은 생산의 자동화·정보화가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70년대부터 자동화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자동화 수준을 달리고 있다. 그 결과 첨단기술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주물·금속양식기 등 재래산업 부문에서마저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뽐내기에 이르렀다.³⁾ 개도국들도 뒤질세라 미리 대비하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일찍(1981년) 총리가 자동화(automation)·정보화(information)·에너지(energy)·첨단소재(high-tech materials)의 4대 기술을 최우선의 과제로 선언하고 생산자동화 장기계획을 범정부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 있는 중국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기술혁신 시대에서 미래에의 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 혁신의 물결은 선진국간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일본의 하드웨어 등 서로간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모색하는 세계화(globalization) 전략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생산성 혁신의 물결은 한계를 모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타지 못할 적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아주 뒤떨어지고 만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길의 하나가
기업이 생산의
자동화·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자동화·정보화를 통한
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대책'을
지난 11월에
발표하였다.**

정부의 자동화·정보화 촉진대책

이같은 바깥의 물결과 안에서의 인력 등 생산요소상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도 생산의 자동화·정보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한 사람을 쓰는 데 연 2천만원이 드나 자동화를 잘만 한다면 일 손 하나를 기백 만원에 줄일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신발업의 경우 임금이 오르고 작업환경이 나빠 일손 조차 못 구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자동화에 힘쓴 결과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어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예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산업의 자동화 수준은 아직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길의 하나가 기업이 생산의 자동화·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자동화·정보화를 통한 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대책'을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은 기술·자금·인력의 세 요소별로 기업의 자동화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2) 예를 들면 자전거를 만드는 일이 미국에서 사양화 되어 개도국으로 넘겨졌으나 자동화 생산으로 미국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3) 한국·대만 등의 싼 임금에 고전해 오던 작업 환경이 나쁜 이들 재래산업분야에서 자동화 생산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외에도 조선의 경우 용접 등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헬멧이 필요없는 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365일 무인 생산시스템이 도입되리라는 전망이다 (『꿈의 공장』, 日經비즈니스, 1990. 6).

첫째, 자동화는 먼저 기업이 현장에 구체적인 적용할 기술(know-how)이다. 사람 손을 일일이 거치던 여러 생산공정을 단순화하고 기계와 컴퓨터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기술지도를 뒷받침해 주어 다른 기업들이 보고 느껴 자동화가 널리 퍼져 나가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의 시스템공학센터와 기계연구소가 각각 나서 기업별로 컴퓨터에 의한 생산관리 소프트웨어를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서 깔아주는 한편, 가공·조립·측정 등 각 공정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간다. 다음 해부터 5년간 전자의 경우에는 약 1,000개, 후자에 대해서는 약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자동화 연구개발은 혼자서는 힘드니 되도록 자동화사업조합을 많이 만들도록 하고, 이들을 자금·기술 등의 면에서 우선 도와주도록 할 것이다.

기업이 이런 일을 해 나가자면 자동화 기계와 정보화 소프트웨어가 뒤따라야 한다. 아직까지 외국에 의존해 있는 지능형 로봇, 5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 다축 수치제어 공장기계 등 19개 주요 자동화 부품을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해 나간다. 직접적인 연구개발과 아울러 자동화 수요자 금융을 크게 늘리는 등으로 관련 기계공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이 자랄 수 있는 터를 닦고자 한다. 특히 기술용역업이 활발히 커 나갈 수 있도록 업체를 자유로이 세울 수 있게 하며, 이들도 다른 중소기업처럼 세제상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음 세우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소득세를 반으로 깎아준다.

자동화의 두번째 문제가 자금이다. 자동화 투자는 우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만큼 위험부담이 따르고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드는 걸림돌이 있다.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당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했

**이제부터는
선반으로 쇳붙이를
잘 깎는
속련보다는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다루거나 컴퓨터를 써서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다. 우선 금융자금으로 5,000억원을 마련하여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주도할 예정이다. 그외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과 외화대출을 활용하여 자동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은행·리스·종합금융회사 등 일반 금융도 가급적 자동화·정보화 투자 쪽에 많이 가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금융상의 지원과 더불어 세제상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강구했다. 자동화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투자세액을 세액에서 15% 빼주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줄이도록 했다. 그와 함께 자동화 기계에 대해 관세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 문제가 이러한 새로운 생산방식을 관리하고 개발해 나갈 인력이다. 이제부터는 선반으로 쇳붙이를 잘 깎는 속련보다는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다루거나 컴퓨터를 써서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일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계획한 일은 우선 급한대로 산업현장의 인력을 재훈련시키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올 인력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하는 일이다. 각종 공공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전산교육을 알차게 하며 종래의 수동식 장비를 자동화 장비로 바꾸어 교육해 나가고자 한다. 민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기본적인 일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시대에 맞게 교육을 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실업계 고교 전 과정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96년까지는 전산교육실을 하나 이상 두어 모든 학생들이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의 기술시대에 발맞추어 인력자원을 잘 훈련시키고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길은 다 함께 슬기를 모아 찾아나가야 할 일이다.

기술개발과 자동화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첫째는 기술이다. 비디오의 핵심 기술을 가져야 하고 컬러 텔레비전을 고물로 만들 고화질 텔레비전(HDTV)을 하루빨리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자동화·정보화로 생산을 값싸고 질 좋게 해야 한다. 끝으로 일은 역시 사람이 하는 까닭에 열성을 가지고 일을 알뜰하게 하는 마음이 살아야 한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동화 투자에 세금을 줄여주고 수요자 금융을 늘리는 등의 여러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기업이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마련되게 되었다.

일손을 줄이는 일에 가장 걸리는 것이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문제이다. 현장 근로자들로서는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해 준다니 앞으로 할 일이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거나 새로운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게 마련이다. 자동화되면 생산에 직접 드는 일손은 그만큼 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첫째로 기업 자체가 커지고, 둘째는 지금까지 등한시해 오던 연구개발(R&D)·설계·마케팅 및 엔지니어링 등에서 일거리가 많이 생겨나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한다. 사실 우리 기업이 해 온 것은 기껏 조립·생산 정도인데 이상과 같은 일들을 제대로 해야 기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⁴⁾ 이러한 정·부의 효과를 감안한 순효과가 얼마나 될는지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 경험적 자료를 보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⁵⁾ 실제로 현장의 기능인력이 크게 모자라니 자동화로 근로자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리라는 걱정은 안해도 될 성싶다. 생산 자동화는 근로자들이 굶은 일을 덜고 스스로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다.

문제는 기업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이다.

**기업이
기술개발과
자동화 투자에
힘써 나간다면,
기계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산업도
기술혁신의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자동화 투자에 우선 자본이 많이 든다. 그리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기껏 설비투자를 해도 기술발전이 빠른 까닭에 곧 낡은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 함부로 덤비기가 어렵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곧 보편화되어 경쟁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가 없다. 자동화 기술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아주 전근대적인 생산체제로부터 하루 아침에 사람을 안쓰는 공장으로 탈바꿈될 수는 없다. 공정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 기술개발과 자동화 투자에 힘써 나간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기계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 둘이 서로 맞물려 나가면서 우리 산업도 기술혁신의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집안 환경이 좋건 나쁘건 공부는 제 할 탓이다. 생산성 혁신과 세계화·개방화의 국제경제질서의 물결을 타면서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남원**

4) 예를 들어 정방기 제조 전문업체로서 이태리 마조리(Marzzoli)사와 한국의 같은 업종의 어느 기업의 인력배치구조를 1988년 자료에 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의 경우 종업원 800명 중 경영진이 20명, 경리·사무 등이 20명, 연구개발 및 설계에 350명, 공장현장에는 단 60명, 마케팅 및 판매 엔지니어가 350명이다. 후자의 경우 종업원 450명 중 경영진은 같은 20명, 경리·사무에 30명, 연구개발에 고작 7명, 생산현장에 대부분이 배치되어 370명, 마케팅에 20명이다. 그 결과 1인당 매출액이 전자의 경우는 60만달러로 후자의 3만달러의 20배나 된다.

5) 1988년 6월 산업연구원의 조사로는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97%가 인원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특정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은 다소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근로복지 증진시책

근로자들은 최근 수년간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의 지속적 개선과 '87~'89년 3년간의 고율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생활수준이 별로 향상되지 못했다는 인식과 일부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갖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에서도 임금인상 외에 주거안정·재산형성 등 실질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쾌적한 작업환경, 문화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등 복지욕구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공공근로복지시설의 확충,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보험 등의 공공근로복지의 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과감한 기업복지 증진을 통해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고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여 산업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특히 근로자 주택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하는 보람'과 '장래보장'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의 장학사업 등 자주복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정부가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이러한 시책을 이해하고 따름으로써 세제·금융 등 혜택을 받고 생산성 향상의 기초가 되는 노사화합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내집 마련 지원

정부에서는 '90년을 근로자 주거안정의



박정규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해로 정하고, '92년까지 총 25만호의 근로자 주택공급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근로자 주택은 주공과 지방자치단체도 건설하여 공급하지만 기업주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간의 협력적 관계 증진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기업주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주택건설을 희망하는 경우 분양(근로복지)주택은 연리 8~10%, 사원임대주택은 연리 3%,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1호당 1,20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90년의 경우 정부가 정한 입주자격은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 80만원 이하이어야 해당이 되며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7~15평으로 하고 있다. 연도별 계획 공급물량은 초년인 '90년에는 6만호이나, '91년에는 8만호, '92년에는 11만호이다.

근로자 주택건설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자금지원 외에 공공개발 택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세법과 주택관계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근로자용 기숙사를 건립·운영하려고 하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건축자금의 80%까지를 융자해 주고,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임대하여 특별 감가상각 인정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다.

또한 미혼여성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세대당 580만원을 국고에서 무상보조하며, 900만원을 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13

평형 규모에 1세대당 5인이 입주하는 이 아파트는 1인당 보증금 8,400원에 월 사용료 4,200원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81년부터 '90년까지 8,025세대를 건립 지원하였고, '92년까지 매년 1,000세대씩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자체에 따른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고, 땀흘려 일한 근로의 대가를 여타 소득에 비해 보호하기 위하여 '90년 도중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30~40%의 세액공제를 80만원 한도로 인정하도록 하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91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특별 공제제도를 확대·보완하고, 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여성근로자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 교육·위탁 및 편의 시설의 확충

근로현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근로청소년들이 자아를 정립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81년부터 '90년까지 20개소의 근로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왔으며 매년 1개소 이상씩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의 시설과 여가선용 시설을 염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83년부터 24개소를 건립하였고 매년 2개소 이상씩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미혼여성 근로자 구인난을 타개하고, 기혼여성 근로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탁아소 설치를 중점 지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장의 탁아시설 설치 유도를 위하여 '87년부터 여성근로자 밀집지역에 시범탁아소 18개소를 건립 추진중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여성근로자의 계속취업



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 장학사업 지원

정부에서는 재단법인 한국노총 장학재단과 산재근로자의 자녀 장학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취학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국노총 장학재단은 '77년 설립되어 '89년까지 20,313명에 대하여 37억 6,996만원의 혜택을 주어 왔으며, 근로복지공사에서 수행하는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은 '84년부터 9,018명에 대하여 27억 4,974만 8천원을 지원하여 왔다.

앞으로도 이들 장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업주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장학제도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치 권장

1984년부터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를 행정적으로 권장하여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出捐하면 사업주에게는 지정기부금 한도내에서 損金(또는 필요경비) 인정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기금으로부터 받는 일정금품은 세제상 비과세되고 있다.

'90년 6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현황은 634개 업체 2,285억원으로 '86년 341개소 155억원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복지사업을 운영자금인 아닌 기금형태로 운영토록 권장하는 이유는 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복지사업을 운영자금인 아닌 기금형태로 운영토록 권장하는 이유는 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출연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을 통해 세제혜택 확대와 운영의 원활화를 이루어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기금출연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미약으로 사업주의 출연이 저조하고, 기금에 대한 법적 규제미비로 운영준칙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가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을 통해 세제혜택 확대와 운영의 원활화를 이루어 나가게 할 것이다.

근로복지증진 시설 및 제도 설치 권장

기업내 복지후생시설의 확충·내실화로 근로자의 직장정착성 제고와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체의 부담능력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기준을 정하여 지도·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권장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규모	권 장 기 준
30인 이상	작업복 지급, 재형저축 실시
50인 이상	식당, 휴게실, 목욕시설 설치
100인 이상	체육시설, 도서실, 의무실, 장학제도 운영
300인 이상	기숙사, 임대주택, 구관장, 공제조합, 통근편의제공
1,000인 이상	직장주택조합을 통한 내집짓기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근로자가 장기계획을 세워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76년부터 근로자 재형저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제혜택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지주제와 근로자증권투자 저축제도를 통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 위에서 근로자 재산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주도 보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등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게 주택자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력**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의 전환추진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국내증권산업의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의 전환추진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설치와 합작증권회사의 설립 등 증권산업의 대외개방과 그간 억제되어 온 국내의 증권업 신규진입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대내개방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기존 단기금융회사의 은행 또는 증권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단기금융산업의 개편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증권산업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 추진방안의 배경,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자본시장 개방정책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금융환경변화와 자본시장개방

한국경제는 '60년대초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래 경제의 급속한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정부주도적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경제의 전후방 관련효과가 큰 중화학공업, 수출주도산업 등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이 노정되는 가운데 금융·자본시장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쟁원리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다.

또한 국제금융환경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각종의 규제들이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차 완화



정은보
재무부 증권정책과 사무관

내지 철폐됨으로써 급속한 금융혁신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의 동질화,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확대되고 금융시장간 범세계적 통합으로 국가간 자본이동이 심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8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노정된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경제의 전반에 걸친 자율화·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율화·개방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81년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수지 흑자전환, 흑자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증권시장의 급속한 확대 등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88년 12월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89~'92년)'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92년까지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90년까지는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국내의 수용태세를 정비해 가면서 외국인 투자펀드, 해외증권발행과 같은 간접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개방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될 것으로 전망되는 '91년에는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및 합작증권회사 신설, '92년에는 외국인의 제한적인 직접 국내증권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말 현재 간접개방을 중심으로 한 증권시장 개방은 13억 3천만불로서 주식 시가총액의 1.6%에 이르고 있으며 24개의 외국증권회사가 국내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증권회사도 해외에 36개의 사무소를 설치

하는 등 연차별 개방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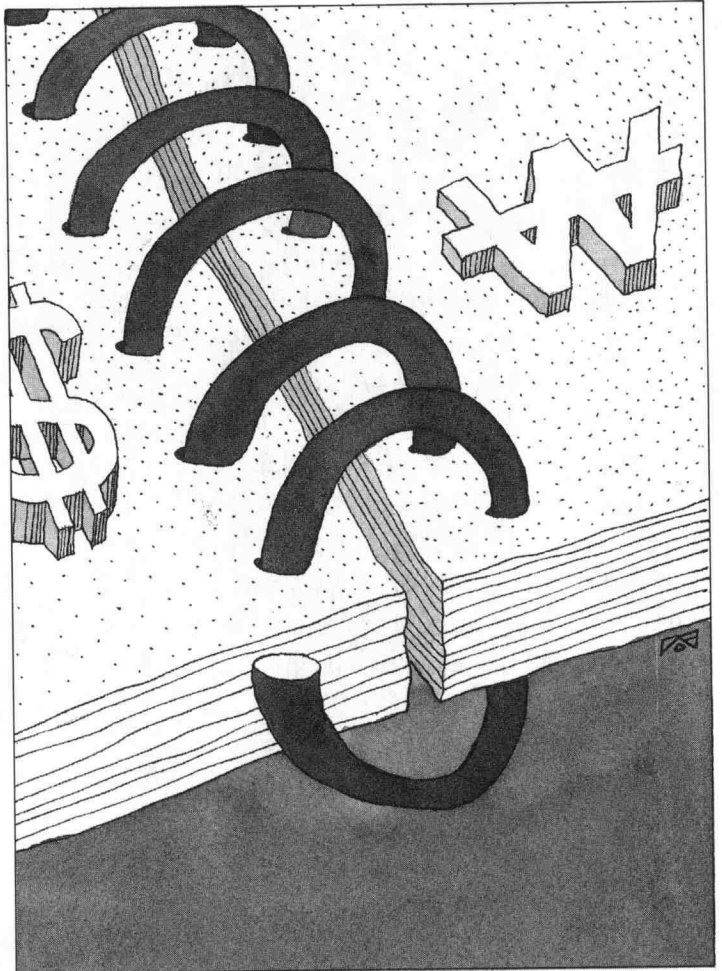
증권산업 개방의 기본방향

최근의 국내경제 및 증권시장 여건을 보면 경제성장의 둔화, 국제수지의 적자 반전, '89년 4월 이후 증권시장의 장기 침체에 따른 증권회사의 수지여건의 악화 등으로 '88년 계획수립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91년 증권산업 개방, '92년 증권시장 개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한·미금융정책회의, EC시장통합 등 점증하고 있는 선진국의 자본시장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 및 금융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증권산업개방을 통해 국내 증권산업의 체질개선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초계획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개방 초기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기존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방의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단계적·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개방과 균형 있는 대외진출을 통해 국내증권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영업기반 확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증권산업 대외개방과 함께 국내증권회사 신규설립과 단기금융회사의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증권회사 국내진입시 영업기반 확대에 사전 대비하고 경쟁축진을 통한 증권회사간 업무전문화를 유도하여 증권산업 전반의 체질개선과 합리적 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90년 현재
24개의 외국 증권회사가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증권회사도
해외에 36개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증권산업의 대내외 개방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설치

증권산업 대외개방의 유형은 지점·합작법인·현지법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점의 경우 국내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고, 많은 허용이 가능하여 외국국의 개방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점을 중심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법인 형태는 외국인에 의해 100% 소유·관리됨으로써 규제의 어려움이 있고 특히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기회가 상당히 제약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설치기준은 먼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회사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국별 상호진출 수준, 국내경제 및 증시여건을 감안하여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당해 회사의 경영실적·국내증권시장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과 국내진입시 부담 등을 감안하여 100억원 내지 200억원 범위내에서 업무수행 범위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회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시장에서의 업무 전문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지점의 업무범위는 UR협상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업무종류별 영업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증권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모두 허용할 것이다. 다만 외국 증권회사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증권거래소 회원권 개방문제는 증권거래소가 '88년 3월 이후 회원제로 변경·운영됨에 따라 회원의 신규가입 여부 및 가입급 수준 등은 거래소 회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합작증권회사의 설립

합작증권회사의 설립은 국내의 증권업 신규 진입수요와 외국의 국내 진출수요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국내합작선을 통한 선진금융기법의 전수가 용이하고 국내증권회사와 같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으나, 지점에 비해 규모가 크고 점포설치를 통해 기존 증권회사와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자자 자격기준·출자비율 등을 제한

**점증하고 있는
선진국의
자본시장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 및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권산업개방을 통해
국내증권산업의
체질개선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함으로써 과도한 신규설립은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내출자자는 경제력 집중과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를 억제하기 위하여 30대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단기금융회사의 전환 등으로 금융기관의 증권업 신규 진입수요가 상당히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참여를 불허하였다.

그리고 외국증권회사는 국내증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유수의 증권회사(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경영의 안정성·건전성이 인정되고 당해 국가에서 국내증권회사 현지 또는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한 경우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의 출자자의 출자비율은 내국출자자가 50% 이상으로 설립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국내의 증권회사 신규 설립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합작증권회사가 외국증권회사의 현지법인화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고, 외국출자자는 40% 이상으로 하여 내국인의 무분별한 합작시도를 억제하고 외국증권회사가 단순한 지분 참여가 아닌 공동책임경영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자본금 규모는 국내 소형증권회사의 자본금 수준인 5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업무범위는 국내증권회사와 같은 범위내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개발금융기관의 증권회사 설립

장기산업자금의 조달·공급을 주기능으로 하는 개발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재원조달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금융채의 확대 발행이 불가피하나 현행의 매출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증권시장을 통한 매출기반의 확대와 채권거래에 중점을 두는 전문화된 증권회사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금융기관이 산업자금조달과정에서 축적된 국제업무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증

권회사의 취약분야인 국제증권업무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 업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금융기관의 증권회사 신설을 허용하되 기존 증권회사의 취약분야인 채권인수업무와 국제증권업무에 특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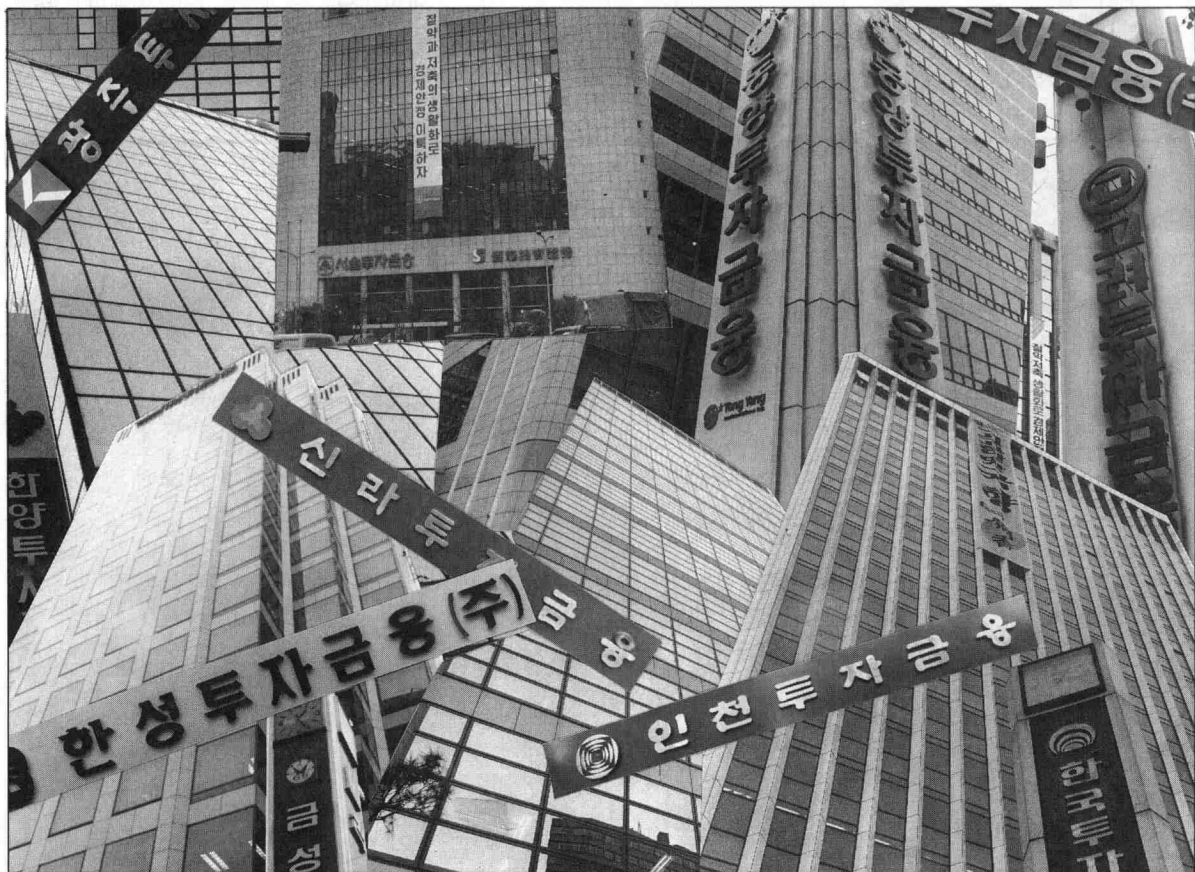
단기금융회사의 전환

단기금융회사는 사금융의 제도금융권 흡수를 목적으로 '72년 단기금융업법 제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되어 그동안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단기금융회사는 사금융의 제도권 흡수를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되어 그동안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및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전체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기금융회사의 개편이 필요하며 그 기본방향은 서울 소재 단기금융회사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로, 지방 소재 단기금융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존속하는 단기금융회사는 단기금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서울 소재 단기금융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합병(피합병회사는 2개 이상의 단기금융회사가 있는 지역의 회사에 한정)으로 자본금 500억원 또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증권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며, 현재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형단기금융회사가 유상증자(30대



재벌 이외의 경우) 또는 합병(30대 재벌에 속하는 경우, 피합병회사는 2개 이상의 단기금융회사가 있는 지역의 회사에 한정)으로, 자본금 1,000억원 또는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은행으로 전환을 허용하되 전환 후 일정기간(3년) 이내에 대주주 지분율을 8% 이하로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존속하는 단기금융회사는 단기금융시장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어음시장의 도매금융기능을 제고하고 콜시장에서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 국공채(통화채 포함) 시장의 주인수 기관으로 육성하여 통화관리를 위해 단기금융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대응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산업 개방은 대내외적 요청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어

**개방이란
그 속성상
한번 자유화하면
다시 제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야 할 과제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선진화되는 과정임에는 틀림없지만 개방이란 그 속성상 한번 자유화하면 다시 제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증권회사가 선진외국의 증권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산능력을 향상하는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국내증권회사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 국내증권시장은 세계 유수의 시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남원**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경제정책전문지 『나라경제』를 더욱 값지게 해줄 독자 여러분의 귀한 글을 모집합니다.

공무원 및 학계·언론계에 계신 분들과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이든 누구나 『나라경제』가 펼치는 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원고모집분야 경제정책해설 : 현안 경제문제 또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해설기사(200자 원고지 24매)

경제논문 : 주제 제한없이 경제에 관련된 논문(200자 원고지 40매 이내)

경제수상 : 경제와 관련된 수상(200자 원고지 8매)

시·수필·콩트 : 주제 제한 없으나 경제정책입안 및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면 더욱 좋음.(200자 원고지 8매 이내)

원고제출처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과, 각 경제부처 편집위원,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편집발간실

원자력 핵심기술의 자립정책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모든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히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최근의 페르시아만 사태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 하겠다.

에너지수급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부존여건과 새로운 대체자원의 개발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이용상의 편리성과 사회적 수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게 되며, 자국의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거나 빈약한 경우에는 에너지수입과 새로운 대체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에너지의 공급물량을 확대시켜 나가고, 한편으로는 에너지수요를 감축시켜 나가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과 함께 그 이용효율을 높여나가게 된다.

국내에너지의 부존여건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존여건을 살펴보면 무연탄은 약 15억 8400만톤 정도 매장되어 있지만 비교적 열량이 낮아 산업용이나 발전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며 이중 7억 5천만톤 정도만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채탄여건이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다. 수력과 소수력은 앞으로 원전 1기분 정도의 추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유연탄과 석유·천연가스는 그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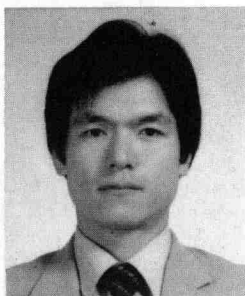
이외에 화석연료의 대체자원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풍력·조력·지열·바이오에너지 및 태양열 등은 극히 소규모적인 보조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할 뿐 에너지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요인 등을 감안해 볼 때 급증해 가는 국내전력 수요증가('86~'89년 12.8%, '90년 1~9월 15.5%)를 원활히 공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석유연료와 대규모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고갈성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의 시대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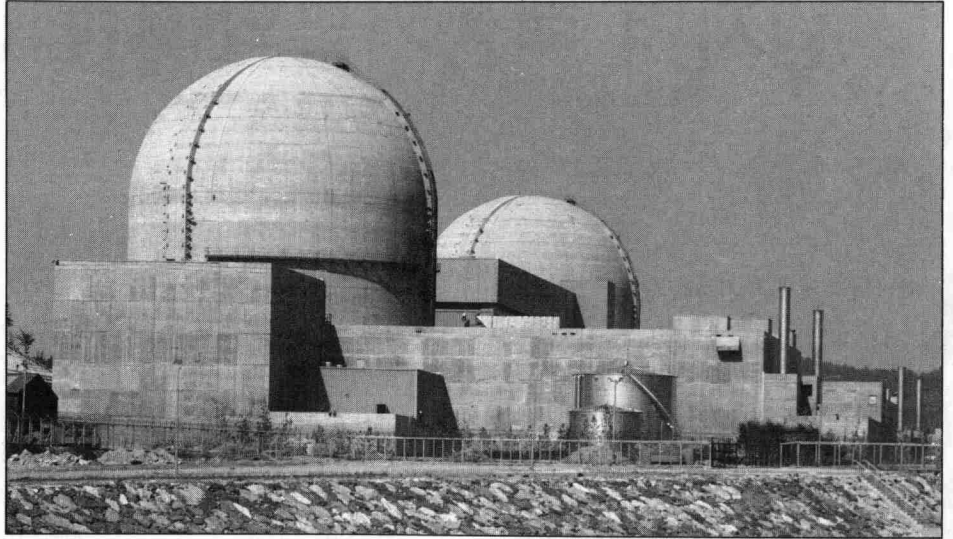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 있어 원자력발전은 그 특성상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소량의 연료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적인 비고갈성 에너지로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비축 또한 용이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년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원자력을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이래, 78년 발전용 원자로의 상업운전을 계기로 현재 원전 9기가 가동되어 이젠 국내전력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필수에너지



김영식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과
기계기좌



원으로 성장하였고, 약 650여기관에서 연구용 원자로에 의해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암환자의 절반 이상을 치료하거나 비파괴검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 원자력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산업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원자력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그러나 원자력은 일반산업과 달리 방사선재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자립을 통한 안전문제의 독자적 해결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그동안 관련연구 개발과 원자력발전 기술의 국산화 개발에 주력하여 오늘의 산업화 능력을 축적하기에 이르렀고, 안전성 분석·평가기술 또한 상당수준에 이르러 국제원자력기

구에서도 원자력 안전성 평가능력을 인정하는 등 점차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기술기반을 토대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원자력핵심기술의 완전 자립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원자력을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깨끗한 에너지로 인식·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장기적인 시각에서 '원자력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성을 현저하게 제고시켜 나가며 원자력사업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세계적 수요에 부합하는 차세대원자로의 본격적 개발과 함께 우라늄자원의 이용효율이 높은 핵연료주기기술을 중점개발해 나가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구상은 지난 '88년부터 아주대학교 에너지문제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참여하에 약 3년간 공동으로 수행해 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획의 초기수립단계에서부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원자력발전은 그 특성상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소량의 연료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적인 비고갈성 에너지로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비축 또한 용이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원자력 핵심기술의 개발방향

특히, 원자력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감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높이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을 강조하면 안전성이 저하되는 등 안전성과 경제성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공학적 분석·평가기술을 도입하고 최신의 개량된 기계를 접목하게 되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즉 인간공학적인 요소를 대폭 반영하거나 자연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원전의 최대 사고 개념인 爐心の 溶融事故 발생확률을 현재보다 10배 내지 100배 정도 하향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계를 표준화·기준화시키고, 계통을 단순화시켜 나가게 되면 원전의 이용률이 향상됨은 물론 수명연장과 함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만큼 경감될 수 있고, 원전의 이용률이 현재의 76.2%에서 85% 수준으로 약 10% 향상되는 경우에는 원전 1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되어 1,000억원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80년대에는 미·소의 원전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경제성장의 일시적인 둔화현상으로 원자력개발이 다소 침체되기도 했으나 '80년대 후반들어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주요관심사로 부각되어 감에 따라 원자력개발 이용의 활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

차세대원자로의 본격적 개발

우리의 경우도 그동안 축적된 원전 9기의 건설·운영경험과 현재 건설중에 있는 원전 11·12호기의 공동설계 경험 및 다목적 연구

로의 자력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개량형 輕水爐의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설계개선사항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95년까지 개량형 경수로기술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신형안전로와 자원증식이 가능한 미래로형이라 불리우는 高速增殖爐로 이어지는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능력을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로기술을 개발해 나감에 있어 모든 기술분야를 포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선별적으로 중점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연료 주기기술의 확립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핵연료주기의 일부과정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앞으로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라늄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내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경수로와 중수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국내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수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중수수에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우라늄자원의 이용효율을 약 32% 이상 향상시킬 수 있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다.

끝으로 원자력은 이제 앞으로의 주종 에너지원으로 개발·육성시켜 나가야 할 필수적인 분야임을 재인식하면서 금세기내에 선진 원자력 한국의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라경제

원자력 장기발전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자력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성을 현저하게 제고시켜 나가며 원자력사업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차세대 원자로와 핵연료 주기기술을 중점 개발해 나가려는 것이다.

양곡정책의 방향 전환

쌀 수급문제를 중심으로



박창정
농림수산부 양정과장

최근 우리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79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쌀 생산은 영농기반 조성, 생산기술 향상 등으로 '80년 이후 계속 풍작을 이룩함으로써 쌀의 자급을 달성하였다.

지난 '79년에 135.6kg에 달하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변화로 '90년에는 119.6kg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인구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 연간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쌀 생산량은 '88년에 4,204만석, '89년에 4,096만석, '90년 3,893만석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급단계를 지나 잉여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0년말 양곡재고량도 1,318만석으로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을 훨씬 초과하여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 쌀 수급전망

중·장기적으로도 쌀 수급은 안정되어 재고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수리시설 등 기반의 확충과 영농기술의 향상으로 생산 수준이 안정되어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평년작 수준의 생산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1인당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별도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연간 총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즉, 총인구증가 둔화, 식량용 소비의 지속적 감소, 植付면적 감소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예상되어 여유 재고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농정의 기본방향

쌀의 수급균형 유도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쌀 생산량은 크게

〈표〉 최근 쌀 수급상황

(단위 : 천석)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暫定)
공 급 가 용 량 (전 년 이 월) (생 산)	48,986 (9,915) (39,071)	47,611 (8,674) (38,936)	46,749 (8,604) (38,145)	49,821 (7,783) (42,038)	51,873 (10,915) (40,958)
소 비 량 (기 본 식 량) (가공,종자용 등)	40,312 (36,864) (3,448)	39,007 (36,438) (2,569)	38,966 (35,617) (3,349)	38,906 (35,729) (3,177)	37,803 (35,542) (2,261)
연 말 재 고 (정 부 재 고)	8,674 (8,674)	8,604 (7,644)	7,783 (7,368)	10,915 (8,772)	14,070 (13,180)
1인당 소비량(kg)	127.7	126.2	122.2	121.4	119.6
자 급 도(%)	96.9	99.8	97.9	108.1	108.3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10a 당 생산량이 77년에 488kg에 달한 후 계속 450kg 내외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생산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기술이 향상되어도 단위당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논 면적은 농촌 공업화나 도시화 등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쌀의 소비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 변화 등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이 '86년의 127.7kg에서 '90년에는 119.6kg으로 줄어들 추세에 있다. 일본의 1인당 연간 식량용 쌀 소비량이 72kg에 불과한 사실을 보면 비록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우와 같은 추세로 쌀 소비가 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는 양정여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쌀의 공급과잉 상태의 지속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생산농민에게도 결코 이로운 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쌀의 수급균형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우선 가공수요를 중심으로 한 쌀 소비확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쌀 수급 균형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양질미 생산대책

이와 함께 농가의 소득유지를 위하여 정부 수매 등을 통하여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米價支持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농민들이 쌀을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산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비자들의 양질미 선호에 부응한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쌀 감소추세를 완화해 가는 것이 농가소득원 보호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되는 통일계 수매량을 감축해 나가고, 일반계와 통일계의 수매가격 격차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반계 위주로 생산정책을 과감히 전환하도록

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품종개발도 米質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쌀 소비확대 방안의 적극 추진

쌀 수요개발 및 소비확대 대책의 적극 추진

우선 쌀의 영양이나 건강식품으로서의 특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쌀 소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간편한 아침 식단을 개발·보급하는 등 밥짓는 방법을 더 발전시키는 한편,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급식학교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용 쌀은 시중 방출가격의 50%로 싸게 공급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문화를 기르도록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식량용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공식품용 쌀 사용확대를 위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에서 쌀을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발효식품을 연구·개발토록 지원하고, 가공업체에는 가공식품용 정부미를 '85~'86년산은 방출가격의 50%, '87~'89년산은 방출가격의 70%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민간의 쌀 가공식품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양조용 쌀 사용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억제해 왔던 탁·약주용 쌀 사용을 '90년 1월부터 허용하여 10년만에 100% 쌀막걸리를 다시 시판케 되었으며, 쌀만을 원료로 하는 청주도 개발되어 판매중이다. '91년부터는 증류식 소주 제조에도 쌀 사용을 허용토록 추진하고, 쌀을 원료로 하는 주류의 주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 주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언론, 매스컴, 영화제작 상영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농림

쌀의 공급과잉 상태의 지속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생산 농민에게도 결코 이로운 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쌀의 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우선 가공수요를 중심으로 한 쌀 소비확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쌀 수급 균형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시대에 부응하는 유가조정



신성철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사무관

정부는 '90년 11월 25일부로 등유와 휘발유 두 가지 유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국내가격을 인상조정하였다. 인상조정률은 8월 2일 폐만사태가 발발한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하여 배럴당 30~40달러 범위에서 심한 등락을 보이는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사태해결 이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25달러 가격수준을 기준으로 그동안 국내석유가격 산정의 기준 원유가인 배럴당 18달러와의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등유와 휘발유가격은 소비자가격으로 각각 28% 인상에 되어 등유는 종전 리터당 186원에서 238원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373원에서 477원이 되었다. 이로써 국내석유가격은 '81년 11월 이후 9차례에 걸친 연속적인 인하추세를 마감하고 약 9년만에 재인상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폐만 사태를 계기로 유가조정에 착수

정부가 폐만사태가 발발한 직후에 9~12월 평균 국내도입원유가가 배럴당 25달러를 상회하지 않는다면 연내에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유가인상에 대비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해 왔고 한 자리 수 물가를 통한 물가안정정책의 실현,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가 고유가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폐만사태가 일어난 지 4개월째가 되지만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고유가수준을 유지하는 긴장세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그간 다방면에 걸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는 여전히 과소비현상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국내유가를 금년말까지 계속 유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유가조정을 통하여 왜곡된 과소비현상을 조기에 억제토록 할 것인지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연말까지 약 1개월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선별적으로 등유와 휘발유에 대해 가격구조를 조정기로 하였다. 등유가격을 인상한 것은 겨울철을 맞아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등유의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등·경유의 가격차이를 확대하여 난방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등유를 억제하고 경유로의 전환을 촉진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휘발유의 경우 과소비의 대표적인 예로서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비절약정신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행태를 시급히 시정함이 국가전체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등유·휘발유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

등유의 경우 폐만사태 이후 쿠웨이트로부터 수입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9월 이후부터는 폐만지역의 군사용 수요증가로 사우디의 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등유물량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가격면에서도 원유가에 비해 2배 이상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의 등유소비는 '89년 월동기간

중 83%의 급격한 증가에 이어 '90년에도 1~9월기간 중 실적을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109%의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요인이 난방면적 35평 이상의 중·대형주택에서 난방연료를 경유가 아닌 등유사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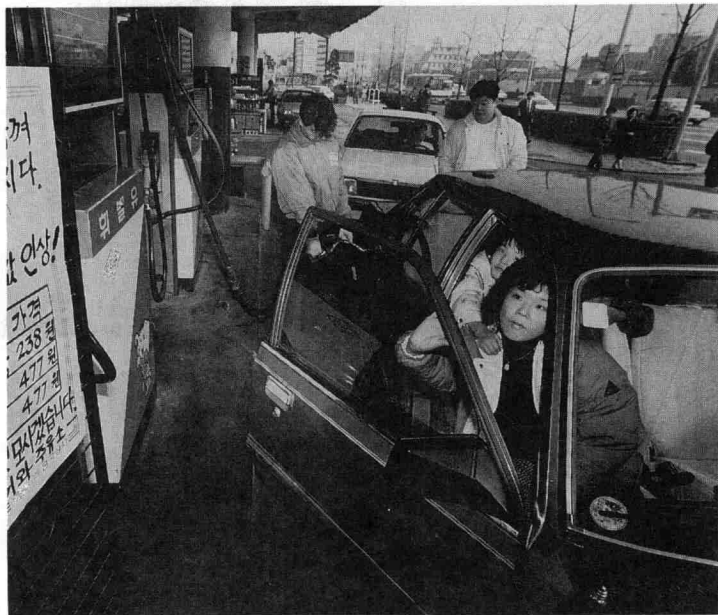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왜곡된 소비형태를 시정키 위하여 신규 등유보일러의 KS허가 유보 및 주유소의 대량판매 규제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90년 월동기간 중 등유 부족이 우려되고 있었다. 등유의 경유로의 대체가 미흡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등·경유 가격차가 리터당 4원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므로 금번 등유가격을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8% 인상하여 등·경유 가격차이를 확대함으로써 대체를 촉진토록 유도하고 동절기간 중 등유수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88년 이후 연 3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수준이 폐만사태 이후에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90년 1~9월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1% 이상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으로 이러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교통문제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역시 28% 인상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외의 B-C(벙커 씨)유·경유 및 가스의 경우에는 그 주용도가 산업용·발전용 및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폐만사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연내에는 가격을 인상치 않기로 하였다. 즉 B-C유는 주용도가 산업용 연료로 47%, 발전용으로 25%가 사용되고 있어 B-C유의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며, 경유는 53%가 버스·철도 등 수송부문, 22

%가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 유가인상을 하게 되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번 두 가지 유종에 대한 선별적인 가격인상은 전체 석유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약 5%의 인상에 해당되며, 소비자의 추가부담 규모는 등유의 경우 월동기간 중 6드림 사용을 기준으로 볼 때 62,400원 수준이며, 휘발유의 경우에는 하루 100km 운행차량을 기준으로 월간 추가부담 규모는 26,000원 수준이 된다.



한편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영향은 도매물가 0.19%포인트, 소비자물가 0.08%포인트 상승을 가져오며, 소비절약 기대효과는 휘발유의 경우 월동기간 중 휘발유소비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230만배럴의 수요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등유의 경우에는 약 14%에 해당하는 350만배럴이 경유로 대체될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절감 및 경유로의 전환으로 국제수지면에서 '90년 월동기간 중 약 1억 2천 5백만달러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인상 후의 가격을 주요 선진국



폐만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유가인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나,
전쟁으로 돌입시에는
생산유전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후유증이 지속되어
국내 유가인상 부담은
크게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의 가격과 비교시, 우리나라 등유가격을 100으로 할 때 일본 148, 대만 152로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휘발유 경우도 일본이 166, 대만 99, 서독 169로서 역시 낮은 수준에 있다.

저유가시대의 안이한 인식 버려야

참고로 '90년도 유가완충으로 확보한 재원 규모는 '90년 기금가용재원인 1,200억원, 금융예탁분 4,239억원, 재특예탁인출분 2,000억원 및 비수기 중 기금유보분 920억원을 포함하여 총 8,359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폐만사태 이후 '90년 10월말까지 유가완충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4,179억원이며 11월~12월 중 가격보전에 소요될 금액이 약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90년도에 소요될 가격보전 총액 규모는 약 8,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

폐만사태에 특별한 사태변화가 없는 한 연말까지의 국내유가의 인상요인은 전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1년도 유가관리방안은 폐만사태의 해결추이와 국제석유시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1/4분기 중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에는 폐만사태의 해결방향이 어느 정도 분명해질 것이므로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석유가격 관리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만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유가인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나, 전쟁으로 돌입시에는 생산유전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후유증이 지속되어 국내 유가인상 부담은 크게 높아질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80년대 저유가시대의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에너지의 이용합리화·소비절약 생활화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백원**

무역위원회와 산업피해구제

국제무역규범으로서의 GATT의 기본정신은 국가간의 관세 또는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가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각국의 경제효율을 증대시키고 산업개발을 촉진하는 등 교역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GATT는 자유무역 구현을 기본정신으로 하면서도 개도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예외조치(GATT 제18조 B)가 인정되어 있어 사전적 수입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는 일단 개방 후 특정산업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사후적인 구제(GATT 제6조, 제19조)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개발성으로 세계 10위권의 신흥무역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면서, '90년 1월부터는 국제수지협대상국에서의 졸업 및 UR협상 결과에 따라 비관세 장벽의 유지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무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상공부에 설치('87년 7월)된 무역위원회는 개방 이후에 사후적으로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적절한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상공부장관이나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기구로서 그 성격과 기능면에서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나 캐나다의 국제무역심판위원회(CITT) 등과 유사하다. 무역위원회의 기구는 산업 및 무역에 관한 학식과



김한진

상공부 과장 / 국제무역산업
박람회 조직위 파견*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임기 3년)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상임 1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산업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무역조사실이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판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90년대 수입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0년 4월에는 무역위원회를 개편하여 준독립적인 기구로 그 지위를 격상시킨 바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① 수입수량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판정 및 구제건의 ②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③ 지적소유권 침해물품의 수입 등 불공정수입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판정 및 구제건의 ④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판정 및 구제건의 ⑤ 수입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분석과 국제무역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일반적인 연구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무역위원회에 의한 그동안의 산업피해 조사실적은 총 19

구분	조사신청	조사중 (예비검토포함)	조사종지 또는 종결	구 제 건 의	
				관 세	비관세
수입급증	15(5)	3	4	2	6
덤핑수입	4(1)	1	3	-	-
계	19(6)	4	7	2	6

* 필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산업피해조사 2과장이었음.

* () 내는 '90년도 신규 제소

건('87년 7월~'90년 11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절차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SAFEGUARDS)

1) 조사신청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30% 이상인 생산자, 또한 국내산업의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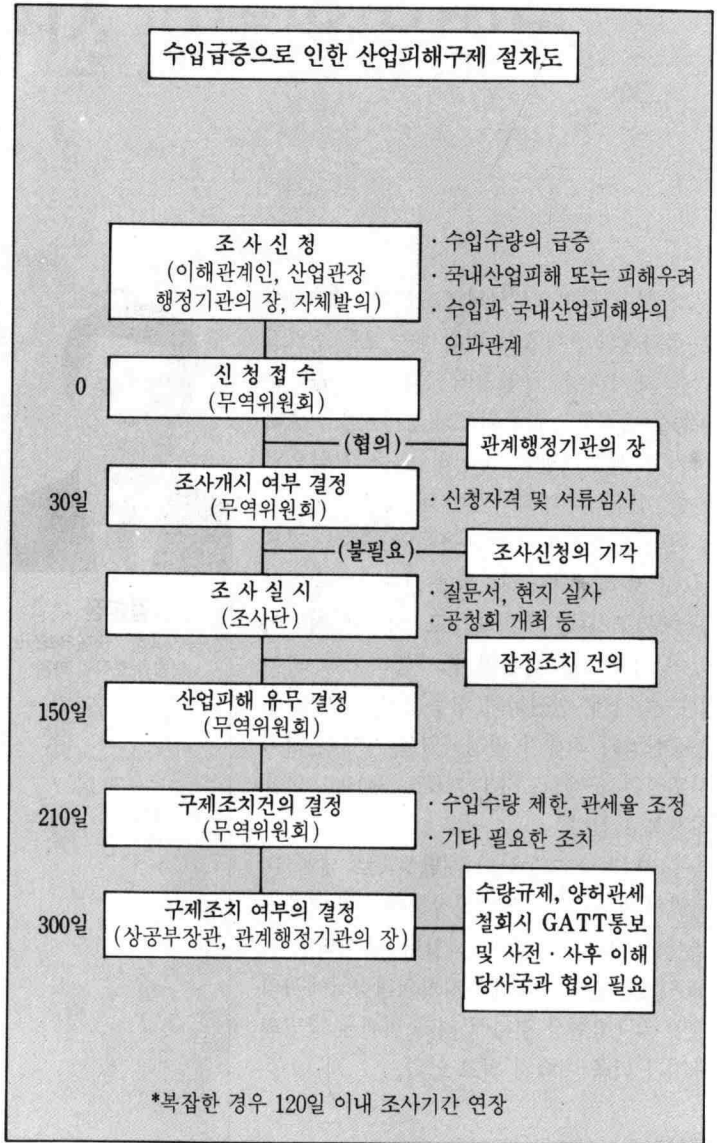
2) 조사실시

무역위원회가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가 개시되면 120일 내에(복잡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시 120일 내에 연장 가능) 조사단을 구성하여 질문서·공청회·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하게 된다.

3) 수입급증과 실질적인 피해 유무의 결정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 ①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사실 여부
- ② 당해 특정물품과 동종 및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인지 여부(국내산업의 범위 확정)
- ③ 당해 국내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 여부
- ④ 당해 수입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 무역위원회는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산업피해 긍정 판정시 60일 이내에 수입수량의 제한, 관세율 조정, 기타 필요한 구제방안



을 상공부장관에 건의하게 된다.

4) 구제조치 실시

상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구제조치가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날 또는 상공부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해당사국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시행하게 된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Anti-Dumping Duty)

1) 조사신청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당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국내생산자 단체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2) 조사 실시

재무부 장관은 조사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와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관세청: 덤핑혐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징후), 조사가 개시 되면 덤핑 여부는 관세청에서, 산업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와 산업 주무부처에서 조사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6개월 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이며 질문서·공청회·현지 조사에 의하여 덤핑률과 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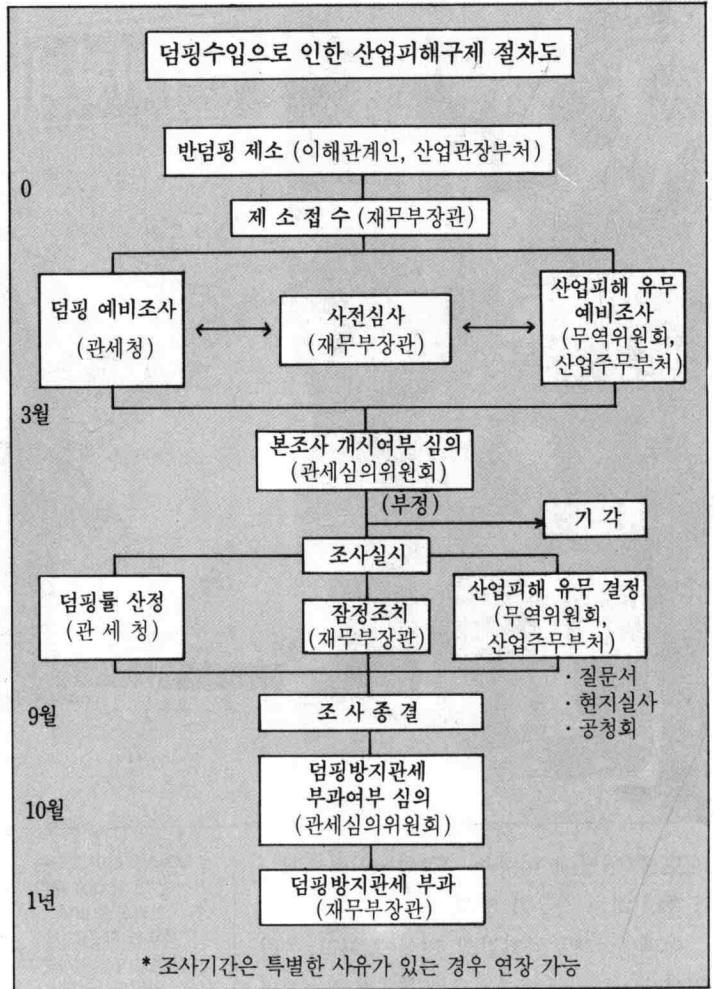
3) 덤핑과 실질적인 피해 유무의 결정

[덤핑률 산정]

$$: \text{덤핑률} = \frac{\text{정상가격} - \text{덤핑가격}}{\text{덤핑가격}} \times 100$$

- *1. 정상가격 : 수출국의 통상거래가격 → 제3국 수출가격 → 구성가격
- 2.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환원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 과세상 차이 등에 의해 조정) 비교
- 3. 부의 덤핑차액은 영인 것으로 간주하고 덤핑차액의 양인 경우에만 가중평균하여 덤핑을 산정

[실질적 피해 등 결정] : 당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가격 등 국내산업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여 결정



4) 구제조치 실시

재무부 장관이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덤핑혐의와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때에 덤핑차액 상당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 업계의 제도 활용

미국 ITC, 캐나다의 CITT, EC 집행위원회에 의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덤핑 등 산업피해 조사에 대하여는 우리 업계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내시장의 급속한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구제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업계가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점점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몇가지 유의할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국내생산자는 협회·조합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수입으로 인한 국내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및 운영사례에 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업계는 외국상품의 수입동향을 점검하여, 수입급증이나 또는 덤핑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등 산업피해 구제 관련기관이나 국제법률관계에 조예가 깊은 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산업피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조사신청 방법과

무역위원회의 기구는 산업 및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산업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무역조사실이 있다.

시기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산업피해 조사·판정이 치밀한 점을 감안하여, 제소 이후에도 업계 자체의 전문가나 변호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기간중에도 수입물량이나 수입가격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사에 대응하거나 민간차원의 시장질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UR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끝으로,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라는 점에서 이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업계는 산업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

그린벨트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실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시주변인 외곽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전국 14개 지역에 '71년 7월~'77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국토면적의 약 5.5%에 해당하는 5,397.1km²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은 산림이 울창한 녹지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임야가 약 60%, 농경지가 약 27%가 있으며, 그밖에 3,400여개의 크고 작은 자연부락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가 포함된 지역이 약 13%에 이르며 120만명에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의 배경

정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조치는 그동안 구역내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각종 민원과 각 일선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구역지정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도시의 팽창으로 부족한 공공시설 중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의 선별적 허용과 급증하는 여가인구를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석수
건설부 녹지공원과장

규제완화의 내용

이번 규제완화의 내용을 행위의 유형이나 그 설치주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민불편 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로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있던 적법한 주택은 현재 지상·지하 각 30평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로서 지하층이 없는 주택은 지상층 5평의 추가 증축을 허용하고, 15평 미만의 주택증축시 이제까지 허가사항이었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였으며, 버섯재배사의 면적확대(30→90평), 개인의 종묘배양장(30평) 설치를 허용한 것 등이다.

② 권한의 하부위임 및 절차의 간소화로서 건설부장관, 도지사의 사전승인사항 46건 중 주민생활 직결사항 31건은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단계별로 하향조정하고 국무회의심의 대상지역을 수도권 및 부산권으로 한정하였다.

③ 개발제한구역을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잔디광장, 피크닉장,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나대지를 활용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공공시설의 선별적 허용사항으로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구 청사의 제한적 신·증설과 국가보훈처의 보훈병원, 구치시설의 설치 및 대도

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따른 송유관 매설 허용 등이다.



규제완화의 필요성

첫째, 주민불편해소 및 생업시설의 확대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그동안의 주택증축의 상한으로 인해 자녀성장 등에 따라 주거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방 하나 규모인 5평을 추가 증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부족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하는 것이다.

주택의 증축시 종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도심지내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테니스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의 대체확보 방안으로 건축물이 필요 없는 배구장·정구장 등 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를 허용하였다.

받도록 하던 것을 15평 미만의 주택증축시에 자가설계에 의한 신고만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는 농·어가 부업의 범위내에서 축사 등 농림수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하고는 있으나 이미 허용된 시설 중 버섯재배사는 경제적 재배면적이 되도록 조금 확대하였다. 또한 해태·미역 등의 종묘배양장은 부락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공동설치가 어렵거나 배양장 면적이 부족한 곳은 개인도 30평까지 종묘배양장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여가·체육공간의 확대이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여가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건전하게 수용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근교의 경관이 수려한 산악계곡 및 호(湖)·소(沼) 등은 시민들의 무분별한 이용과 잡상인 등으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주차장·공중변소 등 편의시설과 잔디광장·피크닉장·청소년수련시설 등 시민들의 여가·휴식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뒷받침하면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법률의 시행으로 도심지내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테니스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의 대체확보 방안으로 건축물이 필요 없는 배구장·정구장 등 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되,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이고 현재까지 대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체력향상과 사회체육의 확대·보급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토지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공공청사의 부지확보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새로 시·구로 승격한 지역이 많은데 마땅한 청사부지가 없어 기존 읍·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최근에 승격된 시·구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는 청사입지를 마련할 수 없는 시·구에 한정해서 청사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보훈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밖에 없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6·25참전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상병가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6·25사변 격전지역이고 상이용사가 많은 대구지역에 새로 보훈병원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시설은 최근 급격한 범죄자의 증가로 기존시설만으로는 그 수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시설은 혐오시설로서 도심지내 설치가 불가하고 미결수인 관개로 재판대기에 따른 법원호송 문제 등 법원에서 너무 원거리에 위치할 수도 없는 특성때문에 부득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넷째, 공공사업추진의 효율화이다.

그동안 유류의 육상수송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 운송경비를 절감하는 등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유공장에서 전국 주요도시로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관을 통해서 석유류를 송유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이번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정책에 어떤 변혁을 가져오는 사항이 아니고, 오랜동안 건의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일부 해소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공공시설 중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정책에는 변함이 없이 엄격히 관리될 것이다.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조정되는 노선계획에 따라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경우 차고지의 신규설치는 불가피하다. 이때 개발제한구역 인근에 시·종점이 위치할 경우 제한적으로 공영으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이때에도 버스회사에 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녹지훼손이나 특혜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해서 임대하는 경우만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이다.

원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관할시장·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이었으나 구역지정 초기 각종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되므로 허용행위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상급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허가토록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제는 허가사무가 정형화·관례화되었을 뿐 아니라 현지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위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사안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허가토록 제도화되어 있어 신중하게 행위허용이 검토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존 위한 정부 의지는 확고

이번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정책에 어떤 변혁을 가져오는 사항이 아니고, 오랜동안 건의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일부 해소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공공시설 중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정책에는 변함이 없이 엄격히 관리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역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불편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를 발굴해서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발원**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 계획

현재 우리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6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개발의 결과 고도산업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구조 및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날라지게 되었고 각종의 사고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의 마련이 국민적 욕구로 분출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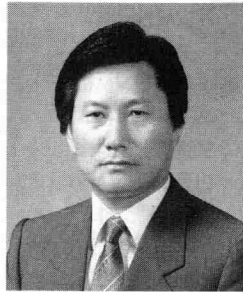
절대빈곤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던 '60, '70년대의 경제여건하에서는 고용기회의 확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이 국민복지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제대로 적용받고 있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를 검토하여 왔다.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 배경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10인 이상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만을 당연가입토록 하고 농어민·자영자 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농어민·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계층이 오히려 사회보장제도를 더 필요로 하는 측면이 강하다.

국민연금은 그 제도의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견상으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공적연금제도이긴 하나 현재로서



박정구
보건사회부 연금정책과장

는 사실상 근로자 공적연금제도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능한 한 조기에 당연적용하는 등 모든 국민이 공적연금제도에 의하여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연금의 실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국민연금의 조기 실시를 목표로 그 확대 실시 방안을 계속 추진하여 왔다.

이와 관련 '89년에 5~9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에서는 당연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민연금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부합되어 그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국민연금제도 확대 추진내용과 일정

5~9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확대 적용 실시는 현행제도의 체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당연가입

〈표 1〉 확대적용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추계

구 분	계	기 적 용	적용대상
사업장(천개소)	106	63	43
(%)	(100.0)	(59.4)	(40.6)
근로자(천명)	4,865	4,521	344
(%)	(100.0)	(92.9)	(7.1)

*기적용 수치는 '89년 12월말 기준이며 적용대상수치는 사업장 노동실태조사보고서('88년 노동부) 자료임.

토록 그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이 당연적용될 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4만 3천개 사업장의 34만 4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대비 약 40.6%가 늘어나는 것이며 가입자 대비 약 7.1%가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를 5~9인 사업장에 대해 확대실시하기 위해서는 확대실시가 가능하도록 행정체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 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89년도에는 확대시기와 방향을 결정하고 관계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민연금 확대실시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노·사가 제도확대실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 실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둘째로, 확대실시로 인한 사업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량을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차질없는 준비과정을 거쳐 확대실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중심으로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야말로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확대추진과 조기정착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실시확대의 필요성과 효과를 정확히 인식시켜 실행초기 부담증가에 따른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고 제도시행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령을 정비하여 법적 뒷받침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근로자는 장래생활에 대한 안정감으로 보다 애사심있는 자세로 근로에 임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의 확대는 물론 산업평화의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되는 효과

모든 국민들은 일상생활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질환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늙기 마련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와 같이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장해, 사망 또는 노령에 달하여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중단될 경우에 연금을 급여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5~9인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이 당연적용되게 됨으로써 이들 계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필요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국민연대의식의 고취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그 이상 규모의 사업장 근로자보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보여지는바, 이들이 국민연금에 당연적용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의 재원이 되는 각출금을 거두고 연금을 지급할 때 고소득자가 보다 많은 부담을 지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근로자는 장래생활에 대한 안정감으로 보다 애사심있는 자세로 근로에 임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의 확대는 물론 산업평화의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추로서 그 맡겨진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제도로 발전되도록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원**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첫 통신위성

‘무궁화’ 위성 사업



조병하
체신부 위성담당관

체신부는 통신방송위성을 1995년 4월에 발사하여 10월부터 운용할 것을 목표로 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 주파수등록위원회(IFRB)에 KOREASAT로 공식 등록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국내에서는 ‘무궁화’로 애칭되고 있다.

주위성과 예비위성으로 된 무궁화위성의 제작과 발사는 선진국에 의뢰하고 이에 관한 지상장비는 국내에서 개발할 계획인데 이에 소요되는 자금 3천억원은 전액 한국전기통신 공사가 부담한다.

작년에 작성된 위성체 설계기준에 의하여 올해에 위성체의 제작 및 발사계약이 체결되면 약 3년간에 걸쳐서 위성제작, 지상장비 개발 및 건설, 기술훈련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무궁화위성이 제공할 서비스와 용량은 통신 및 비디오 중계기 12개와 직접위성방송 3채널 이 된다.

이 사업은 체신부가 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집행을, 한국전자통신 연구소가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차관급과 통신방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방송위성사업추진위원회를 체신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위성을 보유하게 되는 시기

위성사업은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하여 '81년부터 그 타당성을 연구하였으나 그

당시는 충분한 수요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다.

위성사업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타당성과 수익성이 관건이 될 것이나 이 문제는 그후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위성의 운영기간인 1995~2005년간에는 수요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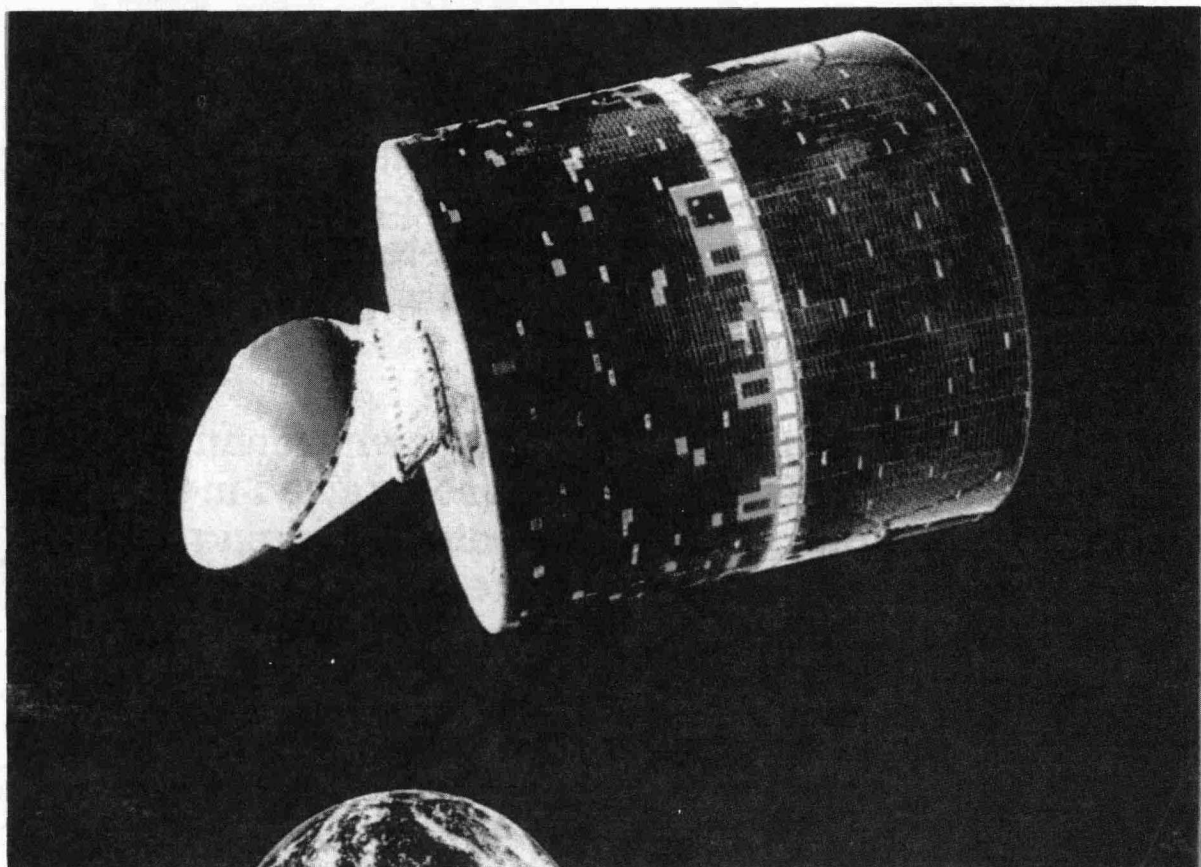
그러나 이 사업은 수익성 문제를 떠나서 다음에 설명하는 기대효과면에서도 낮은 감은 있지만 꼭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세계에는 20여개국이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 위성을 발사한 해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85년도의 호주가 최고로 9,193달러, '81년도의 인도가 최저로 252달러로서 각국의 평균치는 4,193달러인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9년에 벌써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통신위성에 들어가는 사업비 규모

위성체 2기의 제작 발사, 지상시설의 연구개발 및 건설, 기술훈련 등에 모두 3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위성체의 운용기간인 10년과 4천만 인구수로 나눠 보면 연간 750원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1년에 커피 한잔 값만 아끼면 되는 금액이다.

이는 미국이 우주개발에서 소련에 뒤지자, 1961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서 우리 모두가 구두 한 켤레씩만 절약하면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킬 것이라는 연설을 한 다음, 8년간 240억달러가 들어가는 아폴로 계획을 추진한 결과, 우주선의 달 착륙계획을 성공시킨 우주개발의 지나간 뒷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통신위성이 제공하는 서비스

무궁화위성은 적도상공 36,000km의 동경 116도 궤도에서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회전하면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성방송 서비스는 현재 지상방송의 한계를 공간적으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지상방송은 송신소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

산악 등의 지형적인 장애물 때문에 전파가 도달되지 않는 난시청지역이 생기게 되며 TV화면의 수신상태가 불량해진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위성에서 직접 지상으로 되돌려 보내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소형의 접시안테나를 위성방향으로 설치만 하면 화질과 음질이 깨끗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성방송은 지상방식에 비하여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므로 지상망으로는 어려운 여러가지 새로운 방송서비스, 예를 들면 팩시밀리방송·문자다중방송·고선명 TV 방송(HDTV)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최근 일부에서는 위성을 통하여 남북간의 방송교류나 무궁화위성의 직접위성방송 서비스권역을 확대하여 북한에서도 시청하게 하자

위성사업에서 축적한 관련기술을 산업체에 전수하고 산업체가 우수산업에 참여해서 수출과 연계될 때 관련산업 육성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앞당기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방식인 직접위성방송은 배정된 영역내에서만 서비스되 전파의 강도를 최소화하도록 ITU에서 그 기준치를 정하고 세계 각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U에서는 각국의 전파침투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만 위성의 등록과 발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성방송 서비스권역은 우리가 6개, 북한이 5개의 채널을 서로 다르게 배정받았는데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빔으로 확대하거나 빔의 중심점을 휴전선 부근으로 옮겨 중계기를 빌려주는 문제는 IFRB의 변경절차와 인접 관련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

한편 위성통신 서비스는 그것이 갖는 광역성·同報性·회선구성의 신속성과 융통성 등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통신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시 또는 외딴 섬이

나 산간벽지 등 지상통신망 구성이 어려운 경우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망의 신속한 구성은 지상의 어떤 통신망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전송수단을 사용하여 小容量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회선을 제공하거나 정부기관, 공공단체, 기업용의 전용통신회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비디오 중계기로는 TV중계·유선방송(CATV)·영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위성 발사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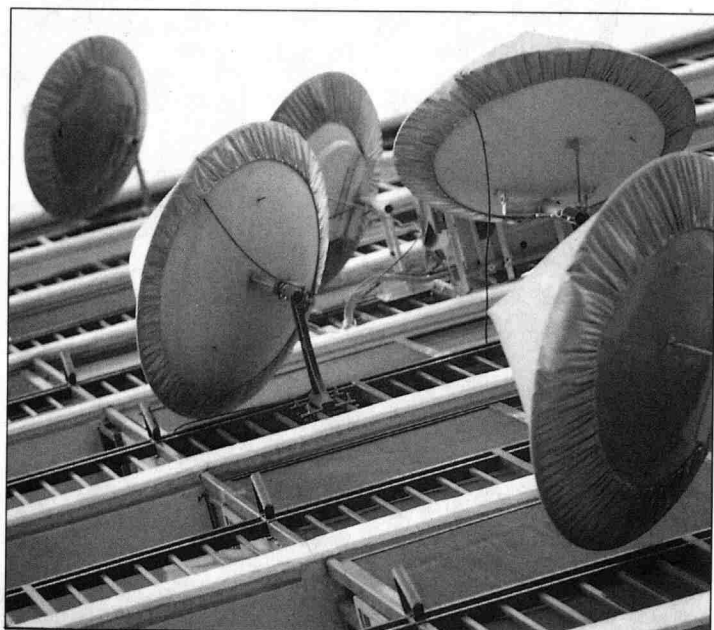
직접위성방송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약 3만 6,000km 상공에 떠 있는 무궁화위성에서 지상으로 되돌려 보내는 전파는 전국의 산간벽지, 외딴 섬 등 어디서나 선명한 화면과 음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아직 전 인구의 6%, 전 국토의 15%를 차지하는 TV 난시청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게 된다.

현재 일본의 위성방송이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 오고 있는데 우리도 위성방송을 하게 되면 보다 선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일본 위성방송에 대한 간접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위성기술은 전자·통신·컴퓨터·기계·금속·고분자 소재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첨단복합기술로서 이와 같은 기술이 개발·전수·축적됨으로써 다른 분야에 대한 기술과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위성사업에서 축적한 관련기술을 산업체에 전수하고 산업체가 우주산업에 참여해서 수출과 연계될 때 관련산업 육성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전수받은 위성체 제작 등에 관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제2세대 위성은 우리의 기술로 제작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다음 목표이기도 하다. [국립]

현재 일본의 위성방송이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 오고 있는데 우리도 위성방송을 하게 되면 보다 선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일본 위성방송에 대한 간접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연료사용정책

대기오염은 배출업소 및 일반가정 등 고정 오염원과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에서 기인되는바, 이러한 대기오염 현상은 오염물질 배출 자체뿐만 아니라 기상 및 지형여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배출구의 높이, 배출가스 종류 등 배출원의 물리적인 상태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은 크게 보아 다음 두 가지 요인에서 발생된다.

첫째 대도시의 난방연료의 연소과정과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황산화물(SO_x)·질소산화물(NO_x)·일산화탄소(CO)·먼지 등이 있으며, 둘째 공단지역내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업의 종류, 제조과정, 생산제품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불소·염소·시안화합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은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과는 달리 대기중에 배출되면 확산되어 제거하기가 곤란하며 인체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기보전정책의 핵심은 철저한 배출규제와 더불어, 원천적인 방법으로는 오염물질이 덜 발생하는 연료의 사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의 주요 연료사용정책

저황유의 공급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피해가 큰 것 중의 하나는 아황산가스인데 이것은 연료 중에 포함된 황분이 연소시에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80년 서울의 아황산가스(SO₂) 오염도는 0.094ppm으로 환경기준인 0.05ppm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황유의 공급을 추진하여 유류의 황함유기준을 벙커C油는 4%에서 1.6%로, 경유는 1%에서 0.4%로 기준을 강화하여 '81년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지역 및 울산지역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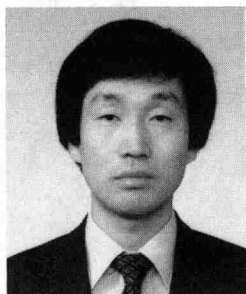
이후, 공급지역과 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급지역은 '90년 현재 안산시·여천군을 포함한 전국 24개시·7개군이며, 공급물량은 벙커C油는 전국 전체 사용량의 65%, 경유는 81%의 수준이다.

고체연료에 대한 사용규제

저황유의 공급 및 확대로 대기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오염도는 연료사용량의 증가로 여전히 환경기준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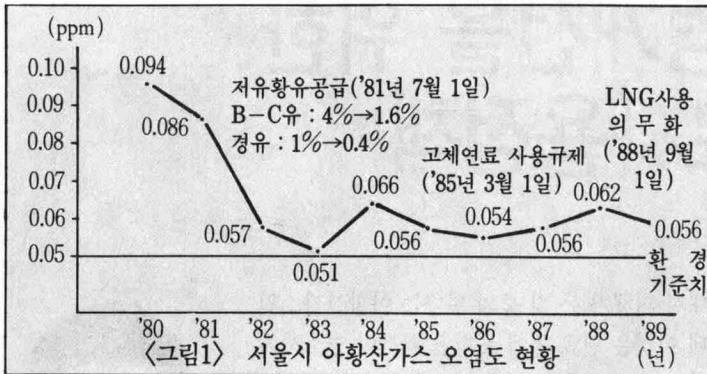
이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대하여 고체연료(유연탄, 목재 등)의 사용을 '85년 3월부터 규제하기 시작하여 '90년 현재는 규제지역을 20개시, 2개군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된 고체연료의 사용을 억제시키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서 불량연료의 사용, 방지시설의 부실 등을 사전에 예방해 주어 대기오염의 개선은 물론, 매년



김원민

환경처 대기제도와 사무관



<그림1>

으로 인한 민원도 예방시키는 것이다.

이 고체연료 사용규제에 따라 목욕탕과 산업시설에서의 유연탄, 폐기물 소각 등이 억제되어 왔던 것이다.

<표 1> 연도별 저공해차 보급률*

(단위 : 천대)

'87년	'88년	'89년	'90년	'95년	2000년
9%	37%	55%	70%	93%	99%
(74)	(410)	(860)	(1,403)	(3,990)	(7,959)

* 승용차 등 휘발유사용차 대비율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서울 등 대도시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료 사용 정책과 동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급증하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다.

'90년 9월 현재 전체 자동차는 320만대이며 이중 약 1/3인 100만대가 서울에 몰려있다.

환경처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그간 상설 매연단속반을 확충·운영 (44개반)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중 획기적인 것은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87년 7월부터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이다.

이 저공해차는 오염물질이 기존차량의 1/10밖에 안되며, 아울러 무연휘발유만 사용하는 까닭으로 중금속인 납의 대기 중 오염도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저공해차의 보급률은 '90년말로 70%로 예상되며 2000년까지는 거의 전 승용차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연료사용정책

청정연료(LNG)의 공급

그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저황유의 공급, 고체연료 사용규제, 저공해차의 보급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늘어난 가연 연료사용량 및 자동차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여전히 환경기준을 넘어서는 형편이었다.

이에 환경처에서는 획기적인 연료대책이 없는 한 선진국 수준의 맑고 쾌적한 환경개선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료사용정책의 일대전기로 청정연료(LNG)의 공급을 '88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는 타연료에 비해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연료로서 대기보전 측면에서는 최적의 연료인 것이다. 다만 타연료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흠이다.

환경처에서는 LNG의 사용대상 및 지역의 확대만이 획기적인 대기오염개선의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88년 9월부터 서울지역의 업무용 빌딩(보일러용량 2톤 이상)의 연료를 LNG로 사용토록 했다. 이어서 '90년 1월에는 '90년에서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대상을 중소형빌딩은 물론 25평 이상의 기존아파트, 14평 이상의 신규아파트 및 발전소에까지 확대하는 것과, 그리고 사용지역도 서울에서 광명시·고양군 등 14개 도시의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확정·공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중에서 동절기에 난방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아파트단지의 LNG사용은 '90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처에서는
 획기적인
 연료대책이 없는 한
 맑고 쾌적한 환경개선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정연료의 공급을
 '88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는
 타연료에 비해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연료로서
 대기보전 측면에서는
 최적의 연료이다.

'90년 5월에는 LNG가격을 종전 243원(㎡ 당)에서 212원으로 인하하였고, 보일러용량별 로의 시설분담금 할인은 종전 20~60%를 30~70%로 확대시켰고, 시설 설치비의 융자 기금도 150억원에서 432억원으로 확충시킨 바, 39개 아파트단지가 계획대로 진행중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연차적인 LNG 확대사용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2~3 년내에는 현 환경기준을 달성할 전망이며, 확대사용의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또한 중부·영남·호남권의 LNG보급은 LNG 주배관망 설치계획에 따라 '94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황연탄의 공급

연료사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도시내 국지적인 오염우심지역에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 문래동 등 연탄사용주택 밀집지역은 동절기 오염우심지역이나, 가옥구조상의 문제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LNG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연탄사용주택 밀집지역인 문래동·구로동 등 9개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황함량이 0.5% 이하인(기타 지역은 0.75%) 저황연탄 20만톤을 집중 공급하고 있다.

이 저황연탄 공급은 우선 올해의 실시효과를 평가한 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위해 노력

앞으로는 환경기준의 강화와 아울러 대기오염도 표시방법도 현행 ppm 등 전문용어 대신에 시민의 감각을 고려한 대기오염지수를 내년중에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현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현 28개 도시 62개

<표 2> LNG사용의무화 조치

(환경처 고시 제90-3호, '90년 1월 24일)

시행시기	대 상 시 설	
	서울시	수도권(14개 시·군)
'90.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톤 이상 대형빌딩 : 190개소 · 1~2톤 미만 중형빌딩 : 900개소 (LNG 또는 0.4% 경유) · 평균전용면적 35평 이상 · 기존아파트 : 30,000세대 (39개 단지) · 평균전용면적 14평 이상 · 신규아파트 : 50,000세대 (80개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경인화력) · 유황함량 1.6% B-C유→0.3% B-C유로 대체
'91.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톤 이상 대형빌딩 : 35개소 · 0.5~1톤 미만 소형빌딩 : 1,900개소 (LNG 또는 0.4% 경유) · 평균전용면적 30평 이상 · 기존아파트 : 30,000세대 (46개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톤 이상 대형빌딩 : 230개소 · 평균전용면적 35평 이상 · 기존아파트 : 400세대 (1개단지) · 평균전용면적 14평 이상 · 신규아파트 : 22,000세대 (40개 단지)
'92.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전용면적 25평 이상 · 기존아파트 : 80,000세대 (113개 단지) · 발전소(서울화력) · 0.3% B-C유→L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2톤 미만 중·소형빌딩 : 1,129개소 (LNG 또는 0.4% 경유) · 평균전용면적 30평 이상 · 기존아파트 : 5,000세대 (8개 단지)
'93. 9.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전용면적 25평 이상 · 기존아파트 : 5,000세대 (9개 단지)

※ 수도권 지역 : 인천·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고양군

측정소를 '95년까지 92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측정소 위치 등 효율적인 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 학계 등과의 의견교환과 토론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한편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으로서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이 심한 경유차의 휘발유·LPG로의 연료대체를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기·알콜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기보전정책을 착오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위해 시민·전문가·관계부처의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는 바이다. **발행**

우리나라 항만의 장기개발방향



김영남
해운항만청 기획과장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해상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에서는 항만시설 확충사업과 기존시설의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만성적인 하역능력 부족현상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99% 이상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항만시설부족으로 인한 체선·체화현상은 제품의 원가상승요인이 되어 수출입상품의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만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현황과 세계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따른 항만수요, 항만의 개발계획을 살펴봄으로써 200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 항만의 장기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만의 장기개발계획

권역별 거점항만의 개발

앞으로의 항만개발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도로망 확충계획·철도 수송계획·산업기지 개발계획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개발이익을 고루 분배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권역별 거점항만을 지정, 중점 개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관문항의 역할은 인천항이 담당하고, 對中國 교역기지항 및 중부권 거점항은 群·長新港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며, 서남권에서는 광양항을 개발하여 컨테이너항 및 제철관련 지원항으로 운영하고, 부산항과 울산항은 동남권의 거점항만으로 컨테이너·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입화물 처리항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태백권의 거점항만으로 동해항을 개발, 대북방교역 화물 및 시멘트 처리항으로 운용하고, 제주권의 관문항인 제주항을 관광항만으로 개발, 배후 관광자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의 기능별 특화개발

세계적인 항만환경 변화추세인 항만별 특화개념의 확대에 부응하여 항만기능·화물특성을 고려하여 화물별 주처리 항만에 대하여 전용 항만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처리항으로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개발하고 보조항만으로 인천·마산·군산항을 운영하며, 유류는 울산·광양·대산항 등에서 집중 처리하며, 수입석탄은 인천석탄부두·목포·울산·동해항 등을 이용한다.

생산시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멘트는 동해항 및 삼척항을 이용하여 출하하고, 수입양곡은 양곡전용부두 및 사일로(silo) 시설이 완비된 인천항을 이용하며, 목재는 인천북항·부산다대포항·군산항 등에 전용 처리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항만으로는 국제관광 지원시설로서 제주항을 개발하고, 속초항을 태백권의 관광중심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컨테이너부두 시설의 확충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화 가속으로 컨테이너화물이 타화물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89년도에 전국에서 취급된 컨테이너화물량은 237만 5천TEU¹⁾인데 부산항에서 취급된 컨테이너는 이중 95%에 해당하는 225만 8천TEU로 부산항의 처리능력 126만TEU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처리능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부산항 이용 컨테이너중 82%가 시내에 산재한 부두와 컨테이너 야적장을 이용하는 불합리한 유통체제로 인하여 도시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수송단계 및 이중조작으로 운송비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01년에는 7백만TEU로 추정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컨테이너화물의 부산항 집중완화를 위하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축조를 조기 완공하고 화물처리 기반조성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2개의 컨테이너 처리중심 항만체제로 개발 운영하는 한편, 부산항의 불합리한 유통체제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 컨테이너 처리대책을

〈표 1〉 컨테이너화물수요 및 처리능력 전망
(단위 : 천TEU)

구 분	'89	'91	'96	2001
물 동 량	2,375	2,940	4,600	6,900
처리능력	1,410	2,520	4,470	6,620
과 부 족	△965	△420	△130	△280

*자료 : 광양 신항만 기본계획 용역

1) 길이 20피트인 컨테이너 1개를 1TEU라고 함.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90년 4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설립·운영중에 있다.

컨테이너 처리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부산항 5, 6 부두의 운영을 개선하여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부산항 3단계 개발부두의 연간 처리능력을 당초 68만TEU에서 최대 96만TEU까지 증강시키며, 한·일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마산항으로 전이시켜 연간 30만TEU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마산항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적극 개발로 '95년 이후에는 2개의 컨테이너 중심항만체제로 운영하며, 부산항의 시설부족현상 해소를 위해서 4단계 컨테이너부두건설을 추진하고 부산항 컨테이너의 철도 이용률을 증진시켜 수송체제를 개선하고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1)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광양항에 총 20개 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하여 480만TEU의 처리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87년 착수한 본 사업은 우선 1단계로 '93년까지 5만톤급 1선석을 건설키로 계획되었으나 급증하는 컨테이너 처리를 위하여 1단계 사업을 '91년까지 완공토록 사업을 촉진하며, 5만톤급 3선석을 추가 건설하여 연간 96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본격적인 컨테이너부두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2단계 사업도 '90년에 착수하여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3단계 사업으로 6개 선석을 2000년까지 추가 건설하여 부산항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러나 해운항만의 여건상 컨테이너선의 취항, 물동량 확보 등 터미널운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신규 항만정책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부두운영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역할은
인천항이 담당하고,
對中國 교역 기지항 및
중부권 거점항으로는
群·長新港을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며,
서남권에서는
광양항을 개발하여
컨테이너항 및
제철관련 지원항으로
운영하고,
부산항과 울산항은
동남권의 거점항만으로
컨테이너·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입화물
처리항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화물유통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항만의 하역능력을
제고하고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해운·항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항만의 중점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배후수송망 확보를 위하여 철도청·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부곡철도 화물기지까지 철도운송체제를 확립하고 남해고속도로의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계획의 조기 추진 등 도로수송망 확충이 조기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항만기능시설의 민자투자를 유치 국내의 船社의 전용터미널 확보 운영육구를 해결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대폭 인하, 통관절차 및 보세운송제도의 개선 등 항만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2)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85년도에 착수하여 '91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산항 3단계 개발사업은 외항방파제 1,704m를 건설하고 5만톤급 컨테이너부두 3선좌와 부두내 컨테이너 야적장 27만평을 확보하고 부산시 도시고속도로와 직결되는 6차선 전용도로를 건설하여 부두의 컨테이너 야적장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심통과 없이 컨테이너화물을 직송함으로써 부산시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며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 96만TEU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1년에도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량은 252만TEU로서 처리능력 220만TEU를 30만TEU나 상회할 것이며 '96년에는 화물량이 313만TEU로 증가되어 부산항의 시설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양항 활성화 시기까지의 당면 컨테이너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 즉시 부두이용이 가능한 부산항 4단계 개발사업을 '90년부터 시행하여 5만톤급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추가 확보하여 연간 120만TEU의 처리능력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대북방교역에 대비한 대응항만 개발

최근 정부의 대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대북방 직교역 화물량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므로 장래 교역량 급증에 대비 우리측 교역대응항만을 개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대북방교역에 대한 대응항만으로서 서해안의 인천·군산항과 동해안의 동해·포항·부산항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인천항 및 동해항의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인천항의 선거내 1,5 및 6부두 등 미개발부두를 정비하여 5만톤급 등 8선석을 확보하여 5백만톤의 하역능력을 증가시키며, 선거내에서 처리하던 고철·원목 등 공해성 화물을 전이처리하기 위한 북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태백권의 거점항만으로 시멘트·석탄 등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동해항은 동해안측의 대북한·대소 교역화물 처리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3만톤급 등 7선석을 축조하는 동해항 2단계 개발사업을 '90년부터 추진, 1천만톤의 하역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항만 개발

서해안지역 개발사업으로 계획중인 群·長 광역산업기지 지원항만 및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서 群·長 신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5년부터 시행한 금강하구 수리현상조사 결과에 따라 '89년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90년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까지 5만톤급 등 62개 선석을 확보, 연간 2천2백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으로서, 개발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대중국 교역화물량 및 群·長 산업기지 발생화물량 추이에 따라 적정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개발, 대처할 예정이다.

관광항만 개발

우리나라 국민생활의 수준향상에 따른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요 관광자원인 제주도 및 태백권의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며, 국내외 관광객선 취항계획과 연계한 지원항만으로 제주항 및 속초항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항은 국제관광 휴양지역인 제주도의 중심항만으로서 극동지역 순환 국제여객항로와 연계개발을 위하여 2만톤급 카페리 1선석을 포함, 2만톤급 등 11선석을 건설하여 하역능력을 제고하며,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고, 7만톤급 관광유람선의 수용이 가능도록 하여 국제관광항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속초항은 북항과 청초호를 기능별로 분리개발하여 북항은 화물 및 여객선 겸용으로 활용하고 청초호는 어선 및 관광위락기능을 부여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항만개발의 민간참여 확대

장기적인 항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나 정부재정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항만시설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만성적인 시설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가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절약재원을 군소항만에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에 대한 민자유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방파제·공공부두·臨港교통시설 등은 정부에서 투자하고 항만이용자의 직접관련시설 및 공공성 확보가 필요치 않은 상부기능시설·전용부두시설은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정부와 민간간의 항만개발투자를 효과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항만개발에 있어 민자유치는 공공성을 감안하고 항만수요 범위내에서 투자가 이루어

져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며 항만운영과 직접 연관되는 실수요자 중심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민자유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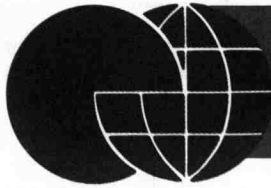


수출지원항만의 중점적 개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화물유통의 증추기능을 담당하는 항만의 하역능력을 제고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해운·항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항만의 중점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2000년대를 대비한 장기항만개발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함으로써 항만시설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해운항만이 수출입 지원을 위한 수송체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관계자의 노력은 물론, 국가주요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남원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화 가속으로 컨테이너화물이 타화물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래에의 투자

진해술 과학기술처 부이사관 / 주미 한국대사관 과학관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 10월에 본의 아니게 두 차례나 무급휴가를 가져야만 할 뻔했다. 이것은 미국의 회계년도가 새로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의회와 행정부가 1조 2천억불에 달하는 새해 예산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 경우 일부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회와 행정부는 임시예산지출 조치로 어렵게 고비를 넘겼고, 10월말에 가서야 예산협상을 겨우 마무리짓게 되어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가 대외경쟁력의 저하와 무역적자의 증대, 그리고 재정적자의 누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번 예산협상에서도 누증된 재정적자를 당초 계획대로 앞으로 5년간 5,000억불 감축(금번에는 400억불을 감축키로 합의)하되, 이를 충당하기 위해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고 일반재정 지출을 감축할 것인가가 의회·정부간 그리고 양당간에 쟁점이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결국 고소득층과 휘발유 소비부문 등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고(앞으

로 5년간 1,400억불 증수), 국방·외교·사회간접부문 등 거의 모든 일반 재정부문에서 지출을 줄여서 재정적자를 감축해 가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정부·의회·국민 어느 누구도 만족스러운 예산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합의한 긴축예산에서도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개발정책 의지를 뚜렷이 하고 관련 예산을 상대적으로 대폭 증액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91회계년도 예산(안)의 서두에서 제일 먼저 미래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the future)를 강조하고, 우주·생명공학 등 '휴먼 프런티어'의 확대, 초대형입자 가속기(superconducting super collider)의 건설,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이러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즉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91회계년도 연방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333억불로서 이는 전년대비 3% 증가(82불변가액 1.2% 감소)한 긴축예산

이나, 이 중 과학기술연구개발 예산규모는 712억불로서 전년대비 6.7%를 증가(82불변가액 2.3%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개발을 크게 강조하였다.

특히 미우주개발청(NASA)은 전년대비 23%(불변 22.9%)나 증가했고, 국립과학재단(경상 13.3%, 불변 8.7%)·환경청·표준연구소 등의 예산도 급증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SSC(3억불), 지구온난화 연구(10억불), 초중등 과학·수학교육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 예산은 물론 의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조정·집계되어 곧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이나 그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재정 여건은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사태에 따른 대규모 파병과 함께 에너지 위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전문가들 중에는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예산을 과감히 늘려 나감으로써 미래에 대한 투자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미국 정치와 정책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남원지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

노경상 농림수산부 과장 /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파견

일 본정부는 농산물 수입제한품목을 '92년까지 17개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수입자유화를 반대하는 품목은 쌀·전분·탈지분유 등의 유제품이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도 이 품목을 지키려고 외무상·통상상·농수상·국회의원 등의 관계자들과 농협 등의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3년전에 이미 결정한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하여 정부와 농민단체·사육농가들이 한결같이 수입자유화에 밀려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고기소 송아지가격 안정대책과 비육우경영 안정대책 등의 긴급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대책으로 '90년 4월 1일부터 고기소의 송아지생산자 보급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를 재원으로 하는 肉用子牛가격안정기금을 만들어 송아지가격안정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진흥사업단은 쇠고기수입방법을 '신SBS(동시매매입찰제도)'라는 방식에 의하여 수입함으로써 거의 수입자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자유화를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물량 측면에서 보더라도 '89년에 36만 4천톤, '90년 9월까지 18만 4천톤을 수입하여 재고가 11만톤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고의 증가는 수입자유화가 되더라도 쇠고기소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쇠고기가격은 일본 특유의 품종인 和牛의 경우 큰 변동이 없이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젓소고기의 경우는 중등급 이하의 고기는 '90년부터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쇠고기는 지육상태에서 A, B, C로 나누고 각각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B-2 이하의 쇠고기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 이상은 아직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수입자유화 이후 B-2 이하의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육질중시형 육용우생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육농가에 보급시키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는 각 기관의 조직이 동시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뇌가 발육하고 다음에 뼈, 근육, 지방의 순으로 발육한다는 것이다. 몸의 부분은 머

리, 목, 가슴, 등, 허리 등의 순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각 조직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분을 적절히 공급해 줌으로써 비육기간을 단축시키고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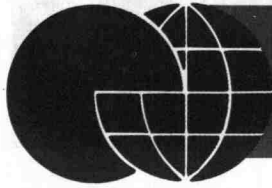
'88년 11월부터 1년간 전국의 77개소의 농장에서 실증전시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육기간이 젓소는 5개월, 화우는 3개월이 단축되어 사료비와 금융부담을 덜어주어 생산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육질도 중등급 이상 즉 B-3 이상을 69% 정도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사육농가는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면 농협의 소의 성장단계에 따라 농협이 특별히 제조한 사료를 공급하며, 필요시에는 이 시스템에 적합한 우사도 지어주고 생산 제 자재도 공급해 준다. 이렇게 사육된 소는 농협의 산지식육센터에서 도축하여 특별 상표를 붙여 정육점·생협·슈퍼마켓 등에 공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은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4월 이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당장은 큰 충격이 없을 것이지만 3년 정도 후에는 소사육구조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여 5년 후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쇠고기 수입자유화 대응방안은 우리의 쇠고기산업 발전에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필



국가정책의 상대성

이용근 재무부 과장 / 주미 한국대사관 재무관

일 짝이 디즈레일리는 '사랑보다도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돈'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의 흐름을 바로 잡는 문제는 변심한 애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요즘 미국의 재무성과 중앙은행 당국자들도 이처럼 심각한 과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내 자금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것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예산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 국채발행이 여의치 못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저축이나 투자에 나설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미 국채를 대량으로 소화해 온 일본의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주가·부동산가격의 하락에 타격을 받아 '90년 들어서는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 오히려 기존 투자분을 회수하고 있는 것도 사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는 현재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되살아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경제성

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제조업 특히 수출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실업이 증가하고 점진적으로 호전되어 온 무역수지도 더 이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셋째는 은행들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연의 금융중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3세계 외채위기에 놀란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및 기업매수(LBO) 자금 대출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美 전역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LBO 기업의 수지상태가 악화되자 이들 대출채권이 대량으로 부실화되었다. 도산 은행이 늘어나면서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도 고갈 직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은행들은 수년내로 감독당국이 설정한 자기자본비율('90년말까지 7.25%, '92년말까지는 8%)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미 은행들은 우량 차입자가 아니면 신규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 꺾박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이들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어 악순

환을 되풀이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정부 부문의 부채가 GNP의 5~6% 수준으로까지 치솟자 민간부문은 차입의 길이 막혀(crowding out) 경제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익성의 압박을 받는 은행들은 자산처분에 매달려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 성장이 부진해지고 이것은 다시 세수감소를 초래하여 예산적자폭이 늘어나 재정차입의 확대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美정부당국은 '80년대말 저축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해 엄청난 재정손실이 야기된 것을 깨닫고 금융산업의 개편을 통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볼 작정인 것 같다. 즉 글래스-스티갈 법, 맥파든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강화해 주고 산업자금의 공급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켜 예산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년말까지 재무성에서 금융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면 의회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 초점이 되고 있는 제도란 대부분 1930년대초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급조된 법률들로서, 반세기 이상 경과 하면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생긴 것들이다. 무릇 만고불변의 정책이란 있을 수 없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끊임 없이 탈바꿈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민간부문의 자율능력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신뢰감이라 하겠다. 국민의恒心을 인정하는 것은 건국 이래 미국 민주주의 불변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남원**

대만인의 對中國 경제교류

김두현 경제기획원 사무관 / 중화민국 중화경제연구원 파견

최근 대만은 이등휘 총통의 취임 이후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비교적 과거와 다른 탄성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해가고 있다. 소련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및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그리고 동서독의 평화통일 등 지구촌의 환경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면서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 대하여 취해온 경직된 체제노선을 점점 완화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彈性政策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총통부 직속의 국가통일위원회 발족, 친척방문의 확대허용, 중·대만간 常務協調處 설립, 최근의 중·대만간 민간무역증개단체의 설립 논의 등 대중국 관계개선을 위한 의도된 시간표를 표면화시키고 있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경제·무역관계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화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말까지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80개 프로젝트에 약 1억불 정도였으나, '88년에는 430개 프로젝트에 약 6억불로 증가 추세에 있고, '89년 6.4 천안문사태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개 프로젝트에 3

억불의 투자계약이 성립되었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88, '89년 2년 사이에 무려 8억불이 증가한 셈이다.

대만기업이 중국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이유는 대만 元貨절상과 노동인력의 부족에 따른 임금인상, 그리고 투자시장의 협소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85~'89년 기간에 대만 원화의 절상폭은 50%를 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의 연평균 임금상승은 12%를 상회하고 있어('89년은 17% 상승) 대만의 수출산업은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타격이 커짐에 따라 중국투자는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밖에도 언어의 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활관습 등이 동일하여 경영상의 애로요인이 없다는 데도 중국투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89년 천안문사건 이후에는 1~2년의 짧은 기간에 원본회수가 가능한 업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대중국 투자상담은 신변상의 보장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안전을 위하여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자회사와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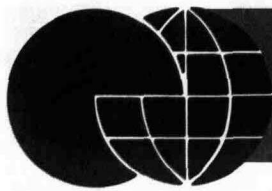
한편 표면상으로는 양국정부는 직접교역을 거부하고 있으나 실제 해상무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대만정부는 해상밀무역이 상당한 두통거리라고 고민하고 있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89년 1년동안 兩岸의 간접교역은 34억 9천불이며,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인적교류는 연간 100만여명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은 새로운 아시아 지역의 평화기류를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정부, 학계 및 일반여론에서는 정부간(G-G BASE) 통일논의를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대만은 중국의 '一國兩制'의 평화통일정책이 6.4 천안문사태와 같은 무력을 수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은 양국정부 상호간의 불신감, 대만의 독립주장, 이등휘 총통이 대만출신이라는 점 등을 연계해서 대만의 대중국 이탈을 경계하고 있는 입장으로 집약된다.

어떤 입장이든간에 중국은 자국현대화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의 유입을 위해 대만과의 순수한 민간경제협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대만 역시 경제적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국가의 안전 및 중국의 개혁에 따른 의식전환을 통하여 평화적 통일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



보수주의 경제정책

임석규 경제기획원 과장 / 미국 후버연구소 파견

화려하게 차려입은 귀부인이 우아한 몸짓으로 유리 술잔에서 샴페인 몇 방울을 가난한 실업자 손에 떨어뜨려 주고 있다. '레이저노믹스'의 보수적 경제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측의 TV 풍자광고 내용이다. 즉 대기업을 우선 성장토록 하여 그 효과를 경제전체에 파급시킨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이론이 사실은 헛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수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주로 형평(equity)을 가볍게 생각하여 대기업 및 부유층을 더욱 유리하게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을 중요시하여 이윤을 좇아 행동하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경제활력의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Burke 등 일부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적 형평은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부작용만 가져올 뿐이라고 반대한다.

이 점에 대해 자유주의(new lib-

eralism)을 말함)의 입장은 상반된다. 경제적 형평을 민주적 질서의 전제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당하고 바람직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성향의 새로운 자유주의는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다. 경제권리장전(Economic Bill of Rights)으로도 불리는 1944년 의회 메시지에서 루즈벨트는 개인의 참다운 자유는 경제적 안정과 자립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료·교육·취업은 물론 독점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활동 등 안정된 경제활동의 기본 조건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당시의 경제불황을 배경으로 각 분야에서 급격한 개혁 정책이 도입되었다.

'뉴딜(New Deal)'로 알려진 이러한 개혁은 미국경제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의 거시정책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었고, 최저임금제·누진세제·사회보장제도 등 복지시책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루즈벨트는 국민의

적극적 호응으로 네차레나 대통령직에 중임되었다.

'뉴딜'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안 자유주의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공인된 규범으로 미국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말에 이르러 기존시책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였다. 즉 지나친 정부개입이 정책과 여론을 주도하는 특정사회계층(Irving Kristol은 New Class라고 하였다)의 이익실현에 기여했을 뿐이라든가, 인종별 고용할당제처럼 지나친 제도화 추진이 초래한 역작용에 대한 지적 등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여러 부문에서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의 등장을 직접 촉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열악한 경제여건이었다. 계속된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달러'화 하락, 두 자리수 물가상승 등은 경제정책에 대한 기존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플레이와 실업의 상충관계(trade-off)를 설명한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 무색해지고, 특히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케인즈'식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를 점차 커지게 하였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미국경제는 보수주의 시대를 맞게 된다.

보수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공급측면 이론(Supply-side economics), 통화주의(Monetarism), 합리적 기대론(Rational expectations)의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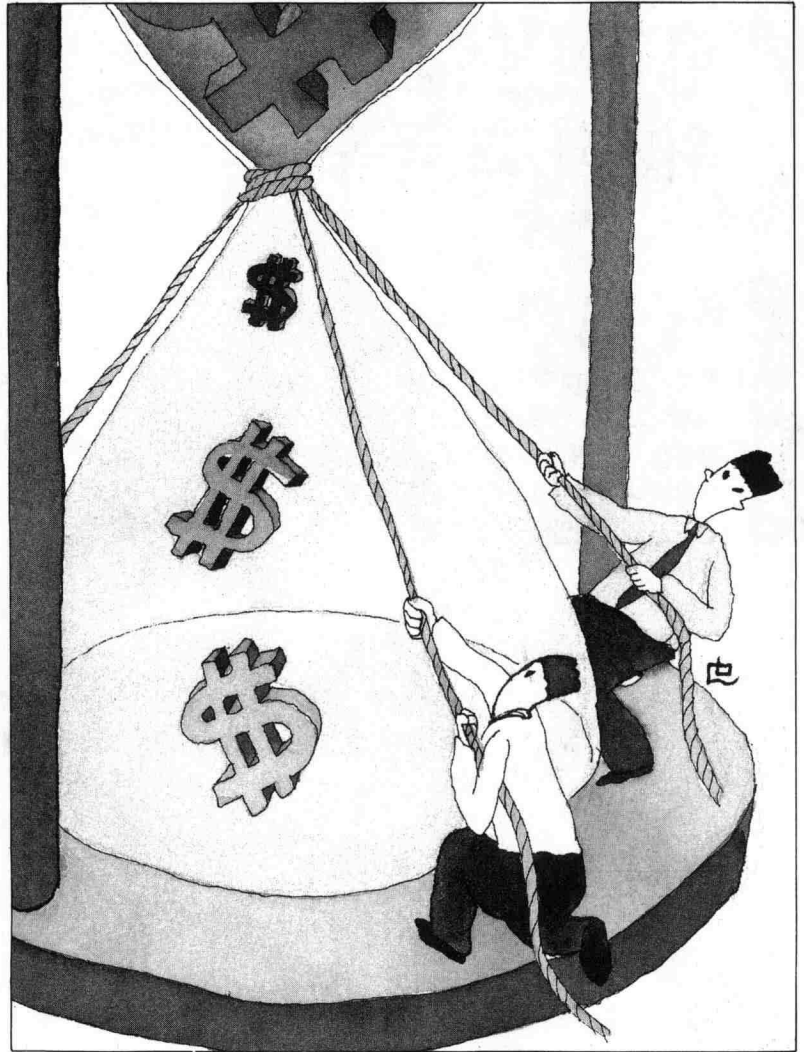
공급측면 이론은 경제활성화 유인으로 조세경감이 필요하며 세율인하가 결과적으로 세수증대를 가져온다고 한다. 통화주의는 정부개입의 효과를 부인하고 통화의 적정수준 관리를 주장하며, 합리적 기대론은 각 개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인해 인위적인 거시정책의 효과는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 세 가지 주장에 공통되는 점은 자유시장의 기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케인즈'식 총수요관리의 효과에 대한 불신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존가치와 사회질서에 대한 철저한 존중 등 전통적 의미에서의 보수성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윤기회(profit opportunity)를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화하려는 보수주의 정책의 특징은 레이건의 경제회복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취임초인 '81년 2월에 발표된 장기경제운영계획은 연방지출억제, 조세경감, 정부규제완화, 통화의 안정적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수적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80년대초 무력해진 케인즈이론 대신 당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던 보수이론의 의지와 성가는 다소 줄어든 느낌이다. '레이저노믹스'에 대한 반대는 방대한 재정적자와 경제적 강자에 유리한 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경제정책을 검토해 보면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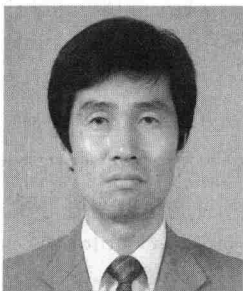


성향과 자유주의 성향을 비교적 순수한 형태로 함께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부규제완화, 민영화 등 보수적 성격과 경제력 집중규제, 형평시책 등 자유주의 성격의 시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다같이 중요한 목표이므로 수단이나 효과의 상충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자유주의적 입장에 의한 정부기능의 강화나 경제개입도 경제의 안정성 유지나 형평의 실현 등에 불가피한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원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극복

한국자본주의체제에 주어진 과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으로 불공정·불균형·불형평의 개선욕구를 수렴해 나가면서 지속적 발전을 통해 선진권으로 진입해 나가는 것이다.



권오규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장

서 언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적지 않은 구조적 문제점들이 배태되어온 점도 흔히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수년간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자기몫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가운데 노사분규가 심화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주의와 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갈등은 우리 경제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서 앞으로 한국자본주의가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라고 하겠다. 그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수많은 구조적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온 반면 체제변혁에 실패할 경우 경제발전이 정체되고 몰락한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변화

경제발전사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선진국이 된 어떠한 나라도 하나의 고정된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해 간 예는 없으며 내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끊임없는 수정을 지속함으로써 발전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반면, 경제의 발전단계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왔던 나라들은 결코 발전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던 국가 중에도 마르코스정권하의 필리핀, 팔레미정권하의 이란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제변혁에 실패할 경우 몰락의 길을 걸어갔으며 최근의 소련, 중국, 그리고 동구제국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더이상 체제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자본주의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의 모색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이 대부분 사적으로 소유되고 판매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며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를 대부분 시장과 가격에 의존하는 특성을 갖는다.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여온 자본주의 경제는 대체로 이러한 세가지 공통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는 사회주의체제의 대두로 인해 체제간의 경쟁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모든 체제구성원의 생존과 복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생산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기업의 거대화 현상 및 생산요소시장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증대라는 여건의 변화는 자본주의체제의 골격에 여러가지 제한과 한계를 가하게 되는 주요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복지자본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거대기업의 존재는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과 함께 기업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이들의 방대한 고용인원 등으로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본주의발전의 필연적 산물인 동시에 주된 원동력이었으나 소수 거대기업의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결국 국가를 자신의 이해에 종속시키고 나아가 자본주의발전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낳게 되었다.

반면 이에 대항하는 노동조합 역시 많은 피고용자를 포괄하고 농민이나 자영업 종사자들까지도 각기 전문적 조합조직을 형성하여 집단적 교섭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국가들이 대중사회로 변모하면서 일전 민주화로 일컫는 대중의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성향이 사회전반에 풍미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자취를 감추게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나친 욕구 체계는 경제체제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나아가 욕구충족의 원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¹⁾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많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의 자유방임과 사유재산, 그리고 자유기업주의에 제한을 가하면서 끊임없는 체제수정의 과정을 걸어왔다.

예를 들어서 민족국가간에 경쟁이 치열하였던 2차대전 이전에는 많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직 미흡함으로 인하여 자유방임과 국가우선주의가 강조되었고, 노동자와 극빈계층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와 파시스트정권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 정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자원의 배분이 민주정치체제의 발전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유도됨으로써 오히려 노동자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용인하고 그 정치적 목표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빈민, 농민과 기타 저생산성부문을 대표하는

집단에게도 유사한 성향이 나타남으로써 자본주의체제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 즉, 민주정치체제가 발전하고 합리성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받아들여지게 됨에 따라 기업, 노동자단체, 정부간에 정치경제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자가 상대의 목적을 이해하고 용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체제가 혁명으로 붕괴될 수 없는 안정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²⁾

그러나 모든 자본주의국가가 이러한 체제변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하고 아직도 일부에 권력이 편재된 자본주의체제는 마르크스하의 필리핀의 경우처럼 그 안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오늘날 체제가 위협받는 대부분의 자본주의사회가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서 이와 같은 균형적 제도발전이 무시된 국가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본주의의 체제변화를 이룩해 나간 국가 중에도 그다지 성공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있다. 남미제국의 평등지향적 체제변화와 스웨덴의 사회주의지향적 체제변화가 그 예이다. 먼저 평등지향적 체제변화를 살펴보면 페루·아르헨티나·칠레 등 남미국가, 50~60년대의 인도,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집권 초기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대개 이러한 평등지향적 체제변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가 취한 전략의 공통적인 특징은 평등과 복지를 다른 어떤 정권목표보다 우선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이들 대부분은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의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갈등구조의 심화라는 반복지사회로의 길을 착실히 걸어갔다는 점이다. 그 과정을 보면 소외계층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출을 경제능력 이상으로 절제없이 추진함으로써 물가상승과 실업률의 증대, 국제수지 적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예외없이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경제성장까지 정체됨으로써 빈곤층이 더욱 확대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이런 결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농민·도시영세민 등 이들 국가의 정부가 보호하려던 바로 그 계층의 국민들이었다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³⁾ 그리고 가진 자의 양보를 유도하는 제도개혁의 부재는 자본의 해외도피, 실물투기의 만연으로 이어짐으로써 사회적 갈등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라 소외계층의 복지지출 확대요구는 더욱 거세어졌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이들 국가의 정책이 경제원리를 어기는 왜곡된 가격구조를 배태하고 이것이 결국 경제의

1) 박봉환, 『현대자본주의』, (중보판, 서울 1990년).

2) 윤석범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울, 세경사, 1989년).

3) Dornbusch, R. and S. Edwards, *The Macroeconomics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세계은행, 1989년).

효율과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며 나아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다음 단계에 더 큰 복지지출의 확대에 따른 나선형 인플레이션구조를 자리잡히게 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변화가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기 어려운 또다른 예로는 보다 사회주의지향적인 체제로의 변화이다. 물론 최근 동구의 몰락에서 보듯이 고전적 사회주의체제는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붕괴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다 사회주의적인 체제변화는 정부의 비중이 높은, 다시 말해 높은 세금과 이를 바탕으로 높은 복지지출을 지향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스웨덴이다. 흔히 스웨덴은 선진복지자본주의의 모델로서 지칭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나친 정부부문의 확대에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스웨덴이 맞고 있는 위기는 엄청나게 높은 세금, 내리막길을 걸어온 투자, 저조한 성장률, 그리고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 나라 경제는 수십년간 몸살을 앓아 왔다.

치솟는 인플레이와 잦은 파업이 시달리다 못한 스웨덴정부는 '90년 2월에 연간 파업금지 및 임금·물가·배당금·부동산임차료·지방세 동결을 골자로 한 긴급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론의 비난에 따라 채택되지 못하였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세금삭감, 금융규제완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 바른 경제처방은 사장되고 말았다. 오늘날 스웨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복지천국'의 신화이고 이 신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광범위한 보조금체계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저축은 사라지고 투자는 해외로 빠져나간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게 되다 보니 각종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고 가난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가 그 변혁을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변혁을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이상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래서는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부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많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경우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굳건히 자리잡고 이것이 자원 배분과정에서 각계의 이해를 충분히 조절하는 장치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노동자·농민 등 소위 성장의 혜택을 덜 누린 계층이 과도한 욕구를 자제함으로써 기업인·노동자·정부간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고 본다. 반면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예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는 최소한도의 필요조건은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권위주의체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해조정장치의 정착이 미흡할 경우 정부의

역할은 연성화되고 결국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 채택될 우려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평등지향적이거나 사회주의라고 할만큼의 지나친 복지지향적 체제변화는 결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효율 위주의 경제체제는 당연히 형평과의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이나 경제발전단계에 비추어 지나친 복지지향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20세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후발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부상하는데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9% 수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신흥공업국군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으며 대만·싱가폴·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신고전파적 입장에서 한국경제의 실적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은 정부, 대다수 학계 및 국제기구 등이 취하고 있으며, 후자의 입장은 중속이론 지지자, 사회학적 입장, 비판적 입장에서는 비주류학자, 운동권 등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신고전파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경제는 그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양적인 팽창은 물론 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국제적 시각에서 여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때 성장·분배 양측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공의 동기는 자연적 조건, 문화적 배경 등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각 경제주체의 행태와 대외여건면에서 찾아진다. 먼저 각 경제주체의 행태면에서는 우선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적절한 개발전략의 선택(대외지향적 불균형 개발전략)이 중요하였으며 이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었다. 노동력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훈련이 잘 되었으며 일에 임하는 자세가 확립된(disciplined) 노동자가 풍부하였고, 기업측면에서는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노력을 병행하였고 특히 상대적으로 희소자원이었던 경영이라는 요소가 기업집중과 대기업위

주의 발전전략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60~'70년대의 개발기간 동안 세계무역환경이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물결을 다른 개도국보다 먼저 활용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 부족한 투자재원과 기술을 외자 도입에 의한 해외저축 및 외국기술도입에 상당량 의존할 수 있었던 점도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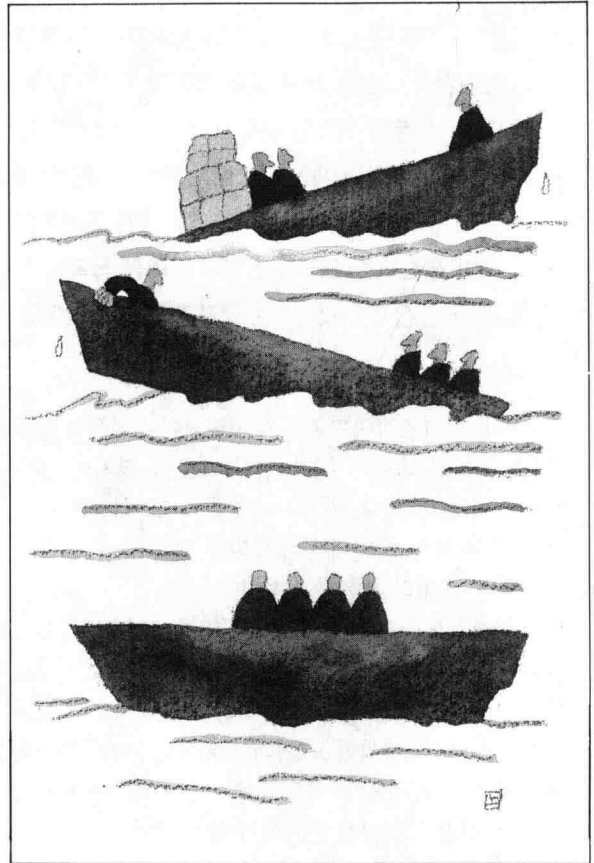
그러나 비판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신고전 파적인 실증적인 측면만으로 분석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불균형·불공정·불형평을 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압축성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불균형구조로 파악되기도 한다.⁴⁾ 농업과 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조립산업과 부품산업 등의 파행적 성장은 거시적인 경제성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부문간 발전격차를 초래함으로써 보다 높은 발전단계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며 소득계층간,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노사간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그들간의 갈등구조를 심화시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마모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과 육성지원정책은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에 따른 기업조직의 관료화는 조직내부의 비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두가지 시각을 종합해 볼 때 한국경제의 발전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했던 패러다임이 동시에 불균형과 불공정·불형평을 가져왔고 이제 이러한 역기능이 종래의 패러다임에 의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에 대한 비판론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자본주의 체제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는 앞에서 언급된 한국경제를 보는 두가지 시각에서 출발한다. 즉, 첫째 시각에서 종래 신고전파적 경제학에서 본 한국경제발전의 성과를 가져왔던 패러다임이 더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둘째 시각에서 그것이 초래한 문제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은 이제 더이상 한국경제에 알맞은 말이 아니다.

한국의 임금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의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야근·특근을 불사하고 오로지 일에 매달려왔던 모습을 이제는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불량률이 급증하고 수출클레임이 증가하는 것은 바로 노동윤리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교우



위가 비교적 저급기술부문에 있었고 이들 부문은 남이 개발하는 것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분야이나 이제 비교우위가 보다 고도기술집약적인 부분으로 옮겨감에 따라 외국기술의 활용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습득과 발전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며 더구나 기술보호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국제경제사회 여건에 비추어 기술의 걸림돌이 한국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발전전략도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가족중심의 경영체제, 조직의 관료주의화, 정부에의 지나친 의존 등은 대표적인 비효율의 예이다. 기업규모 자체가 큰 것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그 행태가 기술개발, 경영효율화, 전문화, 산업평화를 지향하기 보다 문어발식 확장,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 부동산투기 등에 치우치게 될 때에는 문제가 야기 된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체제 아래서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함으로써 일시불란한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민주화된 경제체제 아래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각계의 목소리가

4) 조 순, 『한국경제발전 40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8년).

한국자본주의체제는 그 발전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처해 있다. 과거의 여러 위기는 대부분 외적인 것이었으나 현재의 위기는 대부분 내부에서 파생된 것으로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국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커지고 이를 수렴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일천한 민주화 경험 속에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물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권위주의체제에 대신하는 민주체제의 질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정책은 여론에 따라 부유하기 쉽다.

또한 국제적으로 볼 때 보호주의의 만연과 시장개방압력의 가중,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품생산의 지구화 현상 및 라이프사이클의 축소, 블록경제의 확산, 선진국의 보호주의와 시장개방압력 등 과거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던 시대에 있어 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향유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자본주의는 이상과 같은 종래의 발전을 가져왔던 패러다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발전전략이 잉태한 수많은 불균형과 모순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장치의 마련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불균형·불형평·불공정에서 오는 비효율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과제와 발전방향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본주의 체제는 선진의 산업력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나 사회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의 선진복지국가들은 바로 그 복지제도 때문에 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개념은 국민이 고르게 잘 살면서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완벽하게 이러한 이상을 실현한 국가가 지구상에 아직 출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이상에 그나마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것이 서구 선진복지국가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자본주의체제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한국형 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라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가 아직도 중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인당 소득이 현재의 두배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저성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방식에 의해 달성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불균형·불형평·불공정의 개선요구가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하며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달성됨으로써 사회의 갈등구조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목표는 일견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성장잠재력의 충분한 발현은 평등때문에 성장과 효율이 지나치게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면이 있다. 반면 갈등구조 해소 필요성은 성장에 치우치다가 한국자본주의체제의 위기가 초래된 근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근원처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분배, 분배를 위한 성장은 상호보완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효율과 형평의 조화점을 찾는 일이 과제라고 하겠다.

여기서 한국자본주의가 지향해야 될 발전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사는 층의 양보를 가져오는 제도의 개혁과 이를 바탕으로 소외계층의 지나친 욕구분출을 자제시키는 설득 노력을 통해 복지지출 및 복지제도를 경제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가진자의 양보'와 '덜가진자의 자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허쉬만(Hirschman)의 터널효과(Tunnel effect)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는 내부에는 차선이 1개 뿐이고 외부입구까지는 차선이 2개인 터널을 상정하였다. 자동차들이 터널을 통과하는 속도(경제성장률)를 높이기 위해 교통정리인(정부 또는 넓게는 경제체제)이 한 차선을 막고 다른 차선을 우선 통과시킨다고 가정한다(불균형개발 전략-공업과 농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립산업과 부품소재산업 등). 이때 처음에는 차들이 잘 빠지지 않는 차선(덜 가진자,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서 차들이 잘 빠지는 차선(가진자,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계층)을 보고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나, 기다리는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끼어들기(각계의 자기뚝 확보경쟁)가 시작된다. 그 결과 터널통과 속도는 하락(경제성장률의 하락)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의 접촉사고 내지 대규모의 충돌사고(대표적인 사례가 노사분

규)가 발생한다.

여기서 교통정리인의 절대적인 권위(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두 차선의 자율적인 조정능력이 향상(민주화의 진전)되어야만 터널 통과속도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밀려오는 차들(인구의 증가,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의 기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차선의 자율적인 조정능력이란 곧 잘 빠지는 차선의 양보('가진자의 양보')와 끼어들기의 자제('덜 가진자의 자제')이며 그것을 유도하는 전략이야말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가진자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토지공개념의 확대, 세제개편, 경제력집중완화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기득권의 축소에서 오는 일종의 경제위축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여 그들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수단, 예를 들면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정립,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 과학기술의 진흥, 국제환경변화를 극복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마인드의 위축을 없애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덜 가진자의 자제'를 유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근로자 주택공급의 확충, 농업정책의 개선, 공해, 교통, 교육 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제정의 적극적인 확충노력을 바탕으로 각종公私가적인상의 자제, 복지지출 확대욕구의 자제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사회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 노동자는 체제위기에 적응하는 윤리의식을 확립함과 동시에 입법부를 포함한 정부는 민간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민주주의의 남용과 과잉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연성화되기보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립된 정책을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 어

한국자본주의체제는 그 발전과정에 있어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 민주화가 확산되면서 종래의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룰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과거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던 많은 요소들이 그 장점을 상실하고 단점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과 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어 특히 한국과 같은 소규모개방경제로서는 보다 긴밀한 국제협조관계가 유지

되지 않고는 무역을 통한 순탄한 발전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 속에서 한국자본주의체제에 주어진 과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으로 불공정·불균형·불형평의 개선욕구를 수렴해 나가면서 지속적 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는 종래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성하기는 어렵다. 경제발전사상, 그리고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를 막론하고 고정된 하나의 체제로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간 예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의 발전단계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던 나라들은 결코 발전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

한국자본주의체제는 이제 그 변혁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경제활력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진복지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길이다. 만일 우리 경제능력에 맞지 않게 복지와 형평을 추구할 경우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복지병적 현상으로 경제활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같이 아직도 중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효율을 지나치게 앞세워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문제해결에 소홀할 경우 결코 계층간·산업간·지역간 갈등을 극복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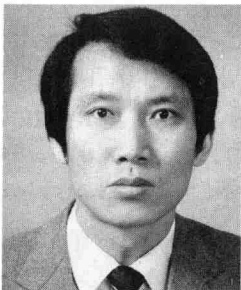
따라서 한국자본주의체제가 발전하기 위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진자의 양보'와 '덜 가진자의 자제' 그리고 정부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자세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는 민주화와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 민주화로 인해 단기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화되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경제위축과 효율의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결국은 자본주의의 최대 강점인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효율이 더욱 증진될 수 있다.

한국자본주의체제는 그 발전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처해 있다. 과거의 여러 위기가 대부분 외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동일한 체제 아래 새로운 경제정책의 모색으로 극복될 수 있었다면 현재의 위기는 대부분 우리 내부에서 파생된 것이고 단순한 경제정책의 변화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그것은 근본적인 한국자본주의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때만이 급세기말 선진국 진입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닐리

귀금속·보석산업 육성, 무엇이 문제인가?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우 관련세제의 개선만으로도 이 산업의 육성기틀 마련이 가능하여 엄청난 외화손실을 막고, 나아가 수출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지속적인 수출증대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중
상공부 생활용품과 사무관

이제 우리는 600억불 이상을 수출하여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GNP 규모도 2,000억불을 상회하여 1인당 국민소득 5,000불 수준이라는 나름대로의 경제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만은 없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최근의 대내외 정세를 보면 우리 경제의 앞길에 험난한 장벽이 눈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은 우리의 수출품에 대해서 각종 장벽을 높이고 국내시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개방압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종래 모방기술로 수출산업을 영위하던 많은 기업들은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인하여 자체 기술개발 없이는 더이상 한걸음도 나아가기 힘든 실정이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몇년간 노사분규라는 홍역을 치루면서 과거 저임금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폭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우리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별 산업별로 문제점을 차분히 분석해 보면, 의외로 문제의 해결이 손쉬운 분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예로서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우 관련세제의 개선만으로도 이 산업의 육성기틀 마련이 가능하여 엄청난 외화손실을 막고, 나아가 수출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지속적인 수출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의 필요성

국내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

귀금속·보석제품에 대한 수요는 소득증가에 대해 매우 탄력적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앞으로 국내 수요가 급증할 것이 자명하다. 1인당 국민소득 5,000불인 현수준에서 국내시장 규모가 1조원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TV, VCR, Audio 등을 망라한 가전제품의 내수시장 규모가 2조 6천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데, 향후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이 될 경우 국내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내 귀금속·보석산업에 대한 적절한 육성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밀수 등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내수시장이 앞으로 수입이나 밀수에 의한 외제품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을 우려가 크다.



귀금속·보석제품은 여타 상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1% 내외에 불과하다.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서 육성 가능성

귀금속·보석제품은 여타 상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1% 내외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세계 등에서 정부가 적절한 육성책을 실시할 경우 앞으로 수출산업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선진국의 수입규제나 통상마찰 등을 고려할 때, 악기·가방·낙시대·가발·신발 등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인 생활용품에 있어서는 더이상의 수출증대는 물론 현상유지도 용이하지가 않다.

그러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0.1% 내외에 불과한 귀금속·보석류와 같은 상품은 제도상의 몇가지 문제점만 개선하면 새로운 수출유망 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서 급속한 신장이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증대에 기여

귀금속·보석산업은 주된 생산공정이 연마·세공 등으로 숙련된 노동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 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경영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다.

또한 넓은 공장입지나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생산활동이 가능하다는 산업특성을 가지

고 있기에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천부적인 손재주를 고려할 때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분야이며 이 분야에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고용증대 및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이 업종은 장애자들이 기능을 익혀 삶의 원천을 마련하기에 매우 적합한 업종으로서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귀금속·보석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거래규모 및 유통형태

국내에서 생산되는 귀금속·보석류의 원자재는 금·자수정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생산량은 극히 미미한 실정 이므로 귀금속·보석류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제품 역시 많은 양이 밀수로 유입되고 있어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정확한 거래규모에 대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다. 다만 귀금속·보석류의 사용용도에 비추어 연간 결혼예물 수요(70%), 기타 용도에 사용되는 수요(30%)를 예측하여 총 1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유통형태로서는 이리 귀금속·보석 가공단지 80여개

**세계의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로부터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고 소유하길 원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귀금속·보석에 대한
원자재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전통적으로 금·은세공품을 중심으로
수공업적 생산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업체에서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일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구입경로가 분명치 않은 원자재를 주로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 소매상에 공급하는 종로 일대 판매업체가 500여개 있고, 전국에 산재한 12,000개 이상의 소매상은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과 밀수입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자재를 자체구입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 특소세 면세점인 50만원 이상의 제품은 관세와 높은 특소세(귀금속 20%, 보석류 60%)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수출현황

귀금속·보석류 수출은 이리 귀금속·보석 가공단지에 집단화하여 입주해 있는 80여개 업체가 전담하고 있으며, 연간 수출액은 7천만불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 업체들도 '76년 집단화 이래 저가품의 합성석 생산·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수허용과 더불어 '89년도부터 특소세 면세점이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보다 나은 내수용 제품판매가 가능해지자 종전 합성석 제품 위주로 가공하던 것을 다소 부가가치가 높은 천연석 제품의 가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진일보된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수출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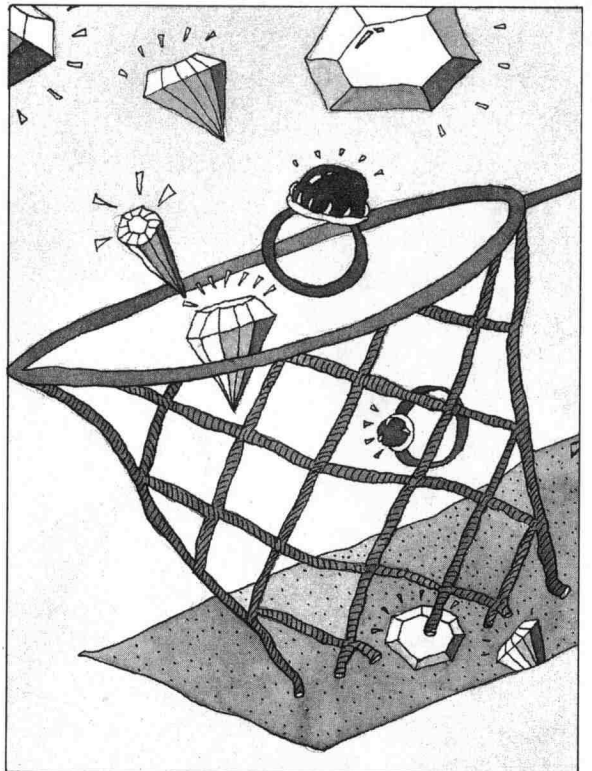
도 같은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귀금속·보석산업 낙후의 근본요인

세계의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로부터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고 소유하길 원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귀금속·보석에 대한 원자재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전통적으로 금·은세공품의 수요에 대한 공급차원에서 수공업적 생산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근래 들어 서구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결혼예물로서 귀금속·보석은 필수품으로서의 위치를 굳혔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여유계층이 장신구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그 수요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다양한 귀금속·보석 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었고, 한푼의 외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귀금속·보석의 소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분야로의 외화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고율의 세제를 통한 소비억제 및 수입제한 정책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귀금속·보석에 대한 국내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이제 연간 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같이 방대한 수요는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 또는 밀수에 의존하고 있다.



〈표 1〉 귀금속·보석류 수출동향

(단위 : 천불, %)

구 분	'87년		'89년		비 고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합 성 석	18,040	35.5	10,973	19.5	주로 천연 석 장착 (70%)
천 연 석	12,138	23.9	13,277	23.6	
귀금속제품	15,460	30.5	23,917	42.5	
기 타	5,131	10.1	8,133	14.4	
계	50,769	100.0	56,300	100.0	

현행 세제상 문제점

1) 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귀금속·보석류는 무역거래 대상상품 중 부피와 무게가 가장 작아 수송이 간편하므로 밀수가 용이한 반면, 특별한 정보없이 적발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어느 특정 국가의 관련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수에 의한 이윤이 크게 되므로 밀수의 성행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금분위 화폐 제도하에서 이웃국가간에 수송비의 차이만큼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면 금의 가격이 저가인 국가에서 고가인 국가로 금화가 유입되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송수단이 매우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일본·대만 등에서도 귀금속·보석류에 대한 세금의 부과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우리의 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양속담에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듯이 귀금속·보석제품이라 해서 모두 호화 사치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귀금속·보석제품은 종류와 품질, 크기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하여 개당 단지 몇백원에 불과한 합성석 제품에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제품까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대중소비계층의 수요형태가 고가품으로 이전된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국민소득 수준이 아주 빈약할 때는 당장 먹고 입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어느 수준에 올라서면 장신구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수요로 하는 상품이라면 당연히 필수품이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밀수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비근한 예로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국민이 원하는 상품보다는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품을 우선하여 계획 생산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일반 소비재마저 부족하여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붕괴직전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귀금속·보석제품의 경우 소비억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면 대중소비계층 이상에서 수요로 하는 품목을 정밀분석하여 그 대상을 선별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귀금속·보석제품의 한 가지 특징을 더 든다면 그 재화의 희소성과 영구성으로 인하여 매년 가치가 상승한다는 사실이다. 그 실례로서 다이아몬드 국제가격이 0.5 캐럿

수송수단이 매우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일본·대만 등에서도

귀금속·보석류에 대한 세금의 부과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우리의 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준으로 '73년도에 지수 100이던 것이 근래 들어 200으로 상승되었고, 금의 경우 '73년도에 비하여 '87년도에는 무려 4배의 상승을 가져왔다.

따라서 귀금속·보석제품은 고가일수록 가치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1회 또는 몇년 동안 사용으로 소모되는 일반 소비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내재가치가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가치저장성 재화이다.

그러한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는 국부증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바, '89년도중 귀금속·보석류만 무려 27억불 이상을 수입하여 통상교섭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수입원자재를 가공·수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다.

2) 법 질서 훼손 조장

모든 법은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모든 국민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세법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12,000여개 이상의 귀금속·보석상 대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유입된 물건인지 근원은 잘 알 수는 없으나, 취급하는 상품중 50만원 이상의 특수세부과 대상품은 분명히 바르지 못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이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뗏뗏하지 못한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귀금속·보석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기혼남녀 대부분은 결혼과 동시에 본의건 본의아니건 법을 어기는 경험을 갖게 된다.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여 돈을 버는 것이 보람된 일이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면서 남녀가 주고받는 선물은 성스러워야 할진대, 귀금속·보석을 거래하는 순간부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최소한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만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누구의 잘못때문인가? 지금이라도 관련정책 담당자들은 서둘러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내산업 육성기반 저해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우 수출은 커녕 외제로 방대한 국내시장 태반이 잠식당한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전환을 통하여 귀금속·보석관련세제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특소세 면세점이 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가품의 경우 원자재 관세, 제품에 대한 특소세 및 부가세 등을 합하면 20%~100%의 세부담을 안게 되며, 이렇게 되면 밀수품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50만원 이상의 제품은 사실상 국내생산의 길이 막혀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결혼예물로 흔히 유통되는 다이아몬드 제품의 경우 가장 작은 크기인 0.3캐럿 제품에 대한 국내공급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 결과 보석류로서는 저가품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가공기술조차 확보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고가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밀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저가품인 합성석 및 반귀석 제품 등에 대한 연마기술 등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세제개선이 따른다면 머지않아 국내 가공기술의 진전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밀수품 중 상당부분을 국내생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동 산업의 국내기반 구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나, 국내수요에 대한 공급기반도 갖추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4) 세수확보상의 손실

각종 세제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서 세수확보는 고유의 기능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고율의 특소세 및 관세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에서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밀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세원포착이 어려워 세율만 높여 실제 세수확보는 미미하다는 점이다. 그 예로서 귀금속·보석류의 거래규모를 감안할 때 '89년도 중 동 품목에 대한 특소세 징수실적이 9억여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특소세율 및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귀금속·보석류의 원자재 및 제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된다면 세원추적이 가능하여 현행 부가가치세(10%)만 징수하더라도 동 품목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수는 엄청나게 증가되어 세수확

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관련산업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제개선 방안

귀금속·보석에 적용되는 고율의 특소세 및 관세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앞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소비세 및 관세조정을 통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귀금속·보석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재조정하여야 하겠다.

귀금속·보석제품은 종류와 품질,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하므로 수요층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 대다수가 결혼예물로 사용하는 수준의 제품에 대하여는 면세대상에 우선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가품이라 할지라도 가격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기준에서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정리해 본다면 면세점은 다이아몬드 0.3캐럿 상품 혹은 0.5캐럿 중품가격을 기준한 200만원 선으로 하고,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5%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1천만원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좀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표 2〉 특별소비세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귀금속	20%	0%
보석	60%	200~500만원 미만 : 3% 500~1,000만원미만 : 5% 1,000만원 이상 : 7%
면세점	50만원	200만원

둘째, 귀금속·보석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세점이 상향 조정되거나 세율이 대폭 인하될 경우 밀수품 대신 정식절차에 의한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관세의 조정이 필요하다. 원자재에 대해서는 국내업계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면세로 하고 완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업계의 보호차원에서 국내가공기술의 진전속도에 맞추어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과 같이 수출이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의 육성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귀금속·보석산업은

세제개선만으로도 국내 생산기반 구축과

수출증대가 가능하다

하루빨리 정책의 전환을 통하여

귀금속·보석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맺는말

최근과 같이 우리 수출이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우 수출은 커녕 외제로 방대한 국내시장 태반이 잠식당한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세제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 육성정책만으로 국내생산기반 구축도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증대도 가능한 것을 1인당 국민소득 몇백불대에 구상되었던 정책을 몇천불이 넘어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하루빨리 정책의 전환을 통하여 귀금속·보석 관련세제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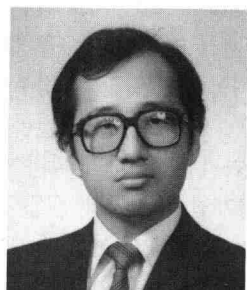
물론 세제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세제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세제문제로 가리워진 크고 작은 기본적인 문제가 모두 나타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작업이 그제서야 시작되는 셈이다. 즉 기술향상 문제, 원자재 구입문제, 해외시장 개척문제, 국내소비자 보호문제 등 손쓸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0년대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부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현재의 수출경험을 토대로 몇배의 수출을 증가시켜야 하는 일인 바,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분야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련업계에서는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 종합대책의 추진

나라경제
논단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이루고
국내 정보산업을 발전시킨다면
2000년대초에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원식
전산망조정위원회 정보산업담당관

최근 미래 인류사회의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동향의 하나로서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란 말이 유행처럼 많이 거론되고 있다. 토플러(Albin Toffler)는 인류사회발전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일로서 제1의 농업혁명, 제2의 산업혁명에 이어 제3의 정보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도 인류사회를 변혁시키고 있는 주요 동향 10가지 중에서 정보화를 첫째로 꼽고 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기도 한 벨(Daniel Bell)은 산업사회가 성숙되면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한다고 했으며, 드러커(Peter Drucker)는 이미 선진국은 공업사회로부터 지식 중심의 脫비즈니스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는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 정보사회 이후에 창조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주위에서도 이러한 정보화 변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에 개인용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천리안·KETEL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서비스가 다수 제공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도 제품설계에 CAD(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가 이용되고 실험 및 제조설비도 마이크로 컴퓨터 칩을 이용하여 자동화되고 있으며 시장정보 분석·고객관리·회계처리 등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90년부터는 학교에 16비트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학생들간에 컴퓨터 교육이 붐을 이루고 있고, 가정에서도 모니터를 이용하여 방문자를 확인하고 전등과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홈오토메이션이 등장하고 있으며, '90년부터 주민등록과 자동차 등록업무나 구직안내 등이 컴퓨터로 전산처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전자신문·생활정보서비스 등 각종 정보서비스와 함께 위성방송·유선방송 등 새로운 통신방식에 의한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무인공장과 로봇트가 등장하여 행정·보험 등 사회기간적 업무는 대부분 전산에 의존하는 등 세계는 바야흐로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의 의미

정보의 특성

이러한 정보화의 핵심적 개념은 정보(information)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첩보 또는 정보(intelligence)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의되어진 자료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정보사회를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대량으로 유통되는 사회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하여 매우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품이 주로 천연자원의 가공에 의한 물품의 형태로 존재하며 서비스는 인간의 직접적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정보는 인간의 지식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정보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사용에 의하여 가치가 소모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되는 특성이 있다. 정보는 많이 이용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수록 성가 높아지며 또한 새로운 정보가 융합되어 더욱 가치있는 정보가 만들어지게 된다.

정보는 상황과 관련자에 따라 효용이 달라져 객관적으로 일정한 가치의 형성이 어려운 면이 있다. 동일한 정보라도 공급자의 명성이나 수요자의 정보이용능력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보의 제공시기와 제공형태에 따라서도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보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리스크와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한 시장정보는 잘못된 시장참여로 인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막아주며 정확한 제품 기술정보는 제품개발과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보는 또한 인간의 능력을 확대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의 노동으로는 보통 불가능한 정밀가공이나 유전자 조작 등은 이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응용에 의한 컴퓨터 제어에 의해 가능해진다.

정보의 생산은 담당자의 능력과 이용기술에 의하여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및 정보의 질이 크게 좌우되어 정보의 생산에 숙달되어 갈수록 정보의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정보의 질이 높아져 학습곡선(learning curve)의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상품으로서 정보는 최초 생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완성된 정보는 적은 비용으로 대량 복제가 가능하여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평균생산비가 급격한 하향곡선을 나타내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가 매우 크며, 정보는 단순한 자료형태일 때는 가치가 낮으나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많이 융합될수록 새로이 더욱 가치있는 정보가 생산될 수 있어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효과도 또한 매우 크다. 정보의 생산작업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생산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공장이 별도로 필요없게 되며 공장과 사무실의 구분이나 공장노동자와 사무노동자의 구분이 필요없게 된다.

최근의 정보화 확산은 정보의 처리와 전달방식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게 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정보의 전달은 종래 사람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이루어져 정보의 전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적으로 제한되기도 하고 하였으나 최근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위성·전파·전화선 등을 통하여 즉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전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에 의하여 종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량의 정보처리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보의 형태도 종래의 문자·도형 중심으로부터 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정보처리의 양과 형태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정보의 중요성

최근에 와서 정보화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정보는 사실상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역사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고 볼 수 있다. 인류가 언어를 발명한 이래 정보의 교환에 기초하여 문화를 성립, 발전시켜 왔으며 문자가 발명되고 다시 인쇄술의 발명에 이어 최근에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정보의 교환이 신속화·대량화되면서 인류문명의 발달을 촉진시켜 왔다.

어느 면으로는 인류문화의 발달과정을 정보의 생산과 확산과정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정보가 인류문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인류문명이 메소포타미아·나일강·황하유역 등에서 발상되어 점차 아시아·유럽 지역 등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정보의 전달과정에 의한 확산에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신의 정보기술이 본격적으로 경제사회 운영에 응용된다면 경제사회의 전반의 효율과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행정업무에 이용되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에게 공평하고 유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통·전력·통신·가스 등의 서비스를 효율화하여 경제사회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산업에 이용되어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비용을 경감시키며 신제품 개발능력을 높이며 시장대응능력을 높이고 상품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최근 산업사회가 성숙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

정보사회 종합대책은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 투자를 국내 정보산업 육성에 연계하여

정보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루며,

정보화를 무리없이 수용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여 2000년대 초에

선진 민주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란 변화가 오고 있다. 산업혁명은 생산력을 대폭 향상시켜 인류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였다. 종래 농업은 비용체증의 법칙에 의하여 생산성의 향상에는 제약이 있었으나 공장제 대량생산제도는 평균비용곡선이 하향하는 비용체감을 이루어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게 되어 대폭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성숙해져 점차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이에 대하여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찾게 되었다. 수요자의 소비패턴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종래의 표준화된 물개성적인 성향으로부터 개성적이며 다양하고 고도의 가치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도 소품종 대량생산방식보다도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상품과 서비스도 개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패선화하며 소비자 요구향상에 따른 고도의 성능과 아이디어를 갖추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단순화·획일화된 사회로부터 다원화·분권화된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변화는 물질·에너지 등의 천연자원 에 대한 수요보다도 지식·기술 등의 정보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대량의 정보처리와 교환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가 완숙된 사회를 정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주요 요소로서 종래 농업사회에서는 노동과 토지를 들 수 있고, 산업사회에서는 에너지와 기계를 들 수 있으나,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주된 경제적 가치의 창조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보기술의 채택과 정보의 이용확대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되며 산업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정보화 정책의 필요성

한 나라의 국력은 부존된 자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한다. 미국과 소련의 국력은 이에 의하여 일부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일본과 독일의 부강은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일본과 독일은 2차대전시 대부분의 산업 및 사회시설이 파괴되었으나 파괴되지 않은 것은 국민 속에 남아있는 지식과 정보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급속히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와 같이 성숙된 산업 사회 또는 정보사회에서는 국력의 결정요소로서 천연자원이나 인구보다도 국가에 내재된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반면 인적자원은 비교적 풍부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기초로 하여 천연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형태의 산업구조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시에 단순기술에 기초한 조립중심의 산업구조의 구축에 힘써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으며, 1961년도에 62불에 지나지 않았던 1인당 GNP가 1989년에는 4,968불에 이르게 되어 이제는 중진산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후진국의 모습을 벗고 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게 되었다.

1인당 GNP가 증대하면서 임금이 급속히 성장하여 우리나라를 추격해 오고 있는 후진국이나 새로이 정보화에 의하여 생산성이 높아진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 선진국은 기술이전을 꺼리고 기술을 무기화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한마디로 정보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시장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 기술력 향상, 판매력 강화, 효율 증대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자동화·전산화 및 정보의 이용 능력과 인식의 확산 등 정보화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화가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하여 정보화에 많이 뒤져 있는 점은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의 보급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정보화를 위한 기반도 아직 미흡하며 국민의 정보이용에 관한 인식도 미흡한 실정으로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보화의 맹아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정보화는 우리에게 유용한 능력을 부여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능력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큰 폐해가 될 수도 있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고도의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이 잘못 개인의 정보 수집에 이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커진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의 기간구조의 운용이 점차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의존되게 될 것인바, 컴퓨터 정보시스템이 범죄나 재해로 인하여 동작되지 않을 경우 사회에 미치는 장애의 파급효과가 막대해진다.

최근 증권전산시스템의 고장으로 증권거래가 중단되었던 일이나 미국 뉴욕에서 제어 컴퓨터의 고장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던 일 등에서 역기능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촉진과 역기능의 방지를 위하여는 비전의 제시와 투자지원과 함께 법적·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며 정부의 선도적 역할과 이에 따른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보사회 종합대책

범정부적으로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운영과 정보화 관련 정책의 조정을 담당하는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는 '89년 1월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 실무자로 정보사회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수행하였다. '89년 12월, 시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0년 4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0년 9월에는 대통령께 보고하여 정보사회 종합대책을 확정하는 바 있다. 정보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던 터에 범정부적인 정보사회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대책은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 투자를 국내 정보산업 육성에 연계하여 정보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루며, 정보화를 무리없이 수용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여 2000년대 초에 선진 민주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합대책에서는 3개 분야 12개 과제를 미래 정보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정보화 촉진 분야에서는 종래부터 추진하여 오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산업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보화, 정보의 유통과 이용확대를 위한 신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국민의 정보이용 편의를 위한 단말기 보급의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보산업 구조 고도화 분야에서는 정보화를 지원하게 될 정보산업의 육성, 정보산업의 육성의 관건이 될 정보기술연구

개발 확대, 정보통신망의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진흥의 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보화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의 향상과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문화 확산,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위한 정보기술표준화 확대, 정보화를 선도할 정보기술인력 양성, 정보화를 촉진하고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법령정비의 네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12개 과제는 과제별로 주관부처가 지정되어 과제별로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보화는 어느 한개 부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처가 협력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부처간 협조가 계획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이 대책의 추진에는 민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사업으로 선정하여 정기적 심사분석을 시행하고 추진상황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90년부터 2000년까지 이 계획과 관련된 총 투자액은 5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정보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결 론

우리나라는 현재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에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는 경제적 블록화, 공산권의 민주화,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UR협상 등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결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으나 부수적으로 임금상승·환경오염·범죄 증가 등의 역기능이 나타나는 한편 균형성장 및 복지 확대 등 국민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혁이 요청되고 있다. 선진국은 이러한 변혁을 정보화를 기반으로 이루어내었음을 거울삼아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보화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보화는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성·생산성의 향상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이루고 국내 정보산업을 발전시킨다면 2000년대 초에는 반드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